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목 차

01	서론	00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01
	1.1 연구의 배경	001
	1.2 연구의 목적	002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02
	2.1 연구의 범위	002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004
02	이론고찰	007
	1. 범죄예방 개념 및 특성	007
	1.1 개념	007
	1.2 기본원리 및 패러다임	008
	2. 농촌범죄 특성	010
	2.1 농촌사회의 특성	010
	2.2 농촌범죄 결정요인	011
	2.3 농촌범죄 특성 및 범죄두려움	012
	2.4 농촌지역 범죄예방 원리	015
	3. 관련 법 제도 및 사업	018
	4. 관련 연구 분석	020

03

선진사례 분석 023

1. 스코틀랜드 농촌지역 범죄예방	023
1.1 대상지 특성	023
1.2 농촌범죄대응 스코틀랜드 파트너십	026
1.3 스코틀랜드 경찰의 범죄예방전략	031
2. 경남 거창군 북상면 안심마을사업	034
2.1 안심마을사업 개요	034
2.2 대상지 특성	038
2.3 사업내용 및 성과	039
3. 시사점	043

04

충남 농촌 범죄의 특성과 예방정책 현황 046

1. 농촌마을 특성 및 범죄현황	046
1.1 사회적·행정적·물리적 특성	047
1.2 범죄사건	052
1.3 경찰의 농촌마을 범죄양상 인식조사	053
1.4 주민 범죄 의식조사	055
1.5 노인피해자 및 외국인 범죄실태	061
1.6 행정리별 범죄실태	064
2. 농촌마을 범죄예방 추진정책	065
2.1 농산물 절도 예방 정책	065
2.2 고령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	066
2.3 시·군별 농촌 범죄예방 정책	068
3.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현황	071
3.1 조사 및 분석개요	071
3.2 범죄예방 관련 조례	072
3.3 사업추진실태	075

3.4 사업 담당자 의식조사	089
-----------------	-----

4. 종합분석 및 문제점 도출	093
------------------	-----

05

충남 농촌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096

1. 기본방향	097
2. 추진과제	099
2.1 범죄두려움 및 소외계층 고려한 제도 개선	101
2.2 주민_지자체_전문가_경찰의 협력형 협의체 구성	104
2.3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107

06

결론 및 정책제언 117

■ 참고문헌	120
--------	-----

■ 부록	122
------	-----

1. 경찰 대상 워크숍 내용	122
2.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내용	127
3. 농촌마을 주민 인터뷰조사 내용	137
4.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법시설 설치 지원 조례」에서 방법시설 설치 지원 대상 평가지표	146

표목차

[표 2-1] CPTED 주요개념과 이론	007
[표 2-2] 농촌지역의 범죄 결정요인	012
[표 2-3] 지역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012
[표 2-4] 농촌범죄 특성 및 범죄두려움 특징	014
[표 2-5] CPTED 실천전략	016
[표 2-6] 도농복합지역 CPTED 실천전략	017
[표 2-7] CPTED 관련 법령 현황	018
[표 2-8] 중앙부처 범죄예방 관련 사업 추진현황	019
[표 2-9] 농촌 범죄예방 관련 선행연구	021

[표 3-1] 농촌범죄대응 스코틀랜드 파트너십(SPARC)의 구성	026
[표 3-2] 농업용 장비 및 농작물 안전 과제	027
[표 3-3] 말 산업 안전 과제	028
[표 3-4] 폐기물 제로 과제	028
[표 3-5] SPARC의 연료 절도 방지 과제	029
[표 3-6] 문화재 범죄 방지 과제	030
[표 3-7] 가축류 및 육가공류 범죄 방지 과제	030
[표 3-8] 밀렵 범죄 방지 과제	031
[표 3-9] 스코틀랜드 경찰의 농촌지역 범죄예방 전략	032
[표 3-10] 안심마을사업 지원 지정 연계기관	035
[표 3-11] 영역별 안심마을이 실시하여야 할 사업	036
[표 3-12] 북상면 안심마을사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041
[표 3-13] 북상면 안심마을사업 시행 후 분야별 안전체감도 변화	042

[표 4-1] 충남 농촌마을의 인구 특성	047
[표 4-2] 공간구조 특성 분석 지표 및 분석방법	051
[표 4-3] 금산군 농촌마을 공간구조 특성	051
[표 4-4] 충남 농촌마을 범죄사건	052
[표 4-5] 충남 농촌마을 범죄양상	053
[표 4-6] 충남 시·군별 농촌마을 범죄양상	054
[표 4-7] 대상 마을현황	055
[표 4-8]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마을별 위험 및 두려움 요소, 범죄양상	057
[표 4-9] 주민의 마을별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 해소 방안	057
[표 4-10] 충남 노인피해자 대상 5대 범죄 현황	061
[표 4-11] 충남 15개 시·군 외국인 비율 순위(만명당, 2018년 기준)	063
[표 4-12] 충남 15개 시·군 외국인 범죄발생률(만 명당, 2018년 기준)	063
[표 4-13]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강화계획 주요 추진내용	066
[표 4-14] 충남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중 범죄예방 관련 주요내용	068
[표 4-15] 충남 시·군 경찰서별 농촌지역 범죄예방 추진정책(기사검색)	069
[표 4-16] 충남 시·군 경찰서별 농촌지역 범죄예방 추진정책(경찰 대상 워크숍 및 자료 분석)	070
[표 4-17] 조사개요	071
[표 4-18] 충청남도 및 공주/부여 범죄예방 조례 구성 및 주요내용	073
[표 4-19] 충남 13개 시·군 범죄예방 조례 구성	074
[표 4-20]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개요	075
[표 4-21]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현황	076
[표 4-22]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위험요소	079
[표 4-23] 사업추진 현황(지자체 사업 담당자)	090
[표 4-24] 사업 추진과정 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지자체 사업 담당자)	090

[표 4-25] 농촌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지자체 사업 담당자) 091

[표 4-26] 사업추진 현황(충남도청 사업 담당자) 092

[표 4-27] 농촌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충남도청 사업 담당자)..... 092

[표 5-1]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선(안) 102

[표 5-2]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선정 기준 109

[표 5-3]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제안 113

그림목차

[그림 1-1] 본 연구에서의 농촌마을 003

[그림 1-2] 연구체계도 006

[그림 2-1] 전통적 접근과 CPTED적 접근의 차이..... 008

[그림 2-2] CPTED의 기본원리 009

[그림 2-3] 도농복합지역, 도시 및 농촌의 5대 범죄발생 비교 013

[그림 3-1] 스코틀랜드 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 024

[그림 3-2] 스코틀랜드 주민의 범죄피해 경험 정도 025

[그림 3-3] 안심마을사업 추진체계 038

[그림 3-4] 북상면 안심마을사업 전략 039

[그림 4-1] 충남 농촌마을 특성 및 범죄현황 분석 프로세스 046

[그림 4-2] 충남 농촌마을 고령화 비율 048

[그림 4-3] 충남 읍·면·동별 독거노인의 공간적 분포 049

[그림 4-4] 충남 읍·면·동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 050

[그림 4-5] 충남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서 담당자 워크숍 054

[그림 4-6] A 마을 현황 058

[그림 4-7] B 마을 현황 059

[그림 4-8] C 마을 현황 060

[그림 4-9] 충남 시·군별 노인피해자 5대 범죄 발생 건수 추이(2016년~2018년) 062

[그림 4-10] 충남 시·군별 외국인 5대 범죄 발생 건수 추이(2016년~2018년) 063

[그림 4-11] 충남 3개 군 행정리별 범죄실태 분석내용 064

[그림 4-12] 충남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067

[그림 4-13]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대상지 077

[그림 4-14]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단계적 사업전략 082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연구의 배경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부처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 충남에서도 범죄예방 관련 사업 및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범죄예방은 물리적 환경개선 관점에 치우쳐, 시설의 관리 및 인적 물적 자원 등의 한계, 형식적인 시민참여나 민간자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보다 조명이나 벽화 등 단편적인 시설물 위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이마저도 대부분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농복합지역의 성격을 가지면서 농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충남에서는 이를 적용하기에 한계¹⁾가 있다. 농촌마을은 넓은 지역에 산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범죄예방시설 혹은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고령화 및 인구감소의 사회적 여건이 범죄를 증가시킨다.

농촌진흥청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안전/기초생활여건/환경·경관 3개 영역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2018년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CCTV설치 등에 따른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44.3%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와 비슷한 범죄발생건수 및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으며²⁾, 이러한 범죄두려움 및 범죄피해 예방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발표하고 있는 7개의 지역안전지수³⁾ 중 범죄⁴⁾에 해당되는 지수가 충남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등급으로 보통수준이지만, 15개 시·군별로 살펴보면 4등급, 5등급으로 취약 또는 매우 취약한 곳도 있다. 또한 천안, 아산, 서산, 계룡, 당진을 제외한 지자체에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군 단위에서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2016, 심재현)⁵⁾. 이러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방어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

1) 농촌지역에서의 범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범죄도 고려해야 하며,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농촌지역의 범죄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2) 인구 1,000명당 도시는 39.5건, 농촌은 35.6건의 범죄가 발생(2005년)
3)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의 7개 분야
4) 살인, 강도, 폭력, 절도, 성폭력의 5대 주요범죄
5) 충남의 65세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22만 3천명(11.9%), 2010년 30만 9천명(14.9%), 2017년 37만 6천명(15.5%)임

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 강도,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다(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역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며,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점차 심각해지는 만큼 이를 위한 범죄예방 방안이 절실하다 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면서, 공동체 및 커뮤니티, 문화 등 사회적·문화적 환경 관점에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농촌마을의 경우 주거공간이면서 생산공간,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 독거노인 등 도시지역에서 주로 추진되었던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인문 사회적·행정적·경제적·물리적 특성이 다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낮은 인구밀도, 공동체 활동, 생산구조, 지리적 특성 등을 포함한 충남 농촌마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면서 도시지역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농촌마을의 범죄⁶⁾를 예방할 수 있는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15개 시·군 농촌지역 중 행정리

<행정구역 상 구분에서의 농촌지역⁷⁾>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의 지역,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농촌이라 한다.

6)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주로 정착함으로써 범죄기회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농촌에서는, 이들의 취약한 범죄 방어능력을 이용한 사기, 절도 등이 꾸준히 증가(농촌의 특징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범죄피해 유형인 농축산물 절도의 경우 2004년 1589건, 2005년 2274건, 2006년 2396건, 2007년 2560건, 2008년 2759건, 2009년 2653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허경미, 2011)

7) 충남연구원(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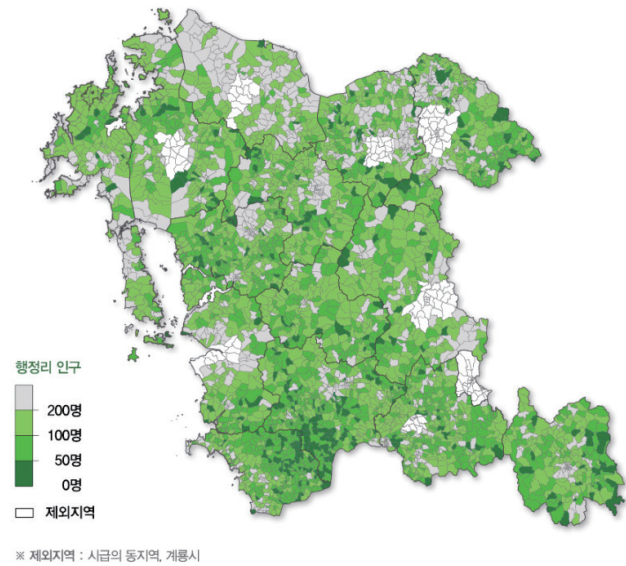
도농복합형태의 시 또한 농촌으로 보는데, 지방자치법에서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은 동,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둘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내 시의 읍·면 역시 농촌에 포함된다. 이는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포괄보조사업에 따른 행정구역 구분에서도 알 수 있다. 도농복합도시의 시에 있는 읍·면 및 군 지역이 일반농산어촌지역에 해당하도록 되어 있다. 즉, 농촌은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용도지역 구분에서의 농촌지역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구분하고 있으며, 농촌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비도시지역으로 통칭한다. 즉, 비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일컫는다.

<충남의 행정리⁹⁾>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행정의 공간적 위계인 시·군, 읍·면·동, 법정리, 행정리 위계에서 행정리를 대상으로 한다. 충남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있는 충남 정책지도 자료에 의하면 충남의 전체 행정리는 4,242개소(계룡시 제외)이다.



▲ [그림 1-1] 본 연구에서의 농촌마을

8) 충남연구원(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9) 충남연구원(2017), 충남 자연마을과 행정리 연구 : 마을 현재 이야기, 「충남 정책지도」

2) 내용적 범위

- 범죄예방 개념 및 특성 분석
: 선행연구 및 관련 법 제도 현황 분석
- 농촌마을 범죄예방 선진사례 분석
: 문헌조사
- 충남 농촌마을 범죄 특성 분석
: 인터뷰조사, 자료검색, 실태조사
-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현황 분석
: 문헌조사, 실태조사
-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
: 사업 적용 추진체계 및 실행방안 제시

2.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범죄예방 개념 및 특성 분석

- 1단계 : 범죄예방 특성 분석(문헌분석)
 - 범죄예방 개념 정의
- 2단계 : 농촌범죄 특성(문헌분석)
 - 농촌마을의 특성과 범죄 결정요인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 차이 분석
 - 농촌마을 범죄예방 원리
- 3단계 : 관련 법 제도 분석(문헌분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건축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등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 4단계 : 선행연구 분석(문헌분석)

2) 국내외 농촌마을 범죄예방 선진사례 분석

- 스코틀랜드 농촌지역 범죄예방(문헌분석)
 - 농촌범죄대응 전략 및 추진과제, 추진방식 등
- 경남 거창군 북상면 안심마을사업(문헌분석)
 - 사업개요 및 내용, 추진성과 등

3) 충남 농촌마을 범죄 특성 및 범죄예방 사업 추진현황 분석

- 1단계 : 농촌마을 범죄 특성 및 추진 정책(인터뷰조사, 자료분석)
 - 충남 농촌마을의 사회적·행정적·물리적 특성
 - 농촌마을 범죄사건 기사 검색
 - 충남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서 담당자 대상 인터뷰조사
 - 충남 농촌마을 주민 대상 인터뷰조사
- 2단계 :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실태분석(현장조사, 인터뷰조사)
 -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 관련 조례 분석
 - 사업 세부 추진내용 및 사후관리 현황 조사, 분석
 -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4)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제시

- 1단계 :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추진 기본방향 설정(자문회의)
 - 농촌마을 범죄 특성 및 문제점 분석
 - 국내외 농촌 범죄예방 선진 사례의 시사점 분석
 - 충남 농촌마을 범죄특성 및 사업추진 실태 분석
 - 자문회의 토대로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방안 도출
- 2단계 :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제시
 - 농촌마을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을 위한 제도정비
 -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제시
 - 주체별 역할 제시(충남도 및 시·군, 경찰, 전문가, 주민 등)



▲ [그림 1-2] 연구체계도

II. 이론고찰

1. 범죄예방 개념 및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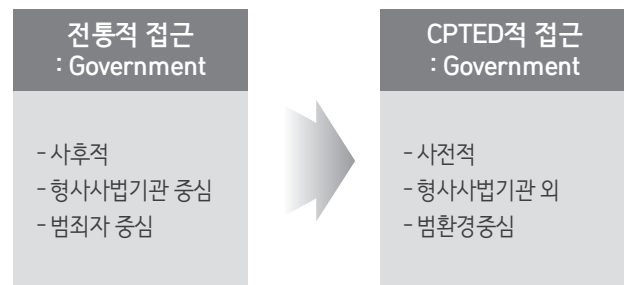
1.1 개념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라는 용어는 1971년 Jeffery가 발간한 저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제프리(Jeffery, R.)에 의하면 CPTED란 “건조환경에 대한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발생수준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범죄발생의 원인과 대안을 공간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환경범죄학적 사고의 산물로 협의의 CPTED 개념이다. 한편 제이콥스(Jacobs, J.)는 1961년 「미국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이라는 저서를 통해 잘못된 도시 재개발이 어떻게 범죄문제를 심각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며, CPTED 이론의 근간을 제시해주었다. 제이콥스는 “거리의 눈(eye of street)”이라는 개념과 토지의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즉, 특정 지역에 주거·상업·사무시설 등이 서로 어울리는 것)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뉴먼(Newman, O.)은 건축가로서 제이콥스의 아이디어를 공동주거단지에 좀 더 체계적·경험적으로 발전시켰으며, 1972년 “방어공간(Defensible Space)”이라는 저서를 통해 공간을 개인공간, 준개인공간, 준공공공간, 공공공간의 4개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준개인공간과 준공공공간의 범죄발생 위험성이 높음에 주목하여 이들 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는 CPTED적 범죄예방정책을 제안하였다(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년대에 들어 크로우(Crowe, T.)는 기존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CPTED 실천전략으로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 등 6가지 기본원리를 제시하였다.

▼ [표 2-1] CPTED 주요개념과 이론

학자	주요개념
제프리(Jeffery, R.)	- 적절한 디자인과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범죄 발생 및 두려움 감소, 삶의 질 향상
제이콥스(Jacobs, J.)	- 자연감시, 토지의 다양한 용도로의 사용을 통해 범죄예방 및 삶의 질 향상
뉴먼(Newman, O.)	- 공간은 4개로 분류가 가능하며, 준개인공간과 준공공공간의 범죄발생 위험성 높음에 주목하여 공간의 영역성 강화
크로우(Crowe, T.)	-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관리의 6가지 기본원리 제시

기존과 현재의 CPTED 접근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면, 거버먼트, 즉 범죄문제를 형사사법기관 중심의 책임과 권한 구조에서 접근했던 전통적 접근방식과는 달리, CPTED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협력체계 속에서 공동으로 관리 및 해결해보자는 개념이 담겨있으며, 이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CPTED 개념은 영미를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발전되어왔으며, 유럽 각국은 물론 일본, 호주 등도 이에 대한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출처 : 셉테드 이론과 실무(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그림 2-1] 전통적 접근과 CPTED적 접근의 차이

1.2 기본원리¹⁰⁾ 및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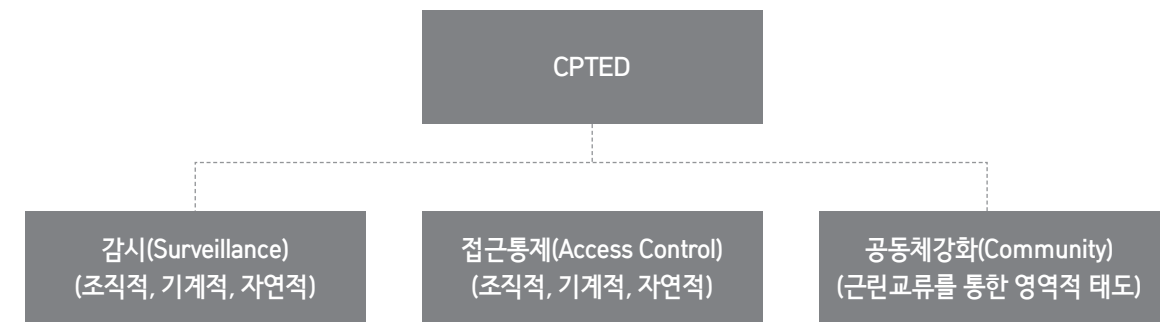
CPTED의 개념을 뒷받침하는 기본원리는 “감시(surveillance)와 접근통제(access control), 공동체 강화(community building)” 등 3요소로 정리되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시와 접근통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아닌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한다.

“감시(surveillance)”의 원리는 공간 및 시설배치와 디자인을 통해서 잠정적인 범죄자와 피해자를 감시범위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자는 감시가 있는 곳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기 힘들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범죄자에게 검거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키고, 피해자에게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찰 및 경비원 순찰(조직적 감시), 가로등과 CCTV 설치(기계적 감시), 창문 및 출입구(자연적 감시)를 통한 감시가 있다.

“접근통제(access control)”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의 접근을 봉쇄하여 적법한 사용자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개념이다. 경비원(조직적 접근통제),

시건장치나 보안시설(기계적 접근통제), 공간배치나 출입구 개수 또는 위치(자연적 접근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공동체 강화(community building)”는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를 뒷받침하는 원리로서 지역주민의 영역성에 기반을 두며,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리적 디자인에 의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한 소유권이나 책임의식 등을 통해서 범죄자의 행위는 위축시키면서도 거주자들에게는 주변에 대한 관심과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사용자 참여에 기반을 둔 범죄예방 개념이기 때문이다.



▲ [그림 2-2] CPTED의 기본원리

이와 같은 “공동체 강화”의 개념이 최근에 더욱 중요시하게 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PTED는 “자연적(natural)”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인위적 및 기술적 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거주자들이 범죄문제를 의식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특정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높이고, 외부침입자에게는 범죄실행에 대한 위험성과 비용을 높여주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에는 물리적 환경 개선을 중시하는 1세대 CPTED의 한계를 지적하며 1세대의 CPTED의 하드웨어적 접근과 2세대 CPTED의 소프트웨어적 접근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1세대 CPTED에서는 행정기관 주도로 범죄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선된 환경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나 사회문화적인 특징 분석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해, 2세대 CPTED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와 건축물의 설계변화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물리적 변화나 CCTV 등 기계적 감시에 치중한 1세대 CPTED는 실제 매우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실행되는 범죄를 예방하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문학적 현황분석과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2세대 CPTED가 최근에 중요시되고 있다. 결국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으며 지역사회의 유대, 응집력, 의사소통, 집합효율성, 비공식적 사회통제 등 사회문화적, 경제적 측면을 함께 고려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세대 CPTED의 배경이다.

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셉테드 이론과 실무」 참고하여 재구성

물론 주민참여를 전제로 한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지역현황을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CPTED에 참여하게 된다면, 주민들이 애착을 가지고 개선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범죄 취약 환경개선을 위한 대상지역 조사 및 분석, 환경개선 작업, 유지관리 등 분야별로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이웃간 유대도 강화시킬 수 있다.

2. 농촌범죄 특성

2.1 농촌사회의 특성

농촌사회의 특성과 이에 따른 범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기광도, 2001). 농촌사회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사회로, 행정구역상 인구 5만 명 이하의 읍·면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농업이라는 산업구조, 농업종사자, 그리고 공동체적 지역사회라는 특성을 강조한다. 도시사회가 익명성, 분업, 인구의 복합성, 공식적 인간관계, 지위의 외면적 상징을 특성으로 하는데 반해, 농촌사회는 대면적, 전인격적, 지속적, 그리고 전통적 상하관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농촌은 농경지 감소와 주택 및 산업시설의 확산으로 농촌지역의 지리적 감소, 이농 및 이직현상, 고령화의 인구구성, 농촌의 기계화에 따른 공동작업 소멸로 공동체 유대 약화, 티비 및 인터넷 등 농촌지역의 현대화, 공업 및 유통 등 농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의 문화적 독특성으로 “친밀성 밀도”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정도를 의미한다. 작은 지역사회일수록 친밀성 밀도는 높아지고, 시민간 밀접한 상호연관성은 공통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강화한다. 개인적인 대면적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며, 밀접한 개인적 관계는 지역주민 간 범죄와 일탈행위에 대한 감시를 활성화시킨다. 친밀한 관계에 의존된 사회에서는 외부인이나 낯선 사람에 대한 배타성을 보인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친밀성 밀도는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들은 더 자립적인 경향을 보이며 외지인을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사생활은 높지만 사회적 사생활은 낮은 편이다. 한편 도시지역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긴밀한 지리적 근접성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물리적 사생활은 낮고 사회적 사생활은 높은 편이다. 예를 들어 도시 주민들은 다른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더라도 개인들은 서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양상은 범죄나 형사사법 측면에서 농촌의 상황은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나, 아직까지 농촌지역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은 부족한 상황이다.

2.2 농촌범죄 결정요인

농촌지역의 특성은 범죄의 발생 및 통제 등의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농촌지역은 도시로의 인구이동, 인구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현상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게 하고 또한 범죄예방 및 방어능력을 감소하게 만든다. 김현중 외(2011)는 범죄예방 관련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농촌범죄의 결정요인으로 지리적, 인구·사회학적, 경제적 요인으로 압축하여 제시하고 있다. 주거지역의 산재와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농촌의 지리적 요인, 인구밀도 및 지역사회 공동체, 그리고 학력수준과 인종의 다양성 등 인구·사회학적 요인, 고용률 및 소득수준의 경제적 요인이 농촌의 범죄 결정요인이라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군 단위의 자료를 토대로 공간계획 관점에서의 농촌지역의 범죄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낙후지역일수록, 고학력 인구가 적을수록, 1인당 지방세가 낮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농촌지역일수록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농업종사자수 및 경찰수가 많을수록, 토지용도혼합도가 높을수록 농촌범죄 발생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범죄는 공간계획적 요소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신성식(2013)의 연구에서 역시 농촌지역에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농촌가구의 지역적 고립성, 인구증가, 도시화정도, 연령 및 성별 인구구성, 농촌지역과 인근지역의 경제적 상황, 인구이동의 정도(통근자와 이주자), 교육·여가·사회 및 종교적 특성, 경찰 등의 형사사법기관, 경찰력 및 활동양상(인력, 장비, 출동시간 등),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범죄예방과 통제에 대한 시민의 활동(신고, 대응, 감시 및 순찰 등) 등을 들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지리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 경제적 특성은 물론 범죄예방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등 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농촌범죄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농촌범죄의 결정요인을 정리하면 지역의 고립성의 지리적 요인, 인구특성 및 교육수준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사회적 유대감 및 범죄예방 활동의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농촌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표 2-2] 농촌지역의 범죄 결정요인

구분	주요내용	
지리적 요인	-지역의 고립성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구증가 및 도시화정도 -인구이동(통근자와 이주자) -학력수준	-인종의 다양성 -연령 및 성별 인구구성 -여가사회 및 종교적 특성
경제적 요인	-소득수준 및 소득편차	-인근지역의 경제적 상황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요인	-사회적 유대감 -범죄예방과 통제에 대한 시민의 활동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경찰력 및 활동양상

2.3 농촌범죄 특성 및 범죄두려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 보고서 중 지역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읍·면지역이 40.1%로 가장 높았다.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범죄발생이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있어서 읍·면지역이 12.8%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주민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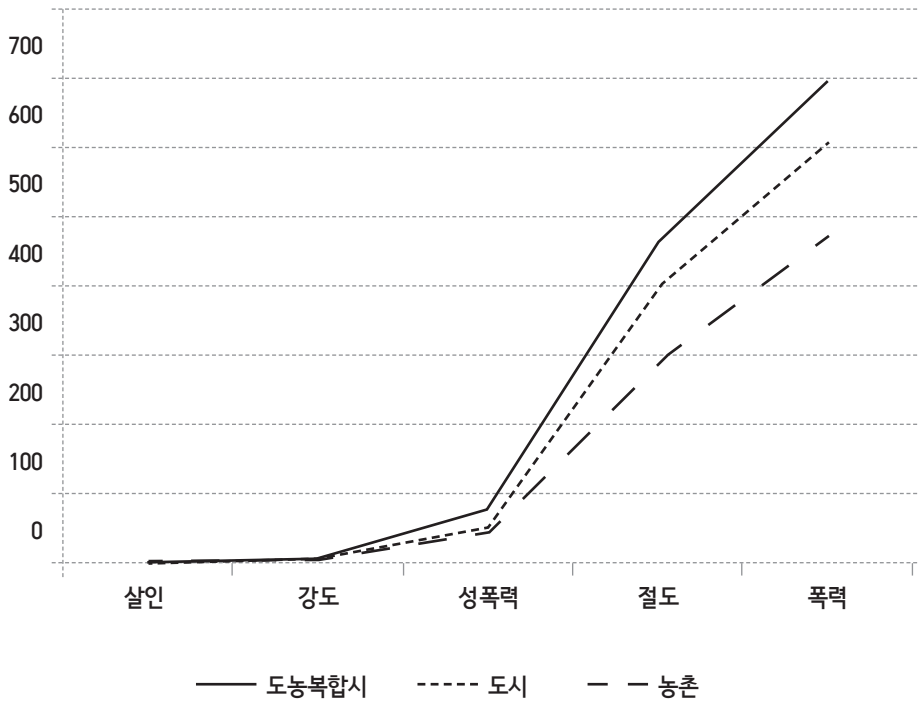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7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도시, 도농복합지역, 농촌의 범죄발생 현황을 비교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5대 범죄발생 총 건수는 농촌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농촌이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살인범죄의 경우 농촌지역에서의 발생건수가 가장 높아 농촌지역의 범죄특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표 2-3] 지역규모에 따른 우리나라 범죄발생에 대한 인식

구분	증가	불변	감소	계	X²
도시 규모	서울특별시	32.9%	53.6%	13.5%	42.054***
	광역시	32.8%	51.9%	15.3%	
	중소도시	33.9%	52.2%	13.8%	
	읍면지역	40.1%	47.1%	12.8%	
	합계	34.4%	51.6%	14.0%	

출처 :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구분	도농복합지역	도시	농촌
살인	1.90	1.75	2.80
강도	2.39	2.50	1.29
성폭력	47.46	73.79	41.28
절도	396.80	463.49	292.20
폭력	603.94	694.25	471.50



출처 :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그림 2-3] 도농복합지역, 도시 및 농촌의 5대 범죄발생 비교

농촌의 범죄 특성 및 범죄두려움의 특징은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치안행정서비스의 소외이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농촌의 경우 상대적으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쉽다. 이러한 행정소외 문제는 CPTED 관점에서 치안행정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이는 곧 범죄 및 범죄불안감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행정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치안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화는 농촌마을의 존립과 직결될만큼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사회적 특성에 따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 강도, 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다. 방어능력이 저하되고, 신체적·심리적·사회적 역할을 상실한 노인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면서 노인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노인을 위한 다양한 물리적 시설물 설치와 함께 사회적 관심과 주민들 간 교류를 통해 범죄의 두려움을 줄이고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거지역과 농경지가 공존하는 농촌의 특성상 농작물 및 농기계 절도는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이는 물질적 손해는 물론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농작물 보호를 위해 민간경비업체를 고용하기에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개인이 범죄를 예방하기는 어려우므로, 지역사회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법시설물 설치의 물리적 환경정비와 함께 농번기 시 순찰 강화 등 프로그램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공·폐가, 나대지에 의한 범죄 및 범죄두려움을 들 수 있다. 이는 마을의 열악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거나 또는 주민들의 범죄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물리적 환경정비와 함께 마을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표 2-4] 농촌범죄 특성 및 범죄두려움 특징

구분	범죄 특성 및 두려움
치안행정서비스의 소외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부족 -경찰력 및 활동양상 부족(인력, 장비, 출동시간 등)
고령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강도 범죄 증가
농경지 분포	-농기계 및 농작물 절도 범죄 상시 노출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범시설물 설치 소극적
공·폐가, 나대지	-열악한 정주여건 조성으로 범죄 유발 -주민들의 범죄 불안감 향상

2.4 농촌지역 범죄예방 원리

CPTED의 실천전략은 연구자별로 조금씩 다르게 설정하고 있지만 대체로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성 강화”, “유지관리”의 5가지로 정리되며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의 “자연적 감시”는 주변을 잘 볼 수 있고 은폐장소를 최소화시킨 공간 및 시설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시야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및 수목정리, 조명설치, 방범용 CCTV 설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접근통제”는 외부인과 부적절한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으로서, 경비원 또는 순찰 경비나 보안 설비, 그리고 울타리, 출입구, 조경 등 외부인 접근이 정해진 경로나 한정된 공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설계가 해당된다. “영역성 강화”는 공간의 책임의식 부여와 적절한 이용 유도를 위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의미하며, 울타리, 담장, 표지판, 조경, 도로포장 등 물리적으로 소유권을 표시하거나 벽면 도색 등으로 공간의 책임의식 부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활동성 강화”는 자연감시와 연계시켜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계획으로서, 공원, 산책로, 벤치 등 조성을 통해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방치된 공간을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활발히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유지시키는 공간 및 시설계획으로서 구조물, 시설물 등이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처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해당 공간이 지역주민들의 관심 속에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행위를 위축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CPTED 전략은 5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2017년에 진행한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위의 5가지 전략을 도농복합지역에 맞게 수정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적 감시” 측면에서 농촌지역에서는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사람들의 시선이 적지만,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시야 확보가 용이하면서도 야간의 자연적 감시는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강화하거나, 자동차 및 자전거 등 기동력 있는 순찰을 야간에도 철저히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접근통제” 전략은 주변이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출입구를 막는 접근통제가 어려우므로, 개별적으로 보안설비를 강화하고 공동작업장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영역성 강화” 측면에서 농촌 지역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공·폐가 및 나대지는 울타리로 영역을 확실히 하고, 공간의 구분이 불분명하므로(농경지, 나대지와 공공가로 및 주거시설) 주택과 외부공간과의 경계 및 마을 진입로에 마을안내판 설치 등으로 영역성을 강화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활동성 강화” 측면에서는 농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대지나 공·폐가를 마을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광장 또는 커뮤니티 시설, 주차장, 텃밭 등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으로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

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측면에서는 농촌지역은 방치된 나대지 및 공·폐가, 쓰레기 투기 등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민의 경관환경정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기계적 보완설비의 물리적 보완 및 환경개선보다 지역 커뮤니티 또는 주민활동 등을 위한 공간정비와 프로그램 적용으로 범죄예방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5] CPTED 실천전략

구분	주요내용
자연적 감시	-자연감시: 사각지대 최소화, 가로공간의 전방시야 확보, 야간 안전을 위한 조명설치 -기계적 감시: 방범용 CCTV
접근통제	-시스템적 대책: 경비원과 순찰의 인적 경비, 보안 설비의 기계적 경비 -공간 디자인적 대책: 사람들의 행태를 일정한 패턴으로 유도
영역성 강화	-사적공간, 반사적/반공적공간, 공적공간 대상 공간의 책임의식 부여와 적절한 이용 유도 -환경정비 및 이용 활성화: 노후된 가로시설 정비, 빈 공지 및 자투리에 화단 설치, 벽면 도색, 각종 안내시설과 방범시설을 보기 쉽게 개선
활동성 강화	-활발하고 다양한 행위 유도를 통한 자연감시 확대: 방치된 공간 또는 부적절한 용도의 공간을 주민 욕구에 맞는 공간(휴게벤치, 운동시설, 텃밭 등)으로 개조시켜 지역재생, 이면도로나 보차혼용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확보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유지: 지역 주민들은 지역 애착심과 삶의 만족도 증가,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행위 위축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대책: CPTED 원리와 다른 4개의 전략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프로그램

▼ [표 2-6] 도농복합지역 CPTED 실천전략

구분	문제점	적용내용
자연적 감시	-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기본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적을 수 밖에 없음 -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대지가 넓게 펼쳐져 있어 시야가 개방되어 있으나, 야간에서의 자연적 감시는 효용성 떨어짐 → CCTV등 기계적 감시로는 비용대비 효율성 떨어짐	- 커뮤니티 강화(휴게시설 조성) - 도로 및 창문의 사각지대 제거(수목의 눈높이 밑으로 정비, 불법광고물 철거, 수목 지하고 높이 2m이상) - 자동차 순찰, 자전거 순찰 병행(야간 순찰 및 감시 강화 활동 강화)
접근 통제	- 주변이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음 - 출입구를 막는 접근통제 방식 적용 어려움	- 개별적으로 방범창, 시건장치 등 보안설비 강화 - 비닐하우스나 마을공동 사용구역(농기계 및 농산물 보관 창고)에 대한 접근통제 강화
영역성 강화	- 농경지, 나대지와 공공가로 및 주거시설간 구분 불명확	- 농경지, 나대지는 주거지 및 공공시설과의 경계 명확히 구분 - 공·폐가, 나대지는 가변형 울타리를 전면에 설치 - 주택은 외부공간과 경계 강화 - 마을 진입로에 마을안내판 설치 - 노후화 된 시설물 및 수목 등 정리
활동성 강화	- 방치된 나대지, 공·폐가로 인한 범죄위험성 향상	-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제공 - 마을광장, 주민 커뮤니티 시설, 자율방범대 거점, 나대지를 활용한 나눔 주차장 또는 텃밭으로 조성 - 지역 내 행사를 주기적으로 개최 - 환경 정리 프로그램 도입
유지 관리	- 유지관리 해야 할 면적이 넓어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함 - 방치된 나대지, 공·폐가, 쓰레기 투기 등에 집중적 유지관리가 필요함	- 농가 주변 수풀 제거 및 수목정비 - 수목정비의 날 지정하여 수목정비 및 마을미관 향상

자료 :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내용을 정리하여 재작성

3. 관련 법 제도 및 사업

국내에서 CPTED 관련 정책은 2005년 경찰청의 「범죄예방을 위한 설계지침」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보고 있다(2017,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시행령」 등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건축 관련 법령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령에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물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도시공간 위주로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7] CPTED 관련 법령 현황

구분	관계법령	개정연월	관련내용
도시 위주 제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10. 01.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기준 신설
	도시재생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1. 05.	재정비촉진사업의 계획수립 시 사업 시행기간동안 범죄예방 대책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2. 02.	정비계획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2013. 09.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 포함
일반 적용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 07	도시·군 기본계획에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국토기본법 시행령	2012. 05	도종합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건축법	2014. 05.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 의무 준수
	건축법 시행령	2014. 11.	건축물의 범죄예방 기준의 적용대상 구체화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2015. 04.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 설계에 범죄예방 건축기준 준수

한편 범죄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2000년대 후반부터 중앙부처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라는 여성운동가들의 캠페인이 계기가 되어 도시공간을 개선하고자 하는 여성친화도시 일환으로 가장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해왔다. 교육부에서도 학교주변 디자인 환경개선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교통, 화재, 범죄예방 등 폭넓은 분야에서 접근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을 진행하였고 현재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또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 [표 2-8] 중앙부처 범죄예방 관련 사업 추진현황

부처	추진시기	사업명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2012년~ 현재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후속) : 교통, 화재, 범죄예방 등 5개 분야 안전 인프라 구축 : 지역민이 직접 사업 발굴 및 제안,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법무부	2015년~ 현재	2015년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 공동 협력형, 지자체 지원형, 공동체 활동지원형 사업추진
		2016년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 위험재해구역 환경 정화, 교통지도 등 공동 협력형, 지자체 지원형 사업추진
		2017년부터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 물리적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연대감 향상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결합시켜 범죄불안감 감소 도모 : 지역 주민 간 유대감 제고, 유관 기관과 소통과 연대로 지속가능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2009년~ 현재	여성친화도시 사업 :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해 여성 역량강화, 돌봄 및 범죄안전 구현 등 여성을 비롯한 시민 모두의 복지 향상 및 행복한 지역 공동체 구현
교육부	2010년~ 2015년	학교안전강화사업 : 학교 주변 CCTV의 화소를 높이는 등 학교 디자인과 환경개선사업 시행
경찰청	2014년~ 현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 CCTV 설치, LED 보안등 설치, 벽화그리기, 소공원 설치

행정안전부의 안심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다양한 주체들 간 협력은 물론 주민참여를 중요시 하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례도 있기는 하나, 광범위한 분야에 비해 단기사업으로서 사후 유지관리의 한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6%만이 도시지역이고 나머지 84%가 비도시지역에 해당되는 만큼 그동안 도시공간에 적용해왔던 CPTED가 아닌 농촌지역 특성에 맞는 CPTED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 간 유대관계를 토대로 한 공동체문화가 아직 남아있고, 이러한 공동체적 특성이 노인들의 고립을 막고 일상에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농촌마을에서 범죄예방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연구 분석

범죄예방 관련 연구성과는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는 충분하지 않다. 농촌 및 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관련 연구는 크게 농촌지역에 대한 범죄실태 및 발생요인을 분석한 연구,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개선 및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 그리고 특정 대상마을 또는 범죄 사례분석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허경미(2011)는 농촌과 도시의 범죄피해 특징을 살펴보고, 농촌이 서울을 제외한 도시보다 범죄 발생률이 높음을 밝혀냈으며 이는 농촌사회의 인문·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현중 외(2011) 연구에서는 농촌의 범죄발생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학력, 소득수준 등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적정 수준의 인구집중도 및 토지이용혼합이 농촌지역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임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농촌의 범죄특성을 토대로 박진희 외(2014)와 박혜진(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7), 오수민(2018) 연구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범죄예방 전략 및 원리,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존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가 농촌지역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에서 시작한 연구들이라 볼 수 있다. 우선 박진희 외(2014)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에서는 물리적 환경이나 규제 중심이 아닌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 및 휴먼 스케일 디자인, 반 사회적영역과 반 공적영역의 활성화, 개방적이고 정돈된 환경의 4가지 새로운 CPTED 적용 기준을 제시하며 S/W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박혜진(2018)의 연구 역시 물리적인 환경정비에 치중하기보다 물리적 영역, 심리적 영역, 커뮤니티 영역의 3영역으로 기본원리를 재구성하여 지역사회와 공동체 커뮤니티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도농복합지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증진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범죄 사전예방, 기동력을 고려한 치안서비스, 노인이 인지하기 쉽도록 공공디자인 고려 등 범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5가지 CPTED전략을 도농복합지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분석을 위해 고령자 인구규모 및 인구 이동 등 인구·사회적 현황, 농작물 절도 범죄 및 노인 대상 마을안전지도 작성 등 범죄 현황, 나대지 등 물리적 현황 분석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오수민(2018)은 5가지 CPTED원리에 “명료성 강화”를 추가하여 6가지 원리에 따른 농촌 실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물리적 환경정비와 S/W프로그램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외에 구체적인 사례분석 연구성과 중 조문정(2016)은 전통마을을 대상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단기적 및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성식(2013)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농작물 절도 범죄예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의 부족한 치안인력 확충을 위해 지역 유관단체와의 연계활동, 기계경비 시스템 설치, 그리고 농민들의 범죄에 대한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 동안의 범죄예방 사업이 대부분 시설물 설치 및 벽화, CCTV설치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왔으며, 물리적 환경정비에 치중하여 이러한 방식이 과연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에서 적용한 방법을 농촌지역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 역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선행연구는 농촌지역에서의 범죄예방 정책 및 사업추진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선행연구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는 물리적 환경정비보다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S/W 프로그램을 토대로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2-9] 농촌 범죄예방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 결과
김현중 외 (2011)	- 한국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 요인을 실증분석	- 고학력 인구가 적고, 1인당 지방세가 낮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농촌지역일수록 범죄가 많이 발생 - 적정 수준의 주거지 집중도를 유지하고, 토지의 용도혼합화가 농촌지역의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
허경미 (2011)	-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 농촌 범죄와 농촌범죄피해의 특징을 도시와 비교	-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 5대 범죄에 대한 농촌과 도시의 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추이는 농촌이 서울을 제외한 도시보다 발생률이 높음 - 농촌사회의 남성성 및 폐쇄성, 농촌사회의 관용성 등 생활양식 등의 변화, 사회적 및 개인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 - 전국인구를 기준으로 한 범죄통계가 아니라 지역별 인구 기준으로 범죄통계 및 피해통계를 구축하여 농촌범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
박진희 외 (2014)	- 주거환경 취약구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CPTED적용 기준 제시	- 제1세대 CPTED는 도시 건축의 물리적 환경, 제2세대 CPTED는 가이드라인과 규제 중심의 제도적 환경, 제3세대 CPTED는 주민들의 책임 의식과 이웃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계적 환경 조성 - 제3세대 CPTED는 소규모 지역 커뮤니티 강화, 반사회적/반공적 영역의 활성화, 휴먼 스케일 디자인, 개방적이고 정돈된 환경의 4가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할 필요
박혜진 (2018)	- 범죄예방 환경설계와 살기좋은 마을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고찰하여 범죄예방의 기본원리 재구성 - 물리적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 커뮤니티 고려	- 그동안 범죄예방 사업은 대부분 시설물 설치, 벽화로 집중, 주민참여 부재로 인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 우려 - CPTED의 기본원리를 물리적 영역(물리적 환경 개선), 심리적 영역(마을 문화/역사의 보존과 재생, 마을 정체성, 마을 축제, 마을에 대한 자긍심 등), 커뮤니티 영역(마을스토리텔링, 마을 기업, 마을 자원, 마을 공동체, 지역단체와의 연계 등)의 3영역으로 재구성 -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기보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커뮤니티를 고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CPTED의 기본원리 강화 필요성 제시

연구자	주요 내용	연구 결과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2017)	- 기존 도시공간 위주로 추진 된 범죄예방 제도 및 사업에 대한 한계에서 시작하여, 공 동체 약화 현상과 노인을 대 상으로 하는 범죄 문제가 증 가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 인 제시	- 도농복합지역에서의 범죄예방은 ①커뮤니티 활성화 및 교류증진 프로그램 마련, 공동체 의식 강화 방안 마련 필요, ②주민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범죄 사전 예방, ③행정 및 치안 서비스가 곳곳에 제동될 수 있도록 기동성을 고려 한 전략 필요(자전거 및 순찰 증가, 자율방범대 조직 등), ④시설물 설치 시 글 자 크기 및 색, 소리 등 노인이 인지하기 쉽도록 할 필요 - ①커뮤니티 강화 및 기동성이 있는 순찰 방식을 통한 자연적 감시, ②방범창 및 시건장치 등 보안설비 강화와 비닐하우스와 같은 마을 공동 사용 구역에 대한 접근통제의 강화, ③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명확한 구분, 마을안내판 설치 및 공·폐가 영역성 강화, ④주민들의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공간 조성 및 주기적 행사 개최, ⑤환경개선 프로그램 추진 - 도농복합지역 CPTED 분석을 위해 인구·사회학적 현황(고령자 인구규모 및 환경, 인구 이동 포함), 범죄 현황(농작물 대상 절도 범죄, 노인 대상 마을안전 지도 작성, 범죄취약공간 분석 포함), 물리적 현황(농작물 피해 고려 조명시 설, 나대지 현황 포함) 분석 필요
오수민 (2018)	- 농촌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 체크리스트를 재구성 및 마 술에 적용하여 농촌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예방 환경설 계 제시	- 자연적 감시 : 낮은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 적용, 수확철이나 야간에 순찰조 편성 - 접근통제 : 농경지로의 접근 보안 강화, 낮은 담장 또는 투시형 담장으로 설 치하되 마당 전체를 조망하지 못하게 해야 함, 창고 등에는 시건장치로 보 완 강화 - 영역성 강화 : 마을 안내판 설치, 사적영역과의 경계 구분, 공· 폐가 등 영역 성 강화 - 명료성 강화 : 정확한 정보(접근금지 등), 적절한 위치, 분명하고 일관된 형 태 등을 통해 주민 및 방문객이 공간과 시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활용성 강화 :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공공간 제공, 나대지나 공·폐가는 텃 밭 또는 판매프로그램 등으로 활용성 강화 - 유지 및 관리 : 나대지 및 공·폐가에 집중적인 유지관리 전략 필요, 깨끗한 환 경가꾸기 활동 추진 필요
조문정 (2016)	-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 는 전통마을(경주 양동마을) 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 내 건축문화재와 마을 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방향 제시	- 단기적 계획으로서, ①관광객 중심구역은 시설과 환경의 개선, ②문화재 중 심구역은 안내판이나 조명, 방법시설의 역할 강화와 유지관리 철저, ③거주 자 중심구역은 완전한 사적영역으로 은폐위주로 적용 및 지속적인 유지관 리를 제시 - 중장기적 계획으로서, ①고령화 및 인구감소 대응을 함께 고려하여 인구유입 과 마을 자치조례 제정으로 공동체 강화, ②관광객-주민-지자체의 갈등 해소 를 위한 중재조직과 협력으로 마을 방법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 제시 - 마을별 방법 모니터링과 범죄발생에 대한 DB구축 및 이를 토대로 마을별 자 체 CPTED 가이드라인 적용 필요
신성식 (2013)	- 농작물 절도의 피해가 발생되 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농촌지역의 부족한 치안인력 확충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모색 - 지역사회와 범죄예방 단체 및 경찰서 유관단체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활 동 추진 - 지자체의 지원 및 투자에 있어서 농작물 절도의 최소화를 위해 기계경비 시 스템 설치 지원 등 예산 확보 - 농민들의 범죄에 대한 의식 전환

III. 선진사례 분석¹¹⁾

1. 스코틀랜드 농촌지역 범죄예방

1.1 대상지 특성

스코틀랜드는 약 540만명의 인구가 대부분 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토의 대
부분이 산이나 언덕으로 되어 있다. 농촌지역에서는 주로 밀과 보리를 많이 생산하며, 하일랜드 고원
의 초지에서는 양을 방목하고 이를 이용한 산업이 발달해 있다¹²⁾.

농촌인구는 전체의 약 16%인 90만명이며, 인구 3천명을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고,
도시와 농촌을 3분류할 경우 도시지역(Rest of Scotland), 근교농촌(Accessible Rural), 외딴농촌
(Remote Rural)으로 구분한다¹³⁾.

외딴농촌의 인구구성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로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범죄두려움과 범죄피해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¹⁴⁾가 있는데, 여기서 외딴농촌의 주
민들이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알 수 있다. 혼자 밤에 산책하는 것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안전
하다고 느끼고 있는 정도가 점차 높아졌으며 외딴농촌에서의 안전감이 가장 높고, 혼자 밤에 집에
있을 때의 안전감 역시 대체적으로 높으며 이 역시 외딴농촌이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범죄피해 경험에 대하여 폭행이나 상해, 강도 등 폭력범죄 피해경험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
며, 농촌지역일수록 피해경험이 낮으며, 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절도, 절도 등 재산범죄 피해
경험 역시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외딴농촌의 피해율이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난 2
년간 거주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동일하거나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정도는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즉, 농촌지역 주민들은 거주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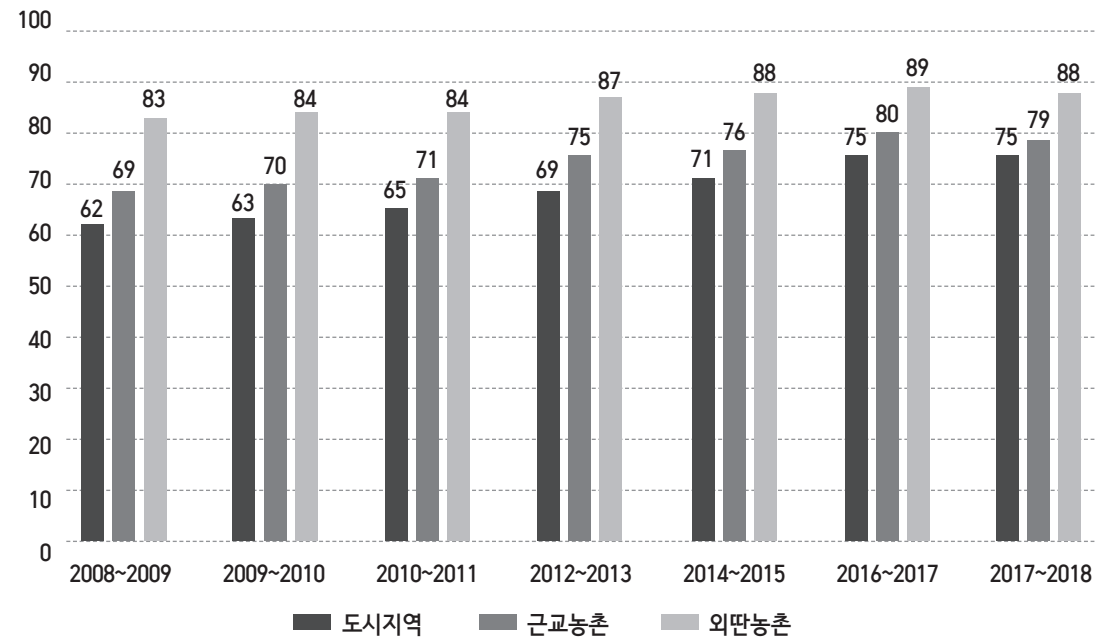
11) 허경미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원고를 토대로 작성

12) World Population Review, Scotland Population 2019,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scotland-population/, 2019. 9. 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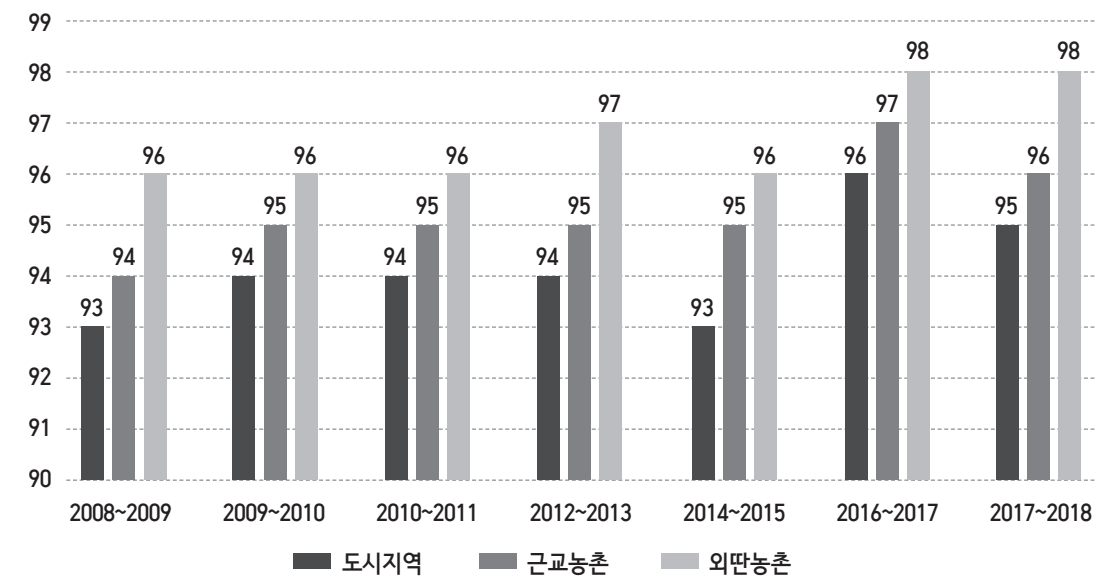
13) 도시지역은 3천명 이상의 사람들의 지역, 근교농촌은 인구가 3천명 미만이면서 운전시간 30분 이내에 천명 이상의 거주
지가 있는 지역, 외딴농촌은 인구가 3천명 미만이면서 운전시간 30분 이상에 1만명 이상의 거주지가 있는 지역

14) Scottish Government, Scottish Crime and Justice Survey 2017-2018: main findings

혼자 밤 산책에 대한 안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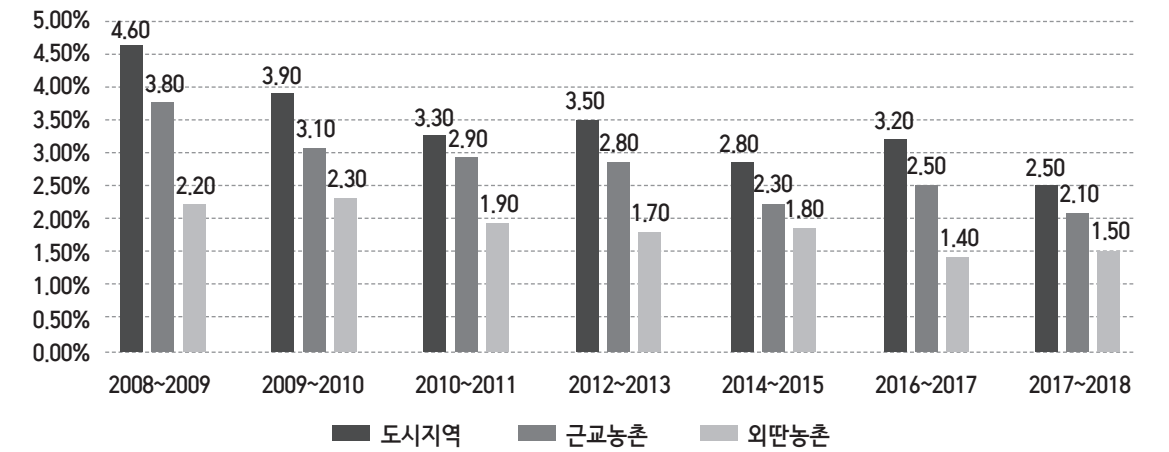


혼자 밤에 있을 때의 안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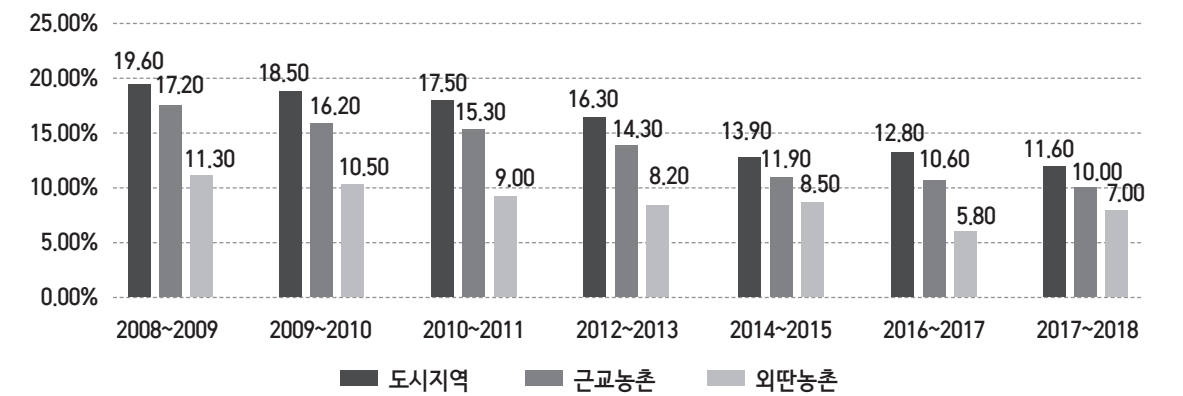


▲ [그림 3-1] 스코틀랜드 주민의 범죄두려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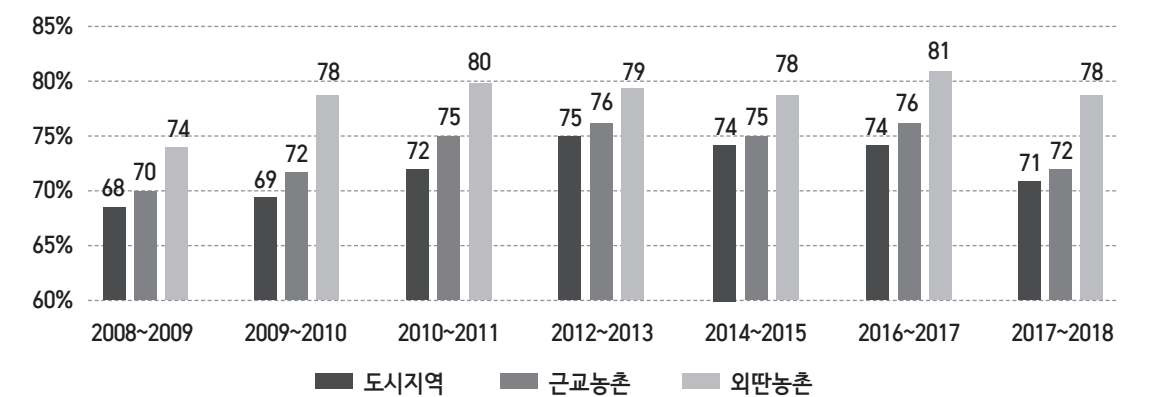
폭력범죄(폭행, 상해, 강도 등) 피해경험



재산범죄(재물손괴, 주거침입, 주거침입절도, 절도 등) 피해경험



지난 2년간 거주지역의 범죄발생률이 동일하거나 낮아졌다고 인식하는 정도



▲ [그림 3-2] 스코틀랜드 주민의 범죄피해 경험 정도

1.2 농촌범죄대응 스코틀랜드 파트너십(The Scottish Partnership Against Rural Crime)

1) 추진개요

농촌범죄 대응 스코틀랜드 파트너십(SPARC)은 농촌범죄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들이 결성한 협력기구로 2015년에 결성되었다(SPARC, 2019). SPARC에는 스코틀랜드정부를 비롯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조직 및 시민단체, 민간조직 등 16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⁵⁾.

SPARC는 스코틀랜드 농촌지역의 범죄를 줄이고 해결하여 안전한 농촌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표달성의 행동전략(Action Plans)으로 예방, 정보교류, 시행 및 안심(Prevention, Intelligence, Enforcement and Reassurance)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즉, 농촌지역의 범죄 및 안전을 해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문제 영역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파트너)이 문제해결 전략과 그 평가기준을 제시하며, 그 외 파트너들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표 3-1] 농촌범죄대응 스코틀랜드 파트너십(SPARC)의 구성

스코틀랜드 정부(Scottish Government)
크라운 오피스 및 조달청 회계 서비스(Crown Office & Procurator Fiscal Service)
스코틀랜드 경찰(Police Scotland)
스코틀랜드 임업위원회(Forestry Commission Scotland)
스코틀랜드 토지 및 부동산(Scottish Land & Estates)
스코틀랜드 역사 환경(Historic Environment Scotland)
스코틀랜드 식품표준 (Food Standards Scotland)
영국 말 협회(British Horse Society)
스코틀랜드 공동체 안전 네트워크(Scottish Community Safety Network)
영국 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Mutual)
스코틀랜드 농민연합(National Farmers Union)
스코틀랜드 젊은 농부 클럽 협회(Scottish Association of Young Farmers Clubs)
스코틀랜드 이웃감시(Neighbourhood Watch Scotland)
스코틀랜드 농촌감시(Rural Watch Scotland)
스코틀랜드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Scotland)
스코틀랜드 농민연합 보험(NFU Mutual)

15) SPARC의 현재 의장은 스코틀랜드 경찰청장인 John McKenzie 이다. police scotland, <https://www.scotland.police.uk/whats-happening/news/2018/august/reduction-in-cost-of-rural-crim>, Reduction in cost of rural crime, 2019. 9. 20. 검색

2) SPARC의 2019-2022 행동전략

SPARC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달성할 4개년 행동전략을 2019년 4월에 발표하였다. 이 행동전략은 스코틀랜드 농촌지역 안전과제를 7개 영역으로 나누고, 그 해결방법, 평가지표 그리고 시행기간 등의 세부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¹⁶⁾.

① 농업용 장비 및 농작물 안전 과제

스코틀랜드 경찰이 주관,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찰의 순찰 및 주민의 감시, 교육 및 홍보, 방법시설 및 보안강화 제도 적용으로 장비 및 농작물 범죄를 예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2] 농업용 장비 및 농작물 안전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범죄자의 지역도로 사용 방해	- 도난발생지역, 도로, 주민의 정보파악 및 구축, 상호 정보공유 - 농촌감시대의 농촌소로 감시 강화, 낫선 차량과 의심차량 신고	- 범죄자가 사용하는 차량의 경로, 제조사 및 모델과 관련된 정보건수 확대 - 농촌 도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범죄건수 감소	단기과제
범죄자의 농작물, 농장 차량, 장비 등에 대한 접근 및 장물거래 차단	- 대상물 보호 마킹 및 추적장치, 식별장치 등의 범죄예방 기술 및 제품의 사용 장려 및 홍보 - 농기계 및 장비류 개발 시 범죄예방 장치를 포함토록 법제화	- 보호 마킹장치 설치 농가의 증가 ¹⁷⁾ - 범죄예방기술 및 장치의 이행	중기과제
박진희 외 (2014)	- 주거환경 취약구역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CPTED적용 기준 제시	- 재정적 또는 상업적 손실 감소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16) FWI, Major bid to tackle rural crime launched in Scotland, <https://www.fwi.co.uk/news/crime/major-bid-to-tackle-rural-crime-launched-in-scotland>, 2019. 9. 20. 검색

17) 건설 및 농업 장비 보안 및 등록 제도(The Construction & Agricultural Equipment Security and Registration Scheme: CESAR) 마킹 시스템의 도입을 말하며, 이는 건설장비협회 (Construction Equipment Association: CEA)에 의해 추진되고 농업엔지니어협회(Agricultural Engineers Association: AEA)가 지원하며, Datatag ID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다양한 농장비 및 차량, 농기계 등에 추적장치 및 바코드장치 등을 통하여 해당물건의 추적을 쉽게 하고, 장물거래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CESAR, https://www.cesarscheme.org/How_Does_It_Work.html, 2019. 9. 20. 검색

② 말 산업 안전 과제

영국 말 협회가 주관,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시대들의 활동, 장비에 추적장치 부착, 홍보, 표지판 부착 등 감시, 접근통제 등의 방법으로 스코틀랜드의 말 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 [표 3-3] 말 산업 안전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말 소유주 또는 관리자의 공격, 폭행 방지	- 공개 캠페인을 통해 처벌강조 - 말 및 시설 주변의 의심스러운 활동의 감시강화 및 즉시신고 유도	- 말 부상 및 사람의 범죄피해 신고 감소	단기과제
도로에서 말과 라이더 보호	- 지속적인 도로 안전 홍보 캠페인 - 공공 도로에서 표지판 활용 사건장소 표기 및 근처 주의 표시판 설치 - 말 관련 사고보고 권장 홍보 및 말 소유자의 안전한 차량 운송 지침 제공 및 홍보	- 말 또는 말 수송 차량과 관련된 도로 사고 및 부상의 감소	중기과제
말 농장, 승마시설 및 운송 장비를 포함한 말 산업 관련 도난 예방	- 범죄예방의 중요성 및 관련 시설 설치의 필요성을 말 사업자 및 승마사업자, 전문코치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도난 예방 및 수사매뉴얼의 개발보급, 말 감시대(Horse watch)와 농촌감시대(Rural Watch)와의 강력한 연계 활동 - 말 관련 장비의 추적장치 등으로 장물 거래 차단	- 도난으로 인한 손실 감소 - 말 산업 공동체 내 범죄예방 장치 확대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③ 폐기물 없는 스코틀랜드 과제

스코틀랜드 제로 웨이스트가 주관,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쓰레기투기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보공유, 감시활동,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 [표 3-4] 폐기물 제로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불법 쓰레기투기 식별 및 처벌 위한 협력 장려	- 기관 간 투기자 정보공유 및 정보수집 및 증거확보	- 부과된 벌금 실적 기소 및 유죄 판결 건수 증가	단기과제

불법 쓰레기 처리 또는 관리에 의한 수익금 창출 기회 및 영리형 조직 범죄 차단	- 불법 수익금 몰수 및 박탈 등 홍보 - 철도경찰, 교통공사 등의 쓰레기투기 단속 강화 및 감시활동 강화	- 쓰레기투기 범죄와 관련된 예산 및 인력 감축	중기과제
농촌지역의 쓰레기투기 지역 감소	- 쓰레기투기 장소, 양 및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관할지역 및 기관에 통보, 지역별 캠페인 - 신고매뉴얼의 보급 및 권장홍보	- 쓰레기투기량 감소, 쓰레기수거 비용 감소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④ 연료 절도 방지 과제

스코틀랜드 임업 및 토지가 주관,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안정보 공유, 관계자들의 자연감시 강화, 안전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신고시스템 구축, 홍보 등 절도 방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표 3-5] SPARC의 연료 절도 방지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농촌 지역의 연료 절도 기회 차단	- 탁월한 범죄예방대책 및 제품의 홍보 - 주택안전방법책 및 보안대책의 공유, 장려	- 연료 절도 감소 - 연료 절도 미수의 증가	단기과제
범죄에 매력적이지 않은 농촌 환경을 조성(cpted)	- 가구주, 상점종사자, 일반인 등이 쉽게 관찰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 - 시설안전을 위한 매뉴얼 개발 보급	- 도난 또는 도난 시도 감소	중기과제
의심활동 신고강화 및 유관기관의 후속조치의 공유	- 토지 소유자, 계약자 및 대중이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신고토록 신고접수시스템 개선 - 신고가이드를 개발 및 기관간 홍보, 주민 홍보	-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 및 계약자에 의한 신고기록 감소 - 지주와 계약자로부터의 피드백 감소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⑤ 문화재 범죄 방지 과제

스코틀랜드 역사 환경 주관,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화재 위치정보 구축을 비롯하여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및 범죄자 파악 정보구축, 캠페인 및 홍보 등 주로 정보구축과 주민 의식개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표 3-6] 문화재 범죄 방지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문화재 범죄가 발생하는 지역 및 범죄자 파악	-범죄중단 캠페인 및 스코틀랜드 문화재단의 가시적 활동 강화 -공공데이터 정보구축 기술 향상 및 감시활동 강화	- 신고증가 - 사전정보로 예방	단기과제
문화재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이해 증진	- 문화재 범죄로 인한 지역사회 및 스코틀랜드 전체에 미치는 피해 설명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행사를 통한 동영상 자료 등 활용 홍보 강화	- 시민의 문화재 중요성 및 전문성 등 인식 강화	중기과제
역사적 장소와 기념물을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으로부터 보호	-지역 내 문화재 정보와 상세한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 리플릿 및 관련 홈페이지 등 생성 -문화재 당국과 토지 소유자가 협력, 유적지 보호 -유적지 위치와 관련 가능성이 있는 장소 및 대상물에 대해 문화재 당국과 협조	- 문화재 위협 또는 손실 감소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⑥ 가축류 및 육가공류 범죄 방지 과제

스코틀랜드 농민연합이 주관하며,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가축 보호를 위한 처벌방안, 불법 식품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 및 홍보 등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안전, 식품의 안전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7] 가축류 및 육가공류 범죄 방지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개로 인한 가축의 공격과 피해 감소	-명확한 처벌규정 및 구체적인 처벌사례 홍보 강화	- 가축에 대한 공격과 피해의 감소	단기과제
스코틀랜드 식품산업에의 불법적인 육류제품의 유입 방지	- 스코틀랜드 식품표준의 활동 지원 및 정보 공유 -먹이 사슬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식품범죄 예방 및 범죄신고 캠페인 강화	- 검찰의 성공적인 기소 및 처벌	중기과제
야외 레저 활동 시 농지 및 가축류 피해 예방	-개 소유자, 토지 소유자 및 모든 법 집행기관을 위한 적절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	-가축공격 사건보고 증가,가축공격/조난 사건 발생 감소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⑦ 밀렵 범죄 방지 과제

스코틀랜드 토지 및 부동산이 주관, SPARC 회원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이며, 생물 다양성 보호와 밀렵 범죄예방, 야생동물 범죄예방 관점에서 정보공유 및 홍보활동, 관련 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연계 등의 방법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표 3-8] 밀렵 범죄 방지 과제

과제	방법	성공지표	시급성
밀렵범죄가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경고	-사건의 공개 -초동조치 강화, 수사 및 기소 정보 등 공유,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	- 범죄인지, 기소 및 유죄 판결 증가	단기과제
생물 다양성 침해, 식품 안전 및 조직 범죄자와의 연계 측면에서 밀렵의 심각성 홍보	- 토지 소유자와 주민에게 밀렵예방, 중단,피해상황 홍보 -신고가이드 홍보	- 밀렵예방캠페인 증가, 밀렵 신고건수	중기과제
스코틀랜드 야생동물 범죄예방행동 파트너십(PAW) 캠페인 승인과 참여(Partnership for Action Against Wildlife Crime : PAW) 활동 지원	- 스코틀랜드 야생동물 범죄예방행동 파트너십(PAW) 캠페인 승인과 참여 -전국야생연합(National Wildlife Crime Unit), 밀렵과사냥구출그룹(Poaching and Coursing Priority Delivery Group)과의 연계 강화	- 캠페인 대상자 확대	장기과제

자료출처 :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1.3 스코틀랜드 경찰의 범죄예방전략

1) 범죄예방 환경개선

경찰은 「농촌 및 농업 공동체를 위한 범죄예방에 대한 자료집(Advice on Crime Prevention for the Rural and Farming Communities)」을 발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농업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¹⁸⁾.

이 자료집은 서문에서 “농촌인의 일상적 삶의 방식과 환경을 살펴보고 개선하는 것이 범죄예방의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가정, 재산, 주변환경,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범죄예방책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표 3-9] 스코틀랜드 경찰의 농촌지역 범죄예방 전략

범죄예방 항목
방어공간의 확보 및 감시강화(Physical and Visible Deterrents)
조명(Lighting)
주택보안(Home Security)
창고, 차고, 농산물창고 등의 시설관리(Outbuildings and Sheds)
말(Horses)
트레일러, 말 우리 관리(Trailers, Horse Boxes Etc.)
가축 및 가축우리 관리(Livestock)
화재예방(Fire-Raising Etc.)
총기류보관관리(Firearms and Ammunition)
야생동물 및 환경보호(Wildlife Crime)
방문객범죄(Doorstep Crime)
사이버범죄(Cyber Crime Guidance) 등

2) 범죄경고시스템 도입

스코틀랜드 경찰은 농촌주민들에게 「스코틀랜드 농촌 경고(Rural Watch Scotland)」¹⁸⁾ 시스템에 가입하고 실시간으로 범죄관련 정보를 제공받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 경고 시스템은 스코틀랜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의 지역과 관련된 범죄정보를 전자메일 및 전화문자로 직접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정보는 지역경찰관(local police officers) 및 경찰로부터 승인된 정보제공 업체가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3) 범죄신고 전화의 간편화

스코틀랜드 전화는 범죄의심 및 범죄발생 신고, 응급구조 등의 신고를 모두 999로 통일하여 유지하고 있다. 청각장애자나 언어장애자는 문자전화인 18000번을 사용할 수 있다. 신고를 익명으로 원하는 경우 자선단체인 Crimestoppers에게 0800-555-111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안전하게 경찰

18) Police Scotland, RURAL CRIME PREVENTION A Guide To Security In The Rural Environment, https://www.scotland.police.uk/assets/pdf/keep_safe/rural-prevention-booklet, 2019. 9. 20. 검색

19) Police Scotland, Rural Watch Scotland launched at Royal Highland Show, <https://www.scotland.police.uk/whats-happening/news/2017/june/rural-watch-scotland-launched-at-royal-highland-show>2019. 9. 20. 검색

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²⁰⁾.

4) 안전디자인(Secure by Design : SBD) 표준(Standard)의 도입

안전디자인 표준은 SBD가 만든 범죄예방을 위한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SBD는 영국 경찰청과 함께 일하는 경찰 조직으로 1989년에 창설되었다. 영국경찰과 SBD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접근기회를 차단하며, 범죄가 발생할 경우 그 추적과 장물거래 등의 차단 등을 위해 표준적인 방법디자인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고 있다. SBD 표준은 스코틀랜드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에 적용되고 있다²¹⁾.

2018년 10월에 영국정부는 제조업자에게 스마트칩이 내장되는 모든 기기에 보안(Security) 기능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사물인터넷 사용 소비자 지원법(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을 제정하는 등 SBD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²²⁾.

스코틀랜드는 안전디자인(Secure by Design) 표준(Standard), 즉 각종 농업용 장비나 차량 등에 바코드나 특수방범설계부품 등을 사용하여 제작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경찰이 지도 감독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에, 1만5천개의 주택이 지난 4년간 SBD의 인증을 받았으며 학교, 대학, 연구소 건물 등 비거주시설 63개소가 SBD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스코틀랜드 경찰은 SBD와 연계하여 SBD 표준에 따른 주거의 자연감시 공간 확보, 조경을 통한 이동제한, 도난 방지장치, 창문 및 현관문의 이중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설비를 통한 주민 스스로의 범죄예방을 생활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안전디자인 표준은 경찰과 SBD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20) crimestoppers, <https://crimestoppers-uk.org/about-the-charity>, 2019. 9. 20. 검색

21) SBD, who-we-are-what-we-do, <https://www.securedbydesign.com/about-us/who-we-are-what-we-do>, 2019. 9. 20. 검색

22) GOV.UK, Secure by Design,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secure-by-design>, 2019. 9. 20. 검색

2. 경남 거창군 북상면 안심마을사업

2.1 안심마을사업 개요

1) 사업 근거 및 선정과정

2013년 4월 5일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10(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근거로 주민 중심의 안전마을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안전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심마을이란 마을주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을을 의미하며, 마을주민 스스로가 안전공동체를 구축하여 직접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으로 2013년 9월 당시 안전행정부에 의하여 전국 10개 시범마을(읍·면·동)이 선정되었다. 안심마을 구축은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기법을 적용하여 범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주민참여적 대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환경개선전략을 포함한다²³⁾.

안전행정부는 2013년에 10개의 시범마을을 선정하고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하였다. 경남 거창군 북상면은 이 10개의 시범마을 중 1개소로 농촌주거지로 노인인구 중심의 농촌주거지라는 특징이 반영되었다(한국행정연구원, 2014b).

2) 추진주체 및 사업내용

정부는 안심마을사업에 있어 주민, 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정하였다.

첫째, 지역주민은 마을 내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4대악 등 범죄예방, 교통안전을 필수 활동으로 추진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난대비, 취약계층안전, 기타 안전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네트워크의 형성·활동 지원 및 취약한 안전인프라의 구축을 담당하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의 경우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마을만들기 관련 유관사업 연계, 성공모델 개발·보급 등 행정·재정적 지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23) 행정안전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2013, https://mois.go.kr/synap/popup/synapFileViewOpen.do?atchFileId=FILE_000000000046288&fileSn=0, 2019. 9. 20. 검색

따라서 안심마을 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이고 해당 지자체는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전문분야의 안전증진 활동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으로 각 지역의 안전마을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주민단체와 안전네트워크를 만들어 추진되었다(한국행정연구원, 2014a). 당시 정부는 안심마을사업을 신청한 31개 지역 중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는 읍·면·동과 공식적 협의권한을 갖도록 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4b).

그리고 정부는 안심마을 사업을 지원할 연계기관을 지정하였고, 각 안심마을이 실시하여야 할 사업을 영역별로 제시하였다(대구경북연구원, 2014).

이후 정부는 2015년에 사업 목적이 유사한 방재우수마을사업과 안심마을사업을 통합하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확대·개편하였다. 이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2014년의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지 중 우수마을 3개소(수원 송죽동, 광주 봉선1동, 거창 북상면)가 포함되었다.

▼ [표 3-10] 안심마을사업 지원 지정 연계기관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한국전기 안전공사	그린홈	전기설비에 취약한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점검 및 설비 개선
	그린타운	농어촌 일손돕기, 특산물 구매 및 홍보, 청소·목욕·식사 봉사
가스안전 공사	가스시설 개선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 가구 대상 가스렌지, LPG호스 금속배관 교체
	타이머콕 무료 보급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자동으로 가스종간밸브 잠금 장치 보급
농어촌공사	「희망家꾸기」 운동	농어촌의 사회적 소외 계층 대상 노후주택 개보수, 농어촌마을 공동생활 홈 조성
안전보건 공단	안전보건 컨설팅	마을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강사지원, 이동안전교육버스에 대한 시청각 교육 등
	지역사회밀착 사회공헌활동	산재피해 근로자 장학금 지원, 야학, 다문화 축제지원 등 나눔활동
한국전력 공사	사회공헌활동	노후 전기설비 점검 및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저소득층 체납전기요금 지원 ‘사랑의 에너지 나눔’ 사업, 거동불편 장애인/고령인 대상 무선전위스위치 보급
대한 적십자사	안전교육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안전점검의 날 실시	승강기 안전점검, 119구조대 연계비상구출 훈련, 안전캠페인 ※자매결연 희망지역(연제구 연산1동)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기관 자원 봉사활동	지역사회 일손돕기, 지역 정보화 지원(컴퓨터 수리, 컴퓨터 교육 등) ※ 자매결연 희망지역(은평구 역촌동)
한국지역 진흥재단	향토자원 활성화 컨설팅	향토자원 활성화를 위한 무료 컨설팅지원, 지역특산물 판매 직거래장터 운영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주민교육 및 컨설팅	안심마을 운영 공무원 교육, 주민자치회 위원교육, 사회적기업 운영 교육 등
지방공기업평 가원	컨설팅 및 재정지원	평가원의 CS조사 노하우를 살린 안전관련 주민만족도조사 컨설팅 지원 및 재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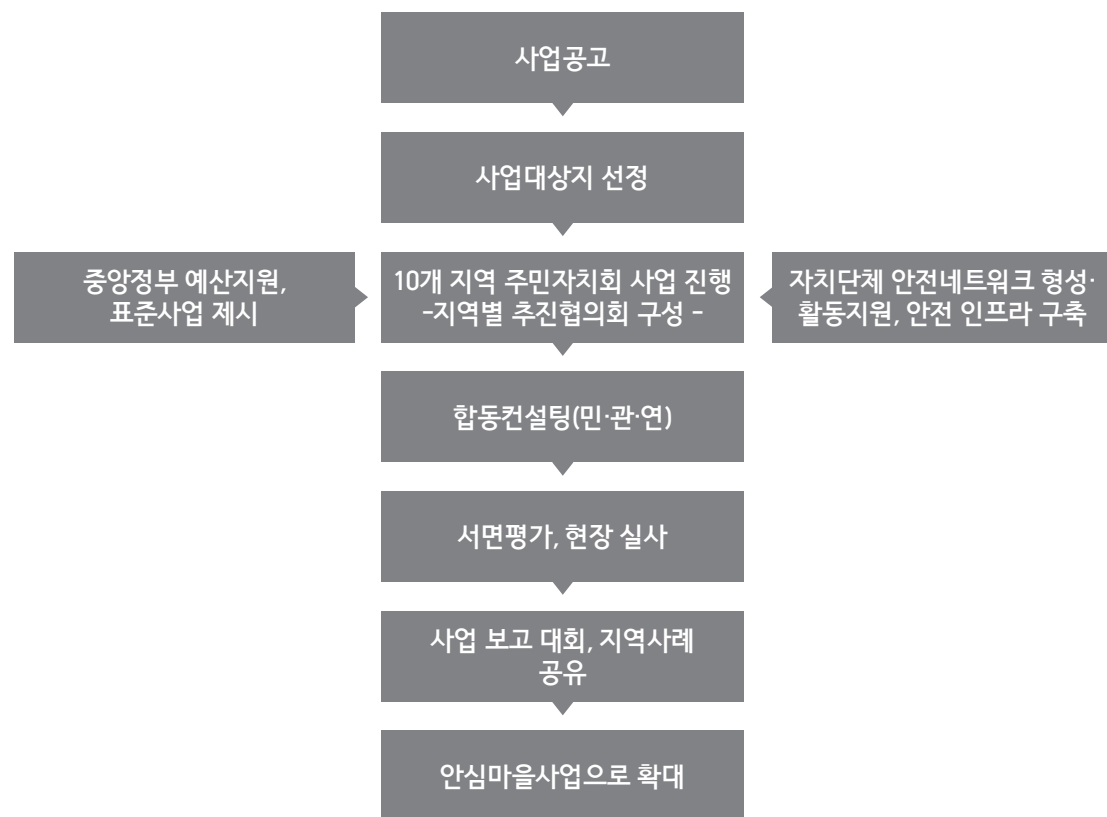
자료출처 : <https://mopasblog.tistory.com/11811129>, 2019. 9. 20. 검색

▼ [표 3-11] 영역별 안심마을이 실시하여야 할 사업

사업명	필요성	활동내용
지역안전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외 안전 관련 이해당사자 그룹 파악 및 협력체계 확보	- 주민자치회와 지역주민 : 모든 활동의 주체이자 중심적 역할 - 지역사업자(기업, 소상공인, 편의점) : 자원공유 및 협력활동 - 주민조직(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안전모니터봉사단 등)과 지역단체 : 적극적인 연계활동 과 공동 활동 수행 - 행정(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 지원활동 - 유관기관(경찰, 소방, 학교) : 행정지원, 자원공유, 협력활동 - 지역전문가 및 주요 이해당사자 : 전문적인 지원 및 컨설팅
	주민자치회 산하의 안심마을 추진 협의회 구성	- 안심마을 조성사업 구상, 계획수립, 집행의 의사결정기구 - 주민자치회 : 마을주민 참여, 행정과 전문가 등 지역 이해당사자는 자문단 혹은 고문기관의 로 위촉 - 추진협의회 : 안심·안전마을 조성사업에 착수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 총괄, 착수 이후 운 영위원회로 재편 - 행정보조, 추진협의회 활동지원조직의 구성, 각종 계획수립, 주민역량강화 등
지역주민안전 워크숍 실시	마을, 근린 생활권 주민 워크숍	- 안심마을추진 주민협의회(주민자치회) 주도의 워크숍 개최 - 주민 불안 요소 설문조사 실시 - 마을안전지도의 작성원칙 : 위험요인과 마을의 자원에 대한 파악, 취약성의 파악(주민생활 경 로 파악 및 위험요인 노출도, 시뮬레이션, 현장답사, 정보확인 및 수정)
마을 순찰대 구성	10개 안심마을의 표준화된 마을패트를 구성 및 지속가능한 운영	- 읍면동 단위 50명 내외의 구성, 전국적 표준화된 안심마을 순찰대 구성 : ①조직 내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지속가능한 조직화 추진, ② 하늘색 순찰차 및 유니폼 등 전국적 통일 - 표준화된 마을패트를 운영원칙 : ①주민자치회 수익사업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순찰대 운영, ②자원봉사 원칙, ③학부모회 등과 연계한 활동가 양성, ④어린이 교통안전, 청소년 범죄예방, 재난대비 등 목적별 성과지 표 적용 및 순찰원칙 준수, ⑤ 지역경찰 안전관련 유관기관 등과 합동순찰·점검, ⑥ 매월 혹 은 매주 ‘마을 안심의 날’ 지정 및 가두캠페인, 행사 등

마을안전환경 개선계획	지역특성 반영 환경개선계획	- 생활, 교통, 취약계층 등 지역특성에 맞는 안전개선 목표를 우선 설정한 후, 그 목적에 필요 한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
	마을환경정비 및 CPTED 원칙 적용	- 10개 안심마을에 대한 전국적 공통요소 혹은 일관된 디자인 적용 - 위치확인제 실시 : 마을 내 전신주, 가로등 및 주요 시설물 등의 위치확인 번호판, 주요 포스 트마다 비상전화 혹은 연락수단, 마을지킴이 포스트 설치 - 교통안전시설 확충 : 반사경, 도로구조 개선, 위험표지판 설치, 과속 방지턱 설치 등 - 마을의 주요 길거리에 대한 가로정비 : 시야확보, 밝고 편안한 환경미화, 화단조성 등
지역특화안심 마을계획수립	지역특성 반영 안전 관련 특화 사업	- 도시형, 농촌형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특화 사업 실시 - 특화 사업계획에는 반드시 다양한 이해당사자 참여, 주민협약이나 MOU 등의 체결을 통해 공식화 필요
지역안심허브 구축	지역 안심허브의 역할	- 4대악 등 생활안전, 교통안전, 방재 및 화재안전, 취약계층 안전, 산업 안전 등 안심마을 활동 을 위한 자주적 활동거점으로서 기능 - 안심마을 주민활동 및 관련시설의 거점 : 다양한 마을의 안전관련 주민활동을 위한 모임공 간 제공 등 - 안전관련 지역정보 집약 및 공유의 거점 : 필요 시 마을 CCTV 통합관제센터 등 구비

안심마을사업은 우선 사업공고를 내고 신청된 지역 중 10개를 선정하여 각 지역별 주민자치회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행정안전부는 예산 지원 및 표준사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자치단체는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미흡한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한 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연 합동 컨설팅 T/F를 구성하여 각 지역의 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하여 사업을 최종 평가한다. 그리 고 안심마을 시범사업 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례 공유 및 우수 안심마을을 선정하여 안심마을 사업을 확대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었다.



[그림 3-3] 안심마을사업 추진체계

2.2 대상지 특성

거창군 북상면은 경상남도 최서북단으로 거창읍으로부터 마리면과 위천면을 경유하여 18k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30m의 산간 오지와 산들이 많다. 대표적인 들로서는 약 40ha의 용문들이 있으며 남덕유산과 접하고 있다. 깊은 계곡 및 울창한 수목림의 산촌지로서 면적은 126.4km²이며, 월성계곡 및 덕유산은 전국의 관광명소로 알려져 있다.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북상면 주민의 43%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 지역으로 가구는 농가 609호, 비농가 270호이며, 인구수는 1,614명, 임야가 89.8%이고 농지가 7%인 인구가 적고 대상 면적은 매우 넓은 전형적인 노인형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다.

경남 거창군 북상면은 노인안심지역, 경로당 안전개선, 안심모니터 봉사단 운영, 재난우려지역 순찰, 제설작업반 운영, 위급환자 수송 안심차량 운영, 독립가옥 경보기, CCTV 설치라는 농촌노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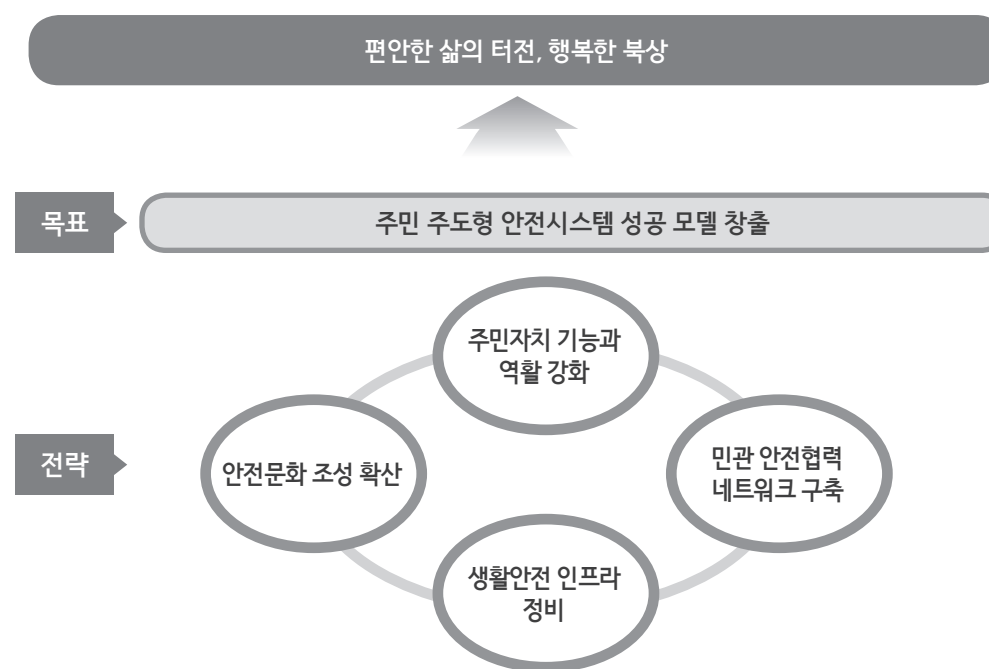
안전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북상면은 선정 당시 최근 3년간 도난사건, 교통사고 24건으로 나타나 비교적 강력범죄의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4).

2.3 사업내용 및 성과

북상면은 주민주도형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문화 조성 확산, 생활안전 인프라 정비, 민관 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안전문화 조성 및 확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학교, 경로당, 주민대상 교통법규준수 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화재, 전기, 가스, 농기계, 물놀이 등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의 실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법규준수 운영(안심센터 주축 범죄예방 방법순찰 강화, 안심마을사업 표지석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국민안전처, 2016).



자료 : 한국행정연구원(2014), 안심마을 시범사업 분석평가 및 중장기 확산 방안 연구

[그림 3-4] 북상면 안심마을사업 전략

민관 안전협력네트워크 구축(노인 안심마을 만들기)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기관 간 연계사업 추진(전기, 가스, 산업안전 등), 안전취약세대 보수사업 지원, 안심모니터 봉사단 운영(재난구조, 복구 지원,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등), 1마을 1인 응급처치전문가 양성(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등을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인프라 정비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취약지역 CCTV 6개소 설치, 커브길 반사경 20개소 설치 및 사고위험지역 경보등 5개소(투광기 병설) 설치, 위험도로 가드레일 12개소 설치, 디자인사업 4개소 진행, 사고다발지역 4개소 선형 개선, 복합안심센터 1개소 구축 등을 실시하고 이 예산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4b).

민·관·연 합동컨설팅 T/F의 현장컨설팅단은 북상면 안심마을사업에 대해 ①교통약자 보호구역의 신설 및 연계, ②북상면사무소 진입 차량 속도 제한 방안 마련, ③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한 일상생활 공간 안심시설 설치, ④경운기 등 농기계 야간 시인성 확보, ⑤노인 야간 보행안전 보호장구 제공, ⑥주민자치박람회와 안심마을 결합 제안, ⑦화목보일러 사용 주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북상면은 대부분 수용하여 기존의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1년간 사업을 추진한 이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0명(1차 750명, 2차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북상면의 사업효과를 알 수 있다.

안심마을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은 사업 시행하기 전보다 시행 후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 참여의사 또한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참여의사가 높게 나타나 북상면 주민들은 사업 시행 후 사업의 효과를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인식개선도 함께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사업시행 후 마을의 안전에 기여한 정도, 안전네트워크 기여도, 안전인프라 기여도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만족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전 체감도 측면에서 사업 시행 전보다 시행 후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안심마을사업 시행 후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 [표 3-12] 북상면 안심마을사업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설문내용		설문결과		
사업의 필요성	시행 전	① 필요하다 96%	② 보통이다 0%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시행 후	① 필요하다 100%	② 보통이다 0%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0%
참여의사	시행 전	① 참여하겠다 80%	② 보통이다 18%	③ 참여할 의사가 없다 2%
	시행 후	① 참여하겠다 100%	② 보통이다 0%	③ 참여할 의사가 없다 0%
참여여부	시행 후	① 참여했다 96%		② 참여하지 않았다 4%
마을 안전 기여도	시행 후	① 기여했다 98%	② 보통이다 2%	③ 기여하지 않았다 0%
안전네트워크 기여도	시행 후	① 기여했다 94%	② 보통이다 6%	③ 기여하지 않았다 0%
안전인프라 기여도	시행 후	① 기여했다 96%	② 보통이다 4%	③ 기여하지 않았다 0%
사업의 만족도	시행 후	① 만족한다 94%	② 보통이다 6%	③ 만족하지 않는다 0%
안전네트워크 만족도	시행 후	① 만족한다 92%	② 보통이다 8%	③ 만족하지 않는다 0%
안전인프라 만족도	시행 후	① 만족한다 96%	② 보통이다 4%	③ 만족하지 않는다 0%
안전 체감도	시행 전	① 안전하다 54%	② 보통이다 38%	③ 안전하지 않다 8%
	시행 후	① 안전하다 92%	② 보통이다 8%	③ 안전하지 않다 0%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 안심마을사업 주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내용 재구성

더하여, 사업 시행 후 분야별 안전체감도 변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의 효과가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안전체감도가 향상되었으며, 산사태, 태풍, 홍수, 대설, 화재, 가뭄과 같이 자연재난에 대한 체감도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영역에서도 강도, 절도, 학교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등 생활밀착형 범죄피해예방에 대한 안전체감도 역시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임을 감안했을 때,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체감도가 11.5%, 보행사고 안전체감도가 18% 정도 향상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 볼 수 있다.

▼ [표 3-13] 북상면 안심마을사업 시행 후 분야별 안전체감도 변화

구분	1차 조사(%)	2차 조사(%)	차이(%)
살인	93.5	94.5	+1
강도	84	92.5	+8.5
절도	83	90.5	+7.5
성폭력	89	92.5	+3.5
학교폭력	90	95.5	+5.5
가정폭력	86	90.5	+4.5
교통사고	74.5	86	+11.5
보행사고	67	85	+18
추락사고	73	87.5	+14.5
화재	62.5	83.5	+21
시설물붕괴	72	88	+16
가스폭발	74.5	89.5	+15
중독	77	93.5	+16.5
태풍	65	87	+22
홍수	70	92	+22
산사태	64	86.5	+22.5
산불	68	81.5	+13.5
대설	61.5	83	+21.5
가뭄	66.5	85.5	+19
전염병	77	91.5	+14.5

자료 :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 안심마을사업 주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내용 재구성

3. 시사점

1) 관련 기관 간 협력형 문제해결 방식

스코틀랜드의 농촌범죄대응 파트너십(SPARC)은 모두 16개의 유관기관이 농촌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고 7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각각의 책임기관을 정하고 문제의 해결방법, 성공지표 등을 제시하고 이를 협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심마을사업의 경우 역시, 시설안전, 재난안전, 주거안전 등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한 기관을 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기관별 추진할 사업을 제시하여 추진하는 협력형 문제해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범죄예방은 마을, 지자체, 경찰 중 한 주체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비롯하여 관계 기관이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경우 4년간 과제로서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범죄 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와 세부전략을 토대로 평가지표를 세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안심마을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중앙부처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면 추진하는 1년 단기사업으로서, 각 주체별 사업 및 활동내용을 정해놓고는 있으나 1년이라는 기간동안 관련 기관 간 협력의 지속성과 주민공동체의 자립성이 담보가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스코틀랜드 경찰은 SPASC의 주요 구성기관이며, 동시에 농촌지역 안전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범죄예방과 피해자구호, 수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범죄 특성인 농작물 도난, 농기 및 농업용 장비 등의 도난과 훼손, 농산물 창고 등의 방법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 그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농촌주민이 직접 생활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예방치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찰을 배제한 채 관련 타 일반 행정기관 중심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안심마을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 범죄예방은 경찰의 우선 업무이며, 고령노인이 다수인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경찰의 일상적인 마을 순찰과 지역주민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범죄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범죄예방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범죄예방이라는 분명한 목표 설정 아래 이를 추진할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 그 외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관련 주체와 그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협력이 지속성을 가지고 주민공동체가 자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표준 안전디자인 시설 및 장치 적용

스코틀랜드 경찰은 SBD 표준을 주택설계 및 시공, 농기계장비 제작, 근린시설 조성 등의 범죄예방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 경찰을 포함하여 영국경찰은 SBD 표준 설계에 경찰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농촌 환경, 주거문화, 농장비나 농기계의 특성 등을 반영한 SBD 표준제 도입이 필요하다. 건축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CPTED 기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 일상생활속에서 주로 접하는 농기구 등에도 CPTED가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즉, 그동안의 CPTED 전략이 주로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로의 조명, 담장설치, 방어공간, 출입문관리 등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범죄예방 전략이라면 SBD 표준제는 CPTED 전략을 포함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주민 개개인의 동의 및 직접적인 행동에 의하여 범죄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주민의 인식개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 범죄예방 의식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스코틀랜드 경찰은 SBD 표준을, 스코틀랜드는 7개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각 과제에 대해 시민에게 홍보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잠재적 범죄자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매뉴얼을 개발하여 주민이 사전 사고예방이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북상면 안심마을사업의 경우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시스템으로, 안전시설 보수 및 방범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지역주민들이 안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필수적으로 하였다. 즉,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주민공동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이 있었으며, 그 결과 안전체감도가 매우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같이 범죄예방 방법과 시설개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치단체, 경찰, 그리고 농장비 임대업자나 판매업자 등 농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주체가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고, 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인 방법의식화 노력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나 범죄예방 전략은 단순하고 쉽게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범죄예방의 첫 번째는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이며, 특히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공동체문화를 회복시키는 것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노인우울감, 노인자살, 노인빈곤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촌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마을 환경범죄 측면에서의 접근

스코틀랜드의 경우 불법쓰레기 투기 범죄예방을 위한 과제도 추진하고 있다. 열악한 정주환경은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본다면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조성 및 이를 위한 활동도 매우 중요하며, 기업 및 공장의 불법쓰레기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단속, 감시활동, 신고매뉴얼 보급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농촌마을에서의 쓰레기투기는 마을 안 골목길이나 나대지, 하천 등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관저해는 물론 열악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마을주민 간 갈등 또는 범죄발생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스코틀랜드의 사례는 정부 및 관련 기관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환경 개선 활동을 위한 캠페인이나 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켜 지역갈등과 범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마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5) 지역공동체 주체, 합동컨설팅, 지역사례 공유 등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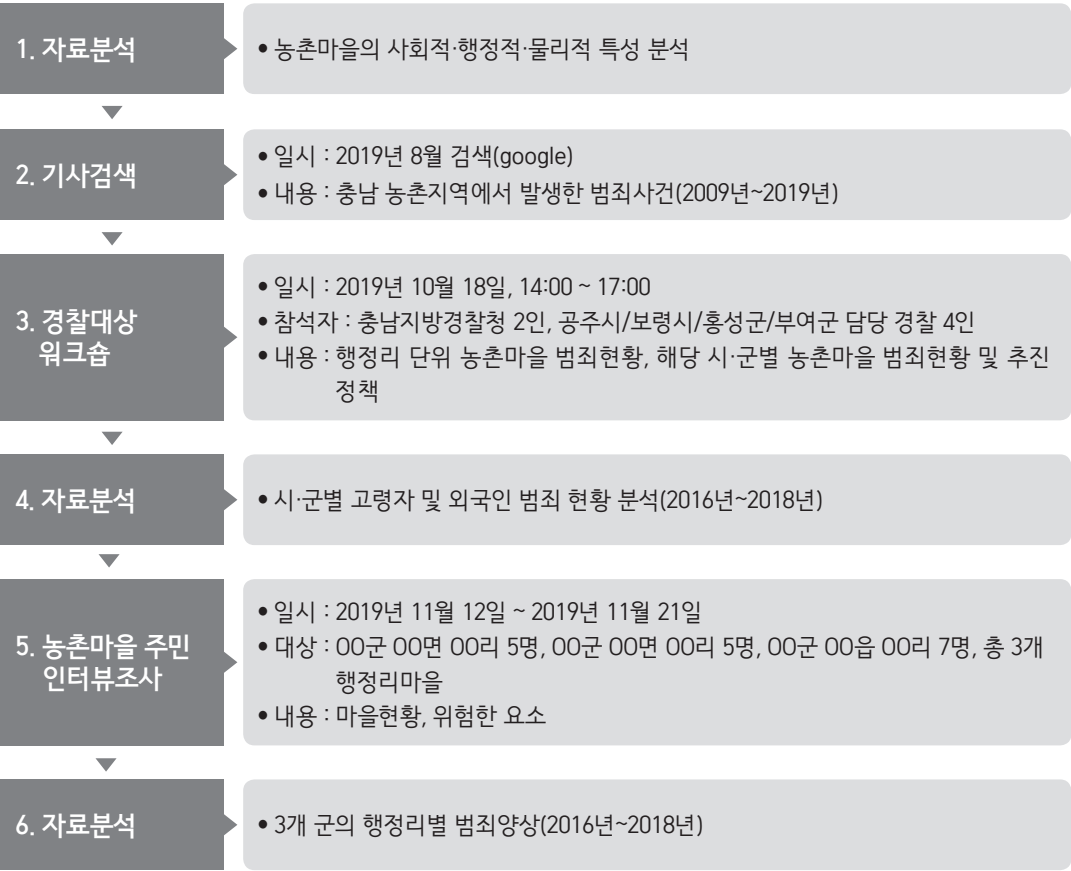
안심마을사업은 관련 기관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주체로 공동체 활성화를 토대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선정 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 추진과정에서 민, 관, 연의 합동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지역여건과의 부합여부와 보완사항 등을 점검을 받는다.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 보고 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사례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농촌마을이기 때문에 더욱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로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 노인들의 고립을 예방하고 범죄예방을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사례를 공유함으로써의 정보습득, 사업 보고 대회를 통한 자부심 부여 및 마을에 대한 애착심 향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안심마을사업의 시스템은 농촌마을 범죄예방사업 추진 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충남 농촌 범죄의 특성과 예방정책 현황

1. 농촌마을 특성 및 범죄현황

충남의 농촌마을 특성과 범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①자료분석을 통해 농촌마을의 사회적·행정적·물리적 특성 분석, ②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충남 농촌지역 범죄사건 기사 검색, ③범죄업무 담당자 대상(경찰) 워크숍, ④경찰청 내부자료 분석을 통해 시·군별 고령자와 외국인 범죄 특성 분석, ⑤충남 농촌마을 3곳 주민 대상 인터뷰 조사 실시, ⑥충남 3개 군 행정리별 범죄현황 자료분석(각 해당 군 경찰서 내부자료)을 진행하였다.



[그림 4-1] 충남 농촌마을 특성 및 범죄현황 분석 프로세스

1.1 사회적 · 행정적 · 물리적 특성

충남연구원(2013)이 충남의 농촌마을 인구특성을 조사한 연구자료²⁴⁾에 의하면, 충남 농촌마을의 평균 인구는 245.19명이고, 중위수는 147명, 최빈값은 120명, 최소인구는 6명, 최대인구는 6,443명이다. 즉, 일반적으로 120명에서 150명이라 할 수 있지만 농촌마을에 따라 인구규모의 편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남 농촌마을의 평균 청장년인구수는 155.66명이고, 중위수는 85명, 최빈값은 52명, 최소값은 1명, 최대값은 4,510명이다. 즉, 청장년인구수는 일반적으로 52명에서 85명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농촌마을에 따라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전입인구수는 44.02명이고, 중위수는 5.00명, 최빈값은 0.00명으로, 농촌마을의 일반적인 전입인구수는 5명 이내라 할 수 있다. 이 역시 농촌마을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

▼ [표 4-1] 충남 농촌마을의 인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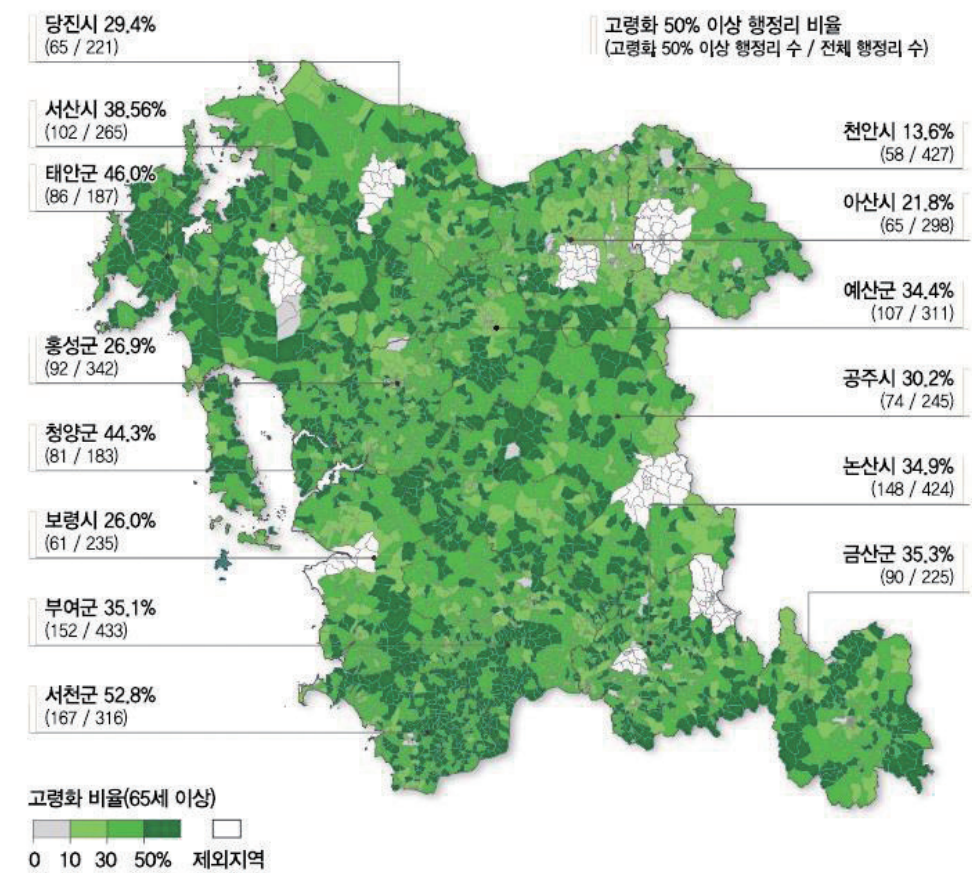
구분	인구			
	인구수	가구수	청장년인구수	전입인구수
단위	명	호	명	명
평균	245.19	107.10	155.66	44.02
표준편차	371.49	157.11	268.56	193.41
중위수	147.00	67.00	85.00	5.00
최빈값	120.00	50.00	52.00	0.00
분위수	100%	6,443.0	4,510.0	5,788.0
	99%	2,000.0	1,393.0	727.0
	95%	810.0	545.0	167.0
	90%	447.0	298.0	80.0
	75%	230.0	142.0	23.0
	50%	147.0	85.0	5.0
	25%	98.0	51.0	0.0
	10%	67.0	30.0	0.0
	5%	54.0	22.0	0.0
	1%	35.0	10.0	0.0
	0%	6.0	1.0	0.0

자료 : 충남지역 농촌마을의 일반적인 모습을 분석하기 위해 2011년 12월~2012년 1월까지 이루어진 마을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6개 시·군 4,544개 마을(행정리)를 대상으로 추진

24)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2013, 충남연구원)

기대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에 따라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됨에 따라 2017년 기준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의 17.2%를 차지하였으며, 206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충남 농촌지역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 높다. 행정리에서 고령화가 50% 이상인 곳의 비율을 살펴보면, 서천군이 52.8%, 태안군 46.0%, 청양군 44.3%, 서산시 38.56%, 금산군 35.3%로, 천안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행정리에서 심각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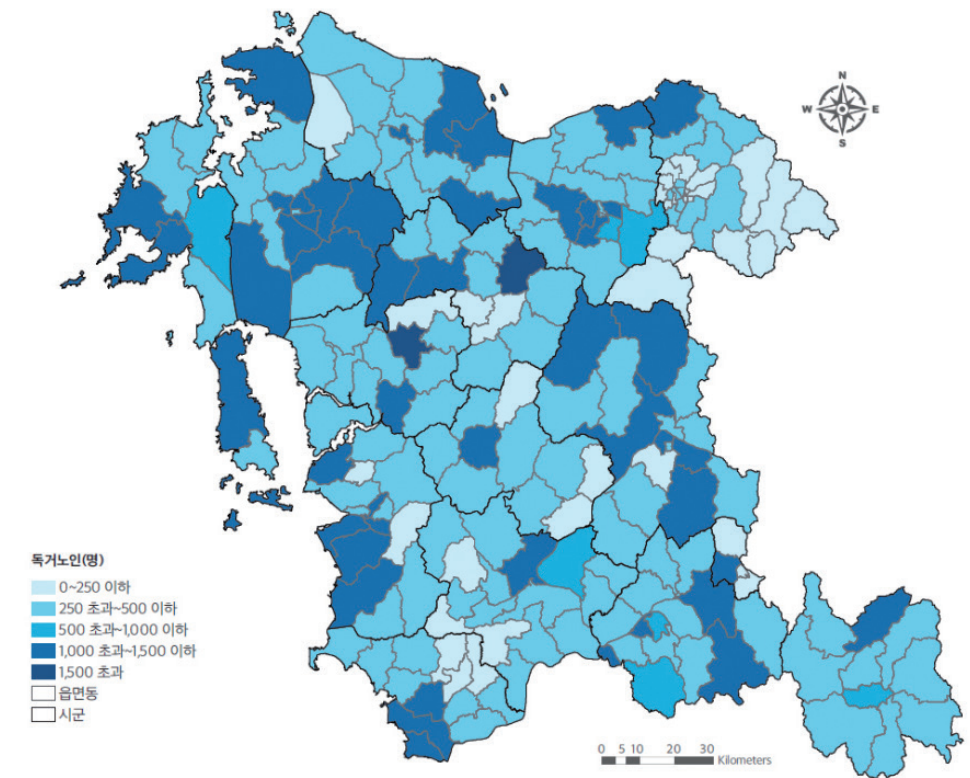


[그림 4-2] 충남 농촌마을 고령화 비율

즉, 충남의 농촌마을 인구규모 및 구성은 마을별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의 농촌마을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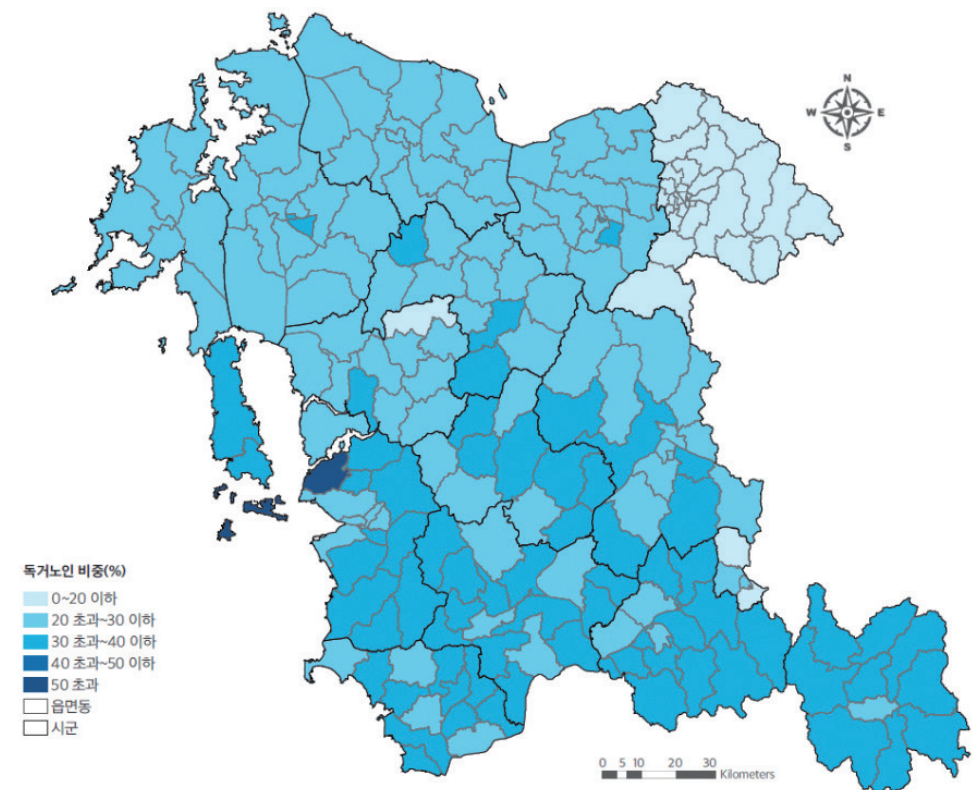
충남의 독거노인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충남의 독거노인은 91,903명으로 충남 전체인구의 약 4.3%이다. 읍·면·동별로는 예산군 예산읍이 1,852명으로 가장 많고, 홍성군 홍성읍이 1,701명,

태안군 태안읍이 1,487명 순이다. 충남 전체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은 25.4%로 노인 4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읍·면·동별로는 보령시 오천면이 5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령시 주포면이 38.7%, 아산시 온양6동이 38.1%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의 비중은 충남의 남쪽 지역인 농촌지역 중심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료출처 : 충남 정책지도(2019, 충남연구원)

[그림 4-3] 충남 읍·면·동별 독거노인의 공간적 분포



자료출처 : 충남 정책지도(2019, 충남연구원)

[그림 4-4] 충남 읍·면·동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중

충남연구원(2013)에서는 과소화 및 고령화 된 마을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금산군 254개 행정리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분석하여 특성을 도출하였다. 금산군 254개 행정리별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문헌분석, 설문조사 및 인터뷰조사에서 도출된 요소를 토대로 지표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물론 금산군 사례가 충남 농촌마을을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충남 농촌마을의 공간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례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된 농촌마을의 공간구조 특성 지표 8개 중 도로율, 도로와의 접근성,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의 4개 지표에 대한 분석결과를 활용하였다. 이들 지표는 농촌마을의 물리적·행정서비스와 관련되는 것들이며 치안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표 4-2] 공간구조 특성 분석 지표 및 분석방법

구분	분석방법
도로율	행정리별 도로율(도로면적/행정리 면적의 비율)
도로와의 접근성	8m이상 도로와 8m 이하 도로를 추출하여 각 행정리의 중심점까지의 거리 분석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	군청 위치에 point data를 구축하여 접근성 지도 생성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읍·면소재지의 위치에 point data를 구축하여 접근성 지도 생성

우선 도로율의 경우 금산군 전체 평균이 3.68로 도출되었으나, 1.5 이상인 마을이 약 20%에 불과하여 농촌마을의 도로율은 읍·면소재지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도로와의 접근성 역시 -2.5 미만의 행정리도 6곳이나 있으며, 0.5 초과인 마을은 254개 중 약 30%인 87곳에 불과하여 농촌마을별 편차가 크나,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0.5 초과인 마을이 88곳으로 역시 약 30%에 불과하며, -2.5 미만이 2곳, -2.5~-1.5 미만인 곳도 15곳이나 되어 행정의 중심지까지의 접근성 측면에서 마을별 편차가 있으며 접근성이 매우 좋지 않은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 역시 -2.5 미만의 마을도 6곳이나 있으며, 0.5 초과인 마을이 90곳으로 금산군 전체 행정리 농촌마을 중 약 35%에 해당하여 접근성이 매우 불량하다 할 수 있다.

즉, 행정리 농촌마을의 행정서비스는 마을별 편차가 심하나, 대체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소외는 치안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것이며, 이는 또한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의 편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표 4-3] 금산군 농촌마을 공간구조 특성

도로율(개수)		도로와의 접근성(개수)		군청으로부터의 접근성(개수)		읍·면소재지로부터의 접근성(개수)	
-0.5 미만	76	-2.5미만	6	-2.5미만	2	-2.5미만	6
-0.5~0.5	148	-2.5~-1.5	9	-2.5~-1.5	15	-2.5~-1.5	14
0.5~1.5	13	-1.5~0.5	30	-1.5~0.5	62	-1.5~0.5	43
1.5 초과	17	-0.5~0.5	122	-0.5~0.5	87	-0.5~0.5	101
		0.5 초과	87	0.5~1.5	68	0.5 초과	90
				1.5 초과	20		

1.2 범죄사건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범죄사건 기사 검색 결과, 기사가 많이 검색되지는 않았다. 재물손괴나 납치 범죄가 있었으나 대부분 금품이나 농산물 절도, 어업 또는 농업 도구 절도 등 절도 범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 [표 4-4] 충남 농촌마을 범죄사건

해당 시군	주요내용
예산군 덕산면 (2019. 5.)	- 흥선대원군 부친 남연군 묘 인근 가족 납골당을 둘러싼 측백나무 70여 그루, 이와 약 1km 떨어진 밤나무 농장에서도 2천 그루 가운데 5백 그루 정도에 전동 드릴로 적게는 1개, 많게는 3개까지 구멍이 뚫려 있었음 - 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나무에 뚫린 구멍의 형태가 비슷하고, 거리가 인접한 것으로 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
서산/태안 농촌지역 국도변 (2018. 2.)	- 허리끈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전신주에 기어 올라가 절단기로 구리전선을 절단하는 수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전선절도 행각을 벌인 절도범 검거 구속 - 태안경찰서는 통과차량 및 CCTV 영상분석을 통해 용의자 검거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2011. 9.)	- 집주인이 집을 비운사이 도둑이 창문을 깨고 들어와 현금 140만원과 감정가 400여만원의 조선시대 관찰사 임명서 등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
서산시 팔봉면 호리 (2011. 9.)	- 바닷가에 정박중이던 피해자의 소형 어선이 도난당하는 사건 발생
당진시 정미면 (2014. 3.)	- 빈집에서 예금통장을 꺼내와 현금을 인출한 뒤 도로 갓다 놓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900여만원 을 인출한 용의자 검거
부여 (2014. 3.)	- 빈집 창고에 들어가 콩과 파이프 등 농산물을 훔친 용의자 등 9명 검거 - 지역 선후배 3~4명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4년 1월 말까지 밤에 한산한 틈을 타 자신의 아버지 화물차를 이용, 부여군 일원을 돌며 창고에 보관중인 콩 30kg(시가 10만원)과 철재파이프(시가 240만원) 등을 훔친 사건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12. 4.)	- 농촌마을에 침입해 9만원을 절도하다 들키자 노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후 증거인멸을 위해 방화까지 저지른 용의자가 범행 4개월여만에 검거 - 무직인 채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용의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노부부만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범행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11. 12.)	- 한 가정집에 좀도둑이 침입해 유명브랜드 점퍼를 훔쳐 달아나다 주인에게 발각돼 현장에서 잡힘 - 집주인이 잡고 보니 아산 시내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2010. 여름)	- 은행나무 길을 지나던 여고생을 지나던 승용차가 강제로 태우고 달아난 납치사건 발생 -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시민과 경찰의 추적으로 경기도 평택에서 범인을 잡음

자료출처 : https://www.google.co.kr/?gws_rd=ssl#spf=1570070205678, 2019. 8월 검색

1.3 경찰의 농촌마을 범죄양상 인식조사

충남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서 범죄예방 업무 담당자 대상 워크숍에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는 역시 절도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농촌마을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절도가 가장 많으며, 이 중에서도 금전적 가치가 높은 특용작물 절도가 많다. 이 외에도 노인들 간 폭력이나 시비, 다툼에 의한 폭력범죄와 보이스피싱의 지능형 범죄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신고가 된 것에 대한 범죄로서, 이웃이기 때문에 또는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여 신고를 꺼려하는 암수사건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다수에 의한 범죄보다 동일인에 대한 범죄 신고가 많다는 것 역시 도시지역과는 차별화되는 양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농촌마을 주민들은 범죄발생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귀농인하고의 트러블이 범죄발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두운 환경 및 다문화가정 등 환경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범죄두려움이 많다. 한편, 관광지, 읍·면 소재지와와 근접성, 공장 밀집, 공·폐가 밀집 등은 범죄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주거침입 범죄가 많다.

▼ [표 4-5] 충남 농촌마을 범죄양상

구분	주요내용
범죄 대상	- 특용작물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 절도 범죄가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범죄행위자는 타 지역 사람임 - 노인 대상 범죄가 많이 발생함. 60세 이상 노인 대상 5대 범죄 중 50%가 절도, 30%가 폭력(노인들 간 폭력, 시비, 다툼), 보이스피싱 등임 - 농촌마을의 범죄는 대부분 빈집털이와 특용작물 절도 범죄임
범죄 신고	- 알려지는걸 싫어하고 이웃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해서 암수사건이 많음 -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신고를 하지 않음 - 동일인에 대한 범죄 신고의 경우가 많음
범죄발생 요소	- 범죄에 대해 무감각함 - 귀농인하고의 트러블이 범죄를 유발함 - 실질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환경이 어두워 범죄두려움이 큼 - 다문화가정 수와 범죄발생은 비례하지는 않지만 범죄두려움을 유발함 - 관광지, 읍·면 소재지와 근접, 공장 밀집, 공·폐가 수는 범죄발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범죄장소	- 공·폐가나 나대지보다 주거 침입범죄가 많이 일어남. 특히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발생하는 범죄가 많음

시·군별로 살펴봤을 때 역시 농산물 및 특용작물 절도, 노인학대,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절도범죄의 경우 농산물뿐만 아니라 가축 절도도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나 여성 독신자의 범죄두려움 등 앞서 언급한 농촌마을의 어두운 환경 및 독신자의 범죄두려움 등 농촌마을의 범죄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표 4-6] 충남 시·군별 농촌마을 범죄양상

시·군	주요내용
부여군	- 수확철에 들건이 절도범죄가 많이 일어남 - 창고털이가 많이 일어남
보령시	- 대부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함 - 농산물 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축(개) 절도도 일어나고 있음 - 노인학대(나이드신 분이 더 나이드신 분을 학대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
홍성군	- 농촌지역이지만 큰 도로가 많고 가로등이 없어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남 - 노인들이 교통법규에 대해 인식이 저조함
공주시	-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폭력범죄가 많지는 않음. 대부분 조부모와 살거나, 혼자 사는 애들이 많은데 거의 방치 수준임 -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인삼, 갯잎 등 특용작물 절도가 많으며 대부분 타 지역 사람임



[그림 4-5] 충남 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서 담당자 워크숍

1.4 주민 범죄 의식조사

충남이 서해안과 접해 있으면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 주민의 범죄 의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안에 접한 A 마을, 전형적인 농촌의 B 마을, 읍소재지와 근접해 있는 C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선 각 마을별 현황을 살펴보면, 인구규모는 3개의 마을 모두 앞에서 언급한 충남 농촌마을의 평균 이상이며, 고령자 비율이 A와 B는 전체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C의 경우 20% 정도로 마을별 편차는 있지만 고령화 비율은 높다. 특히, 외국인 비율을 보면, B 마을은 15% 정도이나 A 마을은 35%, C 마을은 50% 정도로 외국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 마을은 관광객 및 어업활동, B 마을은 시장이용, C 마을은 대학생에 의한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C 마을의 경우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다른 마을보다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A와 B 마을은 치안서비스는 좋다고 볼 수 있다. 3개 마을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C 마을은 작년에 1개 설치한 반면, A 마을은 6개, B 마을은 3개 설치되는 등 편차를 보이고, 가로등은 3개 마을 모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표 4-7] 대상 마을현황

구분		A (00군 00면 00리)	B (00군 00면 00리)	C (00군 00읍 00리)
인구 구성	인구	120세대(약 250명)	약 790명	약 600명
	귀농(어)인	6명	15명	없음
	고령자	약 50%	약 60%	약 20%
	독거노인	약 20%	약 10%	약 3%
	외국인	약 35%	약 15%	약 50%
행정 서비스	유동인구	타 지역에서 오징어잡이 배, 낚시 관광객, 캠핑족 등 1년에 100만명 정도	타 지역에서 시장 이용하러 많이 옴	대학생이 약 1000명 정도
	면/읍사무소	약 8km 떨어져 있음	두 개 마을 중 한 곳은 근접, 한 곳은 약 600m 떨어져 있음	약 3km 떨어져 있음
안전 장치	경찰서/지구대	해경, 육경, 119 근접		지구대가 2km, 경찰서가 1km 이내에 있음
	CCTV	마을내 6개 설치	주 길목에 3개 설치	마을회관 앞에 1개 설치 (2018년)
특이사항	가로등	많이 부족해 어두움(특히 항구주변에는 4개밖에 없음)	많이 부족해 어두움(제대로 켜지지 않는 것도 많음)	많이 부족해 밤에 어둡고 후미짐
		항구를 끼고 있는 어촌마을로 주민이 주로 어업에 종사하는 행정리	법정리로는 1개이나, 2개 마을로 되어 있는 농촌의 특성을 가진 행정리	주변에 대학교 3개가 있어 원룸이 많지만 노후되어 외국인 노동자가 많고, 대학생 유동인구가 많은 행정리

위험 또는 두려움을 느끼는 곳으로 마을안 골목길이나 항구주변 등 어두운 곳을 들고 있으며, 외국인 비율이 반을 차지하고 있는 C 마을의 경우 외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들고 있다. 또한 항구를 끼고 있는 A 마을의 경우에는 방파제에 난간이 없어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대지 및 공폐가는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변이 어둡거나 짐승이 나타나는 것에 의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경찰의 인식조사에서 어두운 환경과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로 나타나는 범죄유형 역시 농수산물이나 농기계 절도, 보이스피싱 등 경찰 인식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노인들 간 폭력은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관광객이 많은 A 마을은 관광객과의 다툼, B 마을의 유동인구끼리의 범죄, 외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C 마을은 외국인들끼리의 다툼 등 원주민들 간 범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유동인구에 의한 범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농촌마을 주민들은 행정서비스가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환경, 외국인에 대하여 위험 및 두려움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양상은 농수산물 절도나 보이스피싱, 주민과 관광객 또는 외국인들간 다툼 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두려움 역시 가지고 있다. 또한 관광객이나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범죄발생이나 범죄두려움뿐만 아니라 쓰레기 문제, 이에 따른 마을경관 저해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에서는 순찰을 하거나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마을에 따라 대상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A 와 B 마을의 경우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C 마을의 경우 마을이장의 요청에 의해 마을 노인 20~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 해소를 위해 주민들은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의 필요성, CCTV나 가로등의 방법시설 설치로 밝고 안전한 마을 조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CCTV가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에서도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을 만큼 방법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또한 벽화나 경관조성, 마을 청소 역시 마을을 밝고 안전하게 하는데 기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 비율이 높은 A 마을의 경우 독거노인의 범죄피해를 우려하며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 방안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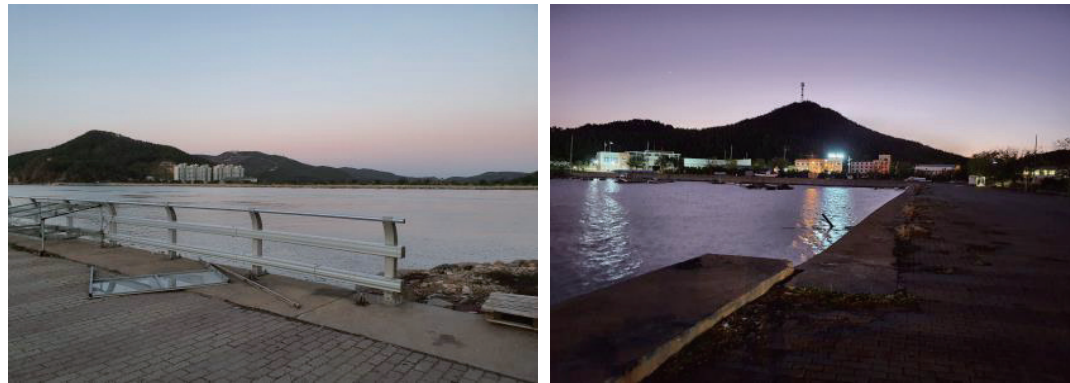
마을 현황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저녁 6시~7시 사이에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 마을 모두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게다가 보차로 구분이 없는 좁은 골목길이 많아 특히 밤길 보행안전이 우려되어 범죄두려움은 물론 사고위험까지 염려되는 상황이다.

▼ [표 4-8]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마을별 위험 및 두려움 요소, 범죄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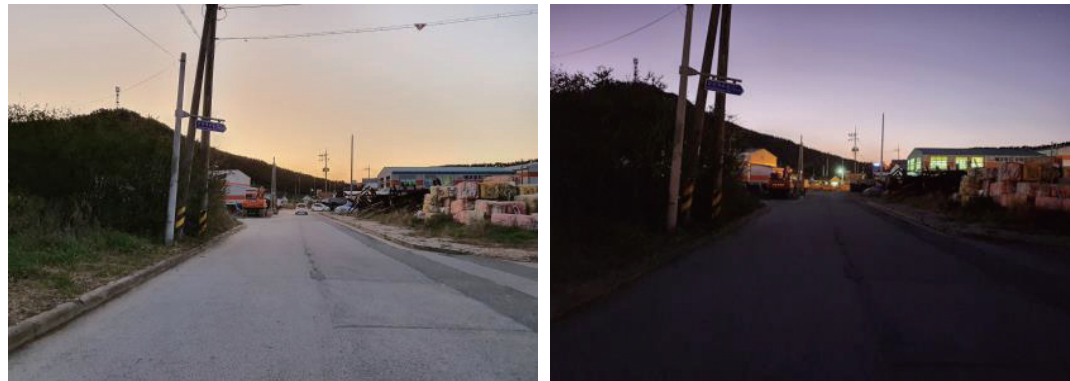
구분	A (00군 00면 00리)	B (00군 00면 00리)	C (00군 00읍 00리)
위험, 두려움을 느끼는 곳	- 방파제에 난간이 없어 위험(실족사 많이 발생) - 어두운 항구주변 - 마을안 대부분 어두움	- 마을내 어두운 골목길 - 마을 주변 어둡고 침침한 공동묘지	- 마을내 골목길이 대부분 어두움 - 외국인이 많은 곳
나대지, 공폐가에 대한 두려움	- 없음	- 폐가 앞으로는 어두워서 잘 안다님 -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짐승이 있을 때는 무서움	- 원주민들은 두려움 없음 - 학생들, 외국인들은 두려워함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 범죄는 발생하지 않음 - 범죄두려움은 항상 느낌 - 의사소통이 안되어 무서움	- 범죄는 발생하지 않음 - 범죄두려움은 있음	- 범죄는 발생하지 않음 - 범죄두려움은 항상 느낌
범죄유형	- 수산물 절도 발생 - 주민과 관광객과의 시비, 다툼 (관광객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양식장 해산물 절도 등) -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	- 옷, 돈, 저금통장, 농작물, 농기계 절도 발생 - 오일장이 활성화되어 유동인구에 의한 범죄발생 가능성 있음 - 주민 간 다툼이 있어도 노출안됨	- 빨래가 없어지는 경미한 절도 발생 - 외국인들끼리의 다툼
특이사항	- 어업인들이 많아 새벽 2, 3시쯤 나가는데 어둡고, 밤에는 어두워서 잘 나가지 않음 - 도둑은 없으나, 폭력, 실족사가 많음	- 외국인, 밤에 어두워 두려움을 많이 느낌 - 외국인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됐을 때의 범죄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많지만 외국인과 공생해야 하는 상황 - 쓰레기 문제가 시급(외국인의 의식부족)

▼ [표 4-9] 주민의 마을별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 해소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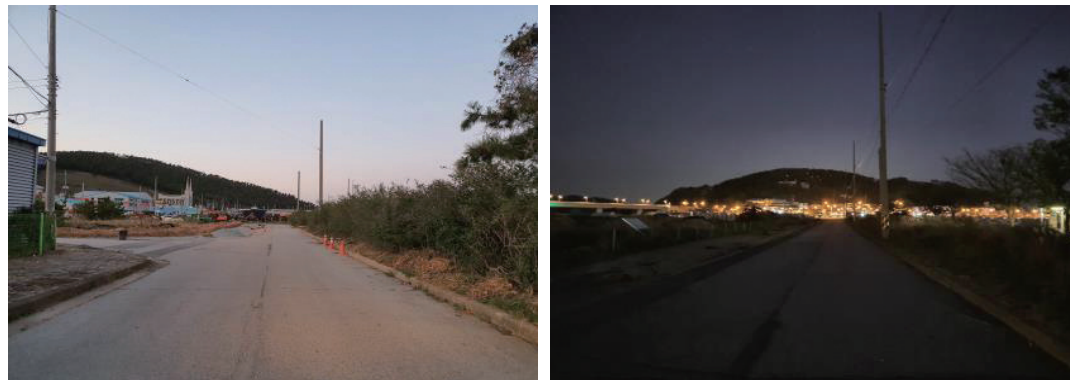
구분	A (00군 00면 00리)	B (00군 00면 00리)	C (00군 00읍 00리)
경찰서 실행 정책	- 이장들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 진행	- 단체장들 회의에서 공지하고 있음 - 예전에는 순찰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음	- 지구대에 요청하여 마을노인 20~30명 대상 범죄예방, 안전관리, 화재예방 교육 진행 - 지구대에서 하루에 3번 순찰
필요한 사업	- 마을주민 전체 대상 범죄예방, 생활안전 교육 - 독거노인 대상 위급 시 예방가능한 방안 - 가로등 설치 - 경관조성 및 마을위험지역 알림 - CCTV 추가 설치 및 자체 관리가 능하도록 교육	- 골목길을 밝게 하기 위한 가로등이나 CCTV 설치가 가장 필요 - 벽화는 마을 분위기를 밝게하고, 주민 정서에 긍정적인 - 마을방송을 통한 범죄예방 교육	- CCTV 추가 설치 가장 필요 - 어두운 곳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가로등 설치, 벽화 등) - 정기적인 범죄예방 교육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홍보



항구주변에 난간이 있는 곳과 난간이 없어 위험한 곳



길가 주변에 풀이 무성하게 자란 나대지가 있으며 가로등도 없어 밤이 되면 어두움



어두워지면 가로등이 거의 없어 20m 앞에 사람이 있어도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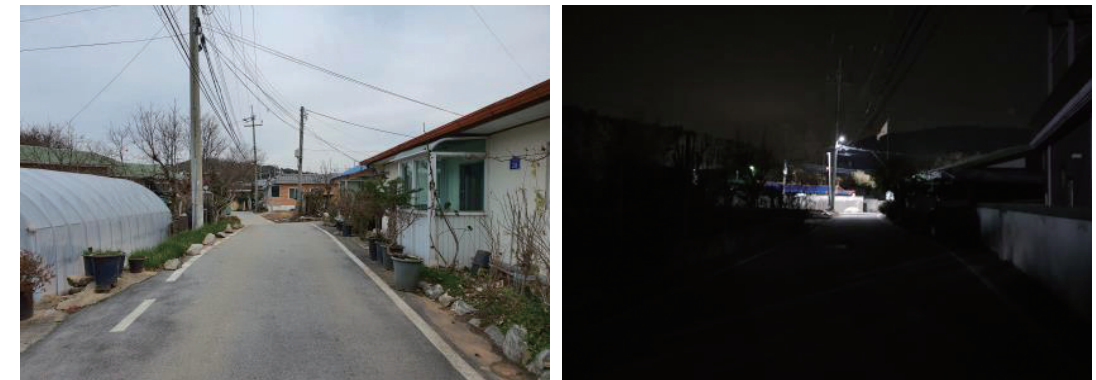
[그림 4-6] A 마을 현황



보행로 구분 없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마을안길



주변에 가로등 없는 관리하지 않은 나대지



가로등이 거의 없어 두려움을 느끼는 곳

[그림 4-7] B 마을 현황



경사진 지형에 노후된 원룸촌



외국인 야시장



밤이 되면 가로등이 없어 후미지고 어두운 입구



가로등이 거의 없어 두려움을 느끼고 침입하기 쉬운 구조



[그림 4-8] C 마을 현황

1.5 노인피해자 및 외국인 범죄실태

농촌지역에서의 주 범죄 대상인 노인피해자 범죄현황을 살펴보았다.

사회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면서 이 역시 범죄 환경에 노출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청 내부자료에 의하면 2016년에 1,557건이었던 노인피해자 범죄가 2017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2018년에 다시 증가하여 1,679건 발생하였다. 인터뷰 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절도와 폭력 범죄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절도 범죄의 경우 감소하거나 담보인 반면 폭력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이 두드러지면서, 주민의 의식조사 결과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경찰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통계라 볼 수 있다.

▼ [표 4-10] 충남 노인피해자 대상 5대 범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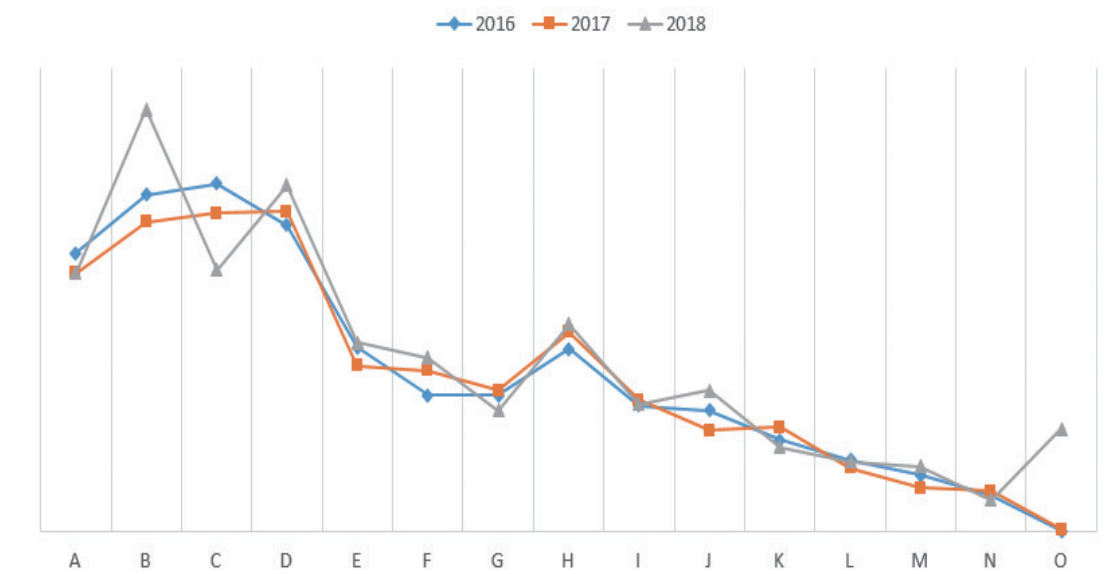
주요 지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9월 기준)
총계	1,557	1,524	1,679	1,415
살인	6	5	5	5
강도	5	4	3	2
강간, 강제추행	-	2	6	2
절도	871	811	873	785
폭력	675	702	792	621

자료출처 : 60세 이상 노인피해자 대상 범죄 현황(충남 지방경찰청, 2019)

본 연구에서의 농촌마을은 행정리 단위이나, 이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기가 어려워 충남의 시 단위는 도시지역, 군 단위는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노인피해자 대상 범죄 현황을 살펴보았다.

시·군별 60세 이상 노인피해자 대상 5대 범죄 건수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총 범죄 건수가 감소한 곳은 5곳으로 감소한 곳보다 증가한 곳이 더 많다. 이 중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군 단위 지역인 I~O의 7곳 중 3곳에서 총 범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농촌지역에서 역시 노인피해자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마을의 경우 향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더욱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A~H까지는 시, I~O까지는 군에 해당

[그림 4-9] 충남 시·군별 노인피해자 5대 범죄 발생 건수 추이(2016년~2018년)

다음으로 경찰 및 주민 인터뷰조사 결과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었던 외국인에 대한 범죄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 비율은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높으나, 전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의 비율이 높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외국인 5대 범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없이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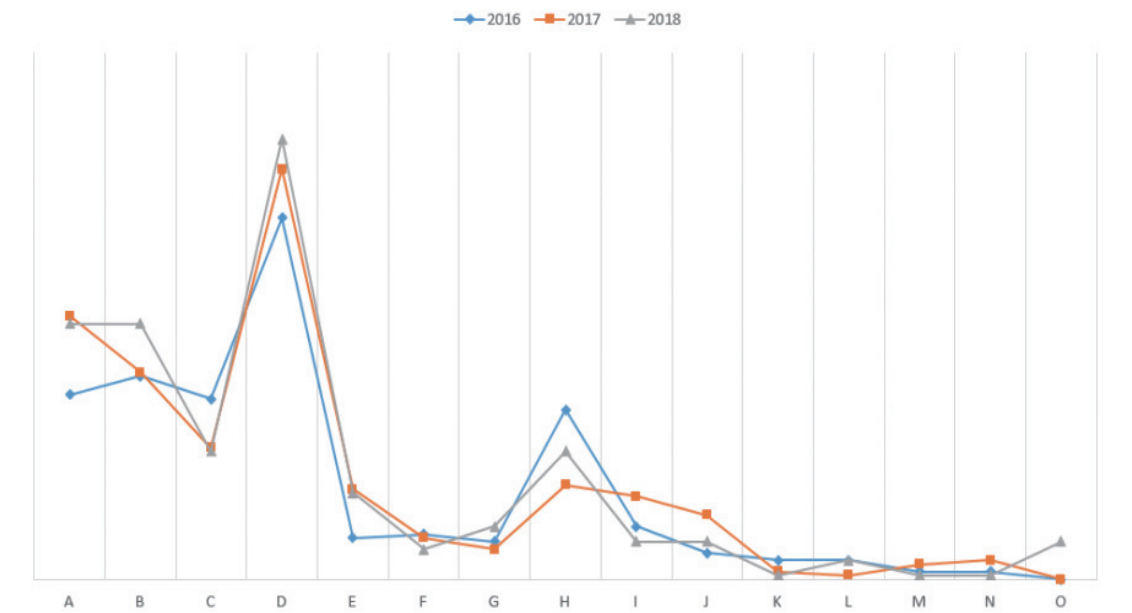
주요 범죄 유형별 만명당 범죄건수 순위로 보면, 2018년 기준 강간, 강제추행 범죄는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에서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절도 범죄는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없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비율이 높음에도 절도 범죄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M군과 같은 곳도 있는 반면, 범죄발생률은 높지만 외국인 비율 자체가 낮은 L군, O군과 같은 곳도 있어,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절도 범죄가 꼭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다. 폭력 범죄 역시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보다는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폭력 범죄가 꼭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농촌지역에서의 외국인 범죄는 도시지역에 비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 비율과 외국인 범죄발생률이 꼭 비례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강간 및 강제추행에 비해, 절도, 절도에 비해 폭력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 [표 4-11] 충남 15개 시·군 외국인 비율 순위(만명당, 2018년 기준)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순위	6	3	8	1	9	15	7	4	11	5	14	10	2	13	12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여 총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을 순위 매긴 것이며, A~H까지는 시, I~O까지는 군에 해당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A~H까지는 시, I~O까지는 군에 해당

[그림 4-10] 충남 시·군별 외국인 5대 범죄 발생 건수 추이(2016년~2018년)

▼ [표 4-12] 충남 15개 시·군 외국인 범죄발생률(만 명당,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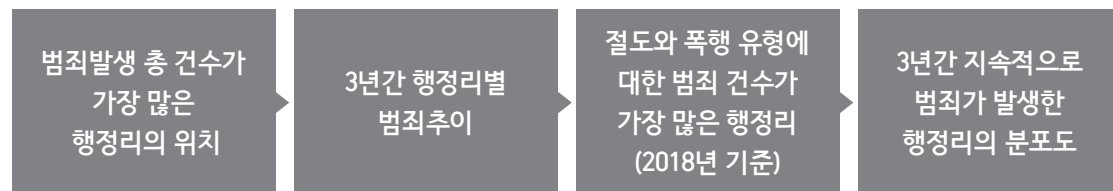
구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강간, 강제추행	2.59	5.38	4.83	3.87	3.64	0	2.67	3.76	0	0	5.68	0	0	0	0
절도	11.6	12.3	17.7	9.29	14.5	3.75	16.0	8.78	3.16	3.19	0	22.0	0	11.8	22.7
폭력	29.1	33.8	32.2	30.9	21.8	26.2	18.7	30.1	28.4	28.7	0	5.52	3.53	0	34.0

자료 :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외국인 인구 만 명당 범죄발생률을 나타낸 것임. A~H까지는 시, I~O까지는 군에 해당

1.6 행정리별 범죄실태

충남지방경찰청 및 군 경찰서의 협조로 3개 군에 대한 행정리별 범죄실태 현황자료를 외부 비공개 조건으로 구할 수 있었다. 이에, 본 보고서에는 자료에 대한 분석방법 및 결과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는 3개의 군 행정리별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행, 절도의 5대 범죄에 대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통계 데이터이다. 이에, 해당 군 지도에 총 범죄발생 건수 및 주요 범죄유형에 대한 범죄발생 건수 표기, 리별 범죄유형별 그래프 작성을 통하여 ①범죄 총 건수가 가장 많은 행정리의 입지적 특성, ②3년간 행정리별 범죄추이, ③2018년도 기준 5대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절도와 폭행 범죄 건수가 많은 행정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④3년간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행정리의 분포도를 살펴보았다.



[그림 4-11] 충남 3개 군 행정리별 범죄실태 분석내용

① 범죄발생 총 건수가 가장 많은 행정리의 위치

해당 군에서 범죄 총 건수가 많은 곳은 군청, 읍사무소가 위치한 행정리, 그리고 이와 근접해 있는 행정리였다. 하지만 군청이나 읍사무소와 근접하지 않고 떨어져 있지만 범죄 총 건수가 많은 행정리도 있었다.

② 3년간 행정리별 범죄추이

3개의 군 중 2개의 군은 3년간 행정리별 범죄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나, 1개의 군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범죄가 발생하는 행정리 역시 급속도로 많아지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읍소재지와 근접해 있는 행정리들 중 범죄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행정리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범죄유형별 3년간 누적 총 범죄건수로 살펴보면, 절도가 가장 많은 군은 1개 군, 폭행이 가장 많은 군은 2개 군이며, 다음 많은 범죄가 강간/강제추행, 살인, 강도 순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3년간 범죄 추이는 절도범죄보다 폭행범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3년간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한 행정리의 분포도

범죄가 발생한 행정리의 약 반 이상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범죄가 발생해왔으며, 이들 중 읍소재지나 면소재지에 속해있지 않는 행정리가 약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④ 2018년도 기준 5대 범죄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절도와 폭행 유형의 범죄 건수

절도와 폭행 범죄는 읍사무소에 위치하거나 이와 근접한 행정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절도와 폭행 범죄 유형 모두 발생하는 행정리가 약 1/3 ~ 1/2 정도이며, 범죄가 발생한 입지가 면소재지내에 있는 행정리와 그렇지 않은 행정리가 있어 범죄발생 행정리와 면소재지 입지 여부의 상관관계는 보기 어려웠다.

2. 농촌마을 범죄예방 추진정책

2.1 농산물 절도 예방 정책

농촌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농산물 절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강화계획²⁵⁾을 수립하고 있다. 10월과 11월이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시기로 범죄예방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농산물 보관창고와 재배지 위주로 공동체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농산물 보관창고에 CCTV 등 방범시설물이 지속적으로 설치됨에 따라, 최근 농산물 절도 발생이 공간털이에서 들건이 위주로 변화함에 따른 대책이다.

논이나 밭, 노지 등 농산물 재배지 및 빈집 순찰을 강화하고, 농산물 적체 차량 검문 검색,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리마을 차량 스티커” 부착, 마을 행사로 빈집이 많아질 때 “사전예약 순찰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마을 차량 스티커”는 2019년 기준 약 73,990매를 제작 활용하여 충남도 125,886농가 중 58.8%의 차량에 부착되었다.

또한 방범시설 설치 측면에서 농산물 보관창고 등의 방범시설 설치 보완 및 등급을 매겨 취약등급 보관창고를 대상으로 농가 주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 위주로 순찰을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1마을 1CCTV 설치”, 농산물 보관창고에 CCTV 및 보안등 등 범죄예방시설물 보완을 위해 지자체 및 농협과 협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서천군과 청양군의 경우, 농산물 보관창고 등에 이동형 블랙박스를 설치²⁶⁾하였으며, 그 결과 2019년 기준 최근 3년간 농산물 절도 발생이 없었다.

25) 2019년 9월 27일 작성된 충남지방경찰청 내부자료

26) 서천 : 농협·중부발전 협업을 통해 방범시설 설치예산 지원(187대), 청양 : 업체 선정 후 개별 농가로부터 설치 희망자 지원받아 구매 및 설치 진행(988대, 개인 비용으로 지출)

이 외에도 경로당이나 경작지 등을 방문, 또는 마을방송 자동통보시스템을 통하여 절도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자율적으로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치안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 [표 4-13]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 강화계획 주요 추진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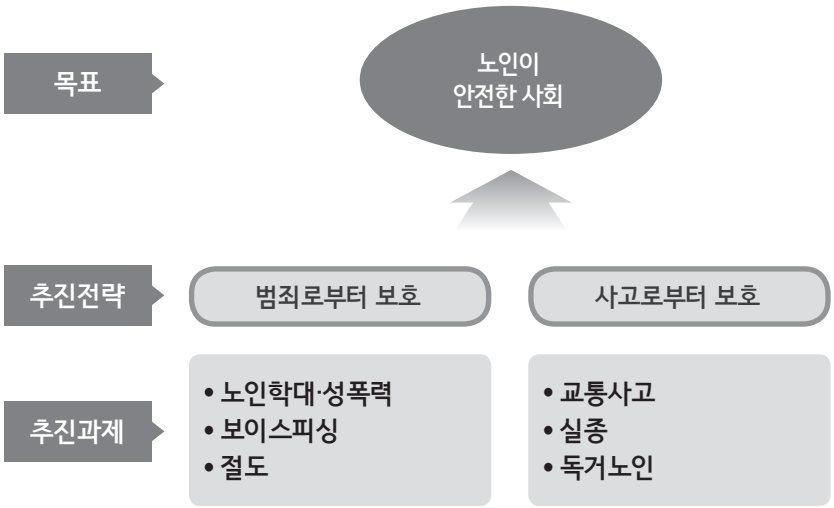
구분	주요내용
농작물 재배지 및 빈집 등 순찰활동 강화	- 농산물 주요 경작지 현황을 고려하여 순찰선에 범죄취약지 편입 : 주요 농산물 경작지 및 주변 야적지를 한시적 탄력순찰 장소로 지정, 비닐하우스 등 보관장소는 위치번호 스티커 부착하여 관리 - 주간시간대 빈집털이 대비 주거지 위주 순찰 실시 - 취약 지역/시간대에 목검문 실시 : 농산물 이동로·집하장 주변 도로 진출입로 검문·검색 강화, 농산물 적재 운반차량 집중 검문·검색 - “우리마을 차량 스티커” 부착 지속 추진 : 지역주민 농축산물 운반용 차량에 스티커 부착 - “사전예약 순찰제도” 활성화 : 가을철 마을 행사 등으로 빈집이 많아질 때 사전 신고 된 지역에 대해 집중 순찰하고 신청자에게 상황 통지
농산물 보관창고 대상 범죄예방진단 실시 및 순찰 강화	- 농산물 보관창고 등의 잠금장치 및 경보기 등 점검하여 미흡한 방범시설 보완 독려 - 각 경찰서별 농산물 보관창고 등급을 관리, 취약등급 보관창고에 연계순찰 강화 : 농산물 저장량, 위치, 거리, 방범시설 등을 기준으로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농가 주인이 필요로 하는 시간대 위주로 순찰 실시
범죄예방시설물 확충 등 치안인프라 구축	- “1마을 1CCTV 설치” 지속 추진 : CCTV 설치 필요성 검토 후 지자체에 설치 요청 - 지자체, 농협 등과 협업하여 농산물 보관창고 CCTV 및 보안등, 적외선 경보기 등 범죄예방시설물 보완 - 경찰서별 지역치안협의회, 협력단체 간담회 시 지원 확대 독려
농민 대상 홍보활동 전개, 자위방법의식 고취	- 마을단위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 적극 독려, 마을리더 등 지역 주민과의 인적 네트워크 강화 - 마을 경로당, 경작지 등 방문하여 농산물 절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 마을방송 자동통보시스템 “온마을 퍼지미” 활용하여 절도 사례 홍보 - “이웃감시 프로그램” 등 주민참여 치안활동 장려

2.2 고령자 대상 범죄예방 정책

충남 농촌지역의 심각한 고령화, 이에 따른 노인 대상 범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는 “노인안전 종합 치안대책”을 수립하여, 2012년부터 치안 취약요소를 기능별 과제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서, 범죄예방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노인이 안전한 사회를 목표로, 범죄로부터 보호와 사고로부터 보호의 2가지 추진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범죄로부터 보호를 위한 과제로는 노인학대 및 성폭력, 보이스피싱, 절도, 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과제로는 교통사고, 실종, 독거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를 범위로 하고 있으나, 독신자의 범죄두려움은 앞에서 언급되었던 충남 농촌 마을의 범죄특성 중 하나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범죄로부터 보호를 위한 3개의 과제와 독거노인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자료 : 2018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2018, 충남지방경찰청)

[그림 4-12] 충남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충남의 노인대상 범죄는 폭력, 지능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절도 범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노인안전 종합 치안대책”에서는 학대·성폭력, 보이스피싱, 절도 범죄에 대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학대·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과제는 노인 관련 기관 및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수사를 철저히 하고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측면에서는 전종수사팀 운영 및 추적수사 강화, 예방방법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절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 방법진단, 단속,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범죄예방 요령 홍보를 하고 있다.

▼ [표 4-14] 충남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중 범죄예방 관련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범죄로 부터 보호	노인학대·성폭력 예방 및 근절
	- 노인학대 사건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 피해노인 회복 및 필요한 복지서비스 지원 연계
	-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회적 관심 촉구
범죄로 부터 보호	노인 상대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 보이스피싱 전중수사팀 운영, 추적수사 강화
	- 범죄수법 및 예방방법 등 홍보활동 강화(노인 대상 대면홍보 강화)
범죄로 부터 보호	노인 대상 절도 피해 예방 및 피해 회복
	- 노인인구 밀집한 지역에 침입절도 예방 교육 진행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범진단 실시
범죄로 부터 보호	독거노인 밀집지역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관리
	- 범죄예방강화구역(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에 독거노인 밀집지역 추가
	- 독거노인 밀집여부, 범죄통계, 진단결과를 종합분석 후 순찰선, 거점근무지 지정 및 환경개선 등 특별관리
범죄로 부터 보호	범죄예방진단 및 다목적 순찰 등 예방활동 시 지자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및 범죄예방요령 등 홍보 병행

자료출처 : 2018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2018, 충남지방경찰청)

2.3 시·군별 농촌 범죄예방 정책

충남 시·군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 범죄예방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 기사검색을 하였고, 경찰 담당자 대상 워크숍 진행 시 부여군, 홍성군, 보령시 범죄예방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다.

우선 기사검색 결과,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크게 순찰, 방법시설 설치 및 확충, 홍보의 3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절도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나 마을행사 시 순찰을 강화하거나, 창고나 비닐하우스 등에 방범시설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범죄두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CCTV의 고비용 단점을 개선한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특히, 부여군은 마을 주출입구에 관제형 CCTV를 설치하고 마을안길에는 저비용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여 비용을 줄이면서 자연적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인

구가 많은 농촌지역에 해당되며 소외지역에서는 마을과 마을주민이 부담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CCTV를 설치해주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CCTV 작동법을 알지 못해 해당지역 관할 경찰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외에도 범죄피해 장소 및 범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필름을 설치하여 외부침입을 예방하는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그리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방문하거나 치안사랑방으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홍보를 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치안센터가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도서지킴이”로 임명하여 범죄 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치안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표 4-15] 충남 시·군 경찰서별 농촌지역 범죄예방 추진정책(기사검색)

해당 시·군	주요내용
금산군 (마중순찰제)	- 2014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범죄에 취약한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
	- 영농철에 접어들면서 농가 빈집털이범들이 증가 예상에 따라, 마을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경찰이 먼저 찾아가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제도
	-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하는 마중처럼 경찰이 주민을 맞이하고 두루두루 순찰
	- 5개 파출소/지구대별로 평소 순찰이 어려운 2~3곳의 오지마을을 선정해 중점적인 방범활동 추진
	- 5일장, 마을 단체관광, 개인 경조사 참석 등 마을별 특정일을 미리 파악한 뒤 선제적으로 대응
아산, 서천	- 음봉면 월량수변공원 및 도고선장 농촌마을 입구 등 총 30개소에 스마트 가로등 (블랙박스와 가로 등이 결합된 형태)설치
아산	- 마을회관에 가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및 여름철 더위 피해 예방법 등 방송
청양 (도보순찰)	- 5일장날 주민 접촉을 통해 치안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도보순찰
청양 (적외선 경보기)	- 농산물 수확철에 도난 우려가 높은 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적외선 경보기 설치
	- 적외선 경보기 300대를 구입(농협중앙회 청양군지부의 협조)하여, 범죄우려 장소에 대한 정밀 방범 진단 후 각 읍, 면 단위로 배부하여 경찰관이 직접 해당 장소에 부착
	- 1대당 1만원으로 저렴하며 누구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6~12m이내 사물이 접근하면 물체를 감지해 25초간 경적소리가 울리도록 되어 있음
천안 동남	- 지역 경로당(노인정)을 치안사랑방으로 지정
	- 어르신 및 주민들의 치안활동 참여기회 제공하기 위해 경찰관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범죄예방 홍보 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제도

해당 시·군	주요내용
서산	- 마을별 담당 경찰관 지정하여 지속적인 문안순찰 활동 - 노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택 대상 중점적으로 농번기 방범진단 실시 * 2년 전 추진정책이며, 당시 농산물 절도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진행
공주	- 범죄피해 장소 및 범죄 취약가구 대상으로 방범필름 설치 - 기존 유리창에 특수한 재질의 선팅 필름을 부착하여 범죄자들의 침입을 막고, 침입시간을 2~5분까 지 지연시킬 수 있어 외부침입으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 해당 지구대/파출소에서 방범진단을 통해 설치 장소 선정 후 경찰관이 1365 자원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설치

자료출처 : https://www.google.co.kr/?gws_rd=ssl#spf=1570070205678, 2019. 8월 검색

▼ [표 4-16] 충남 시·군 경찰서별 농촌지역 범죄예방 추진정책(경찰 대상 워크숍 및 자료 분석)

시·군	주요내용
부여군	- 인구가 많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마을 주출입구는 관제형을, 마을안길에는 저비용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음 - 소외지역 대상으로 마을에서 100만원, 주민이 200만원을 내면 CCTV를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있음 - 주민들이 CCTV 작동법을 알지 못해 경찰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임
보령시	- 치안센터가 없는 어촌 섬을 대상으로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도서지킴이”로 임명하여 범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홍성군	- 경로당을 자주 방문하여 사전에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 야광지팡이 등을 나눠주고 있음
서천군	- 마을 진입로나 목지점 등 취약지역, 노인 거주지역 중심 이동형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절도 예방 - 어르신 주거지 중심 단력순찰 확대 운영 - 대한노인회 소속 분회장(서천기준지회장 및 소속 읍, 면별 분회장 13~17명)을 어르신 경찰대(실버 폴리스)로 위촉 : 각종 행사 시 경찰관에게 교육받은 범죄 및 사고예방 관련 교육을 노인들에게 전수 교육, 범죄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어르신 경찰대 활동복(조끼, 모자) 제작 -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물품판매사기 검거 및 예방활동 -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인구 수용이 가장 많은 기관에서 예방교육 실시 및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광판이나 현수막 설치하여 관심 유도 -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 제작, 경로당 및 복지관 등에 찾아가서 안전교육 추진 - 경찰서와 마을회관 방송과 자동연동하여 마을 범죄예방 홍보(온마을 퍼지미)

3.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현황

3.1 조사 및 분석개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사회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6년부터 충청도청 국토교통국 건 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이다. 이에, 충남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조례분석, 사업 추진 사례,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 [표 4-17] 조사개요

조사 및 분석 대상	주요내용		
조례분석	- 충청남도, 15개 시·군 범죄예방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구성 및 내용		
충남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실태조사	공주 신관동 매산동길	- 일시 : 2019. 10. 29 - 내용 : 사업구간 실태조사, 관할 경찰관 대상 인터뷰	
	당진 합덕읍 감자마을	- 일시 : 2019. 11. 12 - 내용 : 사업구간 실태조사	
사업 담당자 인터뷰조사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사업 담당자	- 일시 : 2019. 11. 18, 13:00 ~ 15:00 - 내용 : 사업비의 적정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심사기준의 적정성, 경찰서와 협력 시 어려운 점, 사업 추진과정 상 어려운 점, 사업 개선방향,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	
	공주시청 사업 담당자	- 일시 : 2019. 11. 11, 10:00 ~ 12:00	<범죄발생 현황> - 농촌마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 인구규모, 귀농인,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률 -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 호소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실태> - 사업비의 적정성
	아산시청 사업 담당자	- 일시 : 2019. 11. 18, 10:00 ~ 12:00	-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심사기준의 적정성 - 경찰서와 협력 시 어려운 점 - 사업 추진과정 상 어려운 점 - 사업 개선방향 -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

3.2 범죄예방 관련 조례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모두 범죄예방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조례의 구성 및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충남 시·군에서는 충청남도의 조례와 거의 동일한 구성과 내용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디자인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곳과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과 더불어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까지 내용으로 하고 있는 곳으로 구분할 수 있다. 충청남도를 비롯한 13개의 시·군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 관점에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침입범죄”에 대한 정의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면서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공주시와 부여군에서는 사적영역에 대해서도 각 지방경찰서와 구성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협의체에 의해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 및 아산시, 홍성군, 계룡시 조례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범죄기회와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그 외의 시·군에서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에 대한 부분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범죄예방의 이론적 주요개념에서 범죄예방을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한 디자인 및 활용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범죄예방 디자인”의 정의에서 범죄 두려움까지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주시와 부여군 조례에서 침입범죄에 대비하여 사적영역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아산시의 경우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 중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 즉 공공영역을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충남도민 모두가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에 따라서는 사적영역까지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표 4-18] 충청남도 및 공주/부여 범죄예방 조례 구성 및 주요내용

구분	구성
충청남도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범죄기회와 범죄두려움 감소시키도록 디자인,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계획/변경/개선하는 것임을 규정 - 제3조 적용대상 : 도/시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도/시군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위탁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도/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규정 - 제4조 기본원칙 - 제5조 도지사 책무 - 제6조 종합계획 수립 -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검찰청 등과 협력체계 구축 명시 -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 제10조 교육 및 홍보 - 제11조 표창
공주, 부여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침입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 및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용 망창 등 물리적 시설에 대한 정의 규정 - 제3조 기본원칙 - 제4조 시민의 권리 - 제5조 시장의 책무 - 제6조 기본계획 수립 - 제7조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 제8조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 설치 지원대상자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설치비용 지원, 이를 위해 공주경찰서와 방법시설 설치 지원 협의체 구성을 명시 - 제9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 -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 제12조 평가

▼ [표 4-19] 충남 13개 시·군 범죄예방 조례 구성

구성	아산	홍성	당진	논산	서천	예산	보령	서산	금산	천안	계룡	청양	태안
목적	○	○	○	○	○	○	○	○	○	○	○	○	○
정의	●	●	○	○	○	○	○	○	○	○	●	○	○
기본원칙	○ 27)	○	○	○	○	○	○	○	○	○	○	×	○
적용대상	○	○	×	○	×	○	×	×	○	×	○	×	×
시민(군민)의 권리	×	×	×	×	×	×	○	○	×	×	×	×	○
시장(군수)의 책무	○	○	○	○	○	○	○	○	○	○	○	×	○
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	○	○	○	○	○	○	○	○	○	○	○	○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	○	○	○	○	○	○	○	○	○	○	○	○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	○	○	○	○	○	○	○	○	○	○	○	○
위원회의 설치, 기능	○	○	○	○	○	○	○	○	○	○	○	○	○
협력체계 구축	○	○	○	○	○	○	○	○	○	○	○	○	○
교육 및 홍보	○	○	○	○	○	○	○	○	○	○	○	○	○
수당 등	×	×	×	×	×	×	×	○	×	○	×	×	○
포상	○	×	○	○	×	×	×	×	○	○	×	○	○
표창	×	○	×	×	○	○	×	○	×	×	○	×	×

27)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함을 규정

3.3 사업 추진실태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환경설계에서 접근하는 CPTED가 확산이 되면서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공공디자인으로 개선하면서 지역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며, 매년 4개소를 선정하여 총 10억원의 예산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 [표 4-20]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추진배경	-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생활불안 요소를 CPTED와 공공디자인 접목하여 개선하고 동시에 지역경관을 향상
추진계획	- 개소 : 4개소 - 사업비 : 10억원(도/시·군 각 50%) - 사업기간 : 1년 - 주요내용 : 공공공간(공원, 도로 등) 및 건축물, 학교주변 등 범죄로부터 노출된 생활공간에 대한 안전시설 및 수단 적용 - 대상지 : 인구 고령화로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구도심 우범지역 및 여성 상대 상습 범죄 발생지역, 학교주변 등
선정기준	<현지심사> - 대상지 현황(30) :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지역주민 호응도 및 기타 현지사항 <서류심사> ① 합목적성(20) : 사업 목표와 계획의 일치성/필요성, 사업 규모와 예산확보/집행계획의 적정성,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및 단계별 추진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주체별 역할 분담의 적정성,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민간단체 등) 협력(MOU) 방안, 대상지 유형별 범죄발생 현황 및 CPTED 계획의 적정성, 사업 기대효과와 적정성 ② 창의성(20) :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전략,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청 등)사업과의 연계성 ③ 지역성(5) : 지역 경관자원의 특성 분석과 반영 계획의 적정성, 주변과의 조화성 ④ 지속성(15) : 도시재생사업, 공공디자인사업 등 정책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적정성,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죄예방교육, 의견수렴 등) ⑤ 공공성(10) : 지역경제 및 커뮤니티 활성화 기여도, 사업의 파급효과
특이사항	- 사업추진 협의회에 전문가 참여 필수 - 경찰청, 교육청, 한국셉테드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 사업계획서에 경찰청, 교육청, 주민협의체 구성 등 역할 및 사업추진체계 작성 - 사업계획서에 지역주민 참여방안, 사후관리 및 활용방안 작성

자료 : 2018년 공모사업 추진계획(안),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사업내용은 공공공간 및 건축물, 학교주변 등 범죄에 노출된 곳에 안전시설 및 수단을 지원하는 것이며, 사업 특성상 경찰청이나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 추진 및 주민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를 선정기준에서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주 목적이 범죄예방이지만 지역경관을 고려하는지,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나 공공디자인사업 등과의 연계, 지역 커뮤니티 등 대상지 선정 시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대상지는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구도심 우범지역 및 여성 상대 상습범죄 발생지역, 학교주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 지역 역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사업 사례지를 살펴보면, 중심상가지역이나 학교주변, 역 주변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농어촌지역 역시 중심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면사무소 주변 등임을 알 수 있다. 농경지 분포, 주거지의 산재, 독거노인 및 고령화, 과소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농촌마을은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 [표 4-21]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현황

년도	대상지
2016	당진시 합덕읍 감자마을2길 18-4 일원
2017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일원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보령시 대천1동 신평2길 일원
2018	아산시 둔포면 둔포면사무소 일원
	서산시 한서대학교 일원
	예산군 예산읍 예산5리 일원
	예산군 예산역전 일원
2019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및 동남리 일원
	금산군 중부대학교 일원
	홍성군 광천제일고등학교 일원

자료 : 국토교통국 건축도시과 내부자료

충남에서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들 중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행정리 단위 농촌마을에 대한 사례가 없어, 사업 후 유지관리 및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도 와 2017년도에 진행했던 사례를 살펴보았다.

1)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사업 대상지는 공주시 신관동 1통 매산동길 일원이며, 약 51,941㎡에 해당하는 원룸 밀집지역으로 주로 학생들이 거주하며 149세대, 328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대상지는 범죄약자인 여성, 학생, 노인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에 대한 예방이 필요한 곳이다. 또한 대상지 자체가 주변지역보다 낮은 레벨로 형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어 범죄 위험과 두려움이 높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자료 :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림 4-13]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대상지

대상지내 위험요소로 ①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저조도 가로등이 많아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 조성, ②도로가 좁고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개수 부족, ③대상지 내 막다른 골목길이 많고 계다가 좁은 골목길이 많아 범죄발생 시 피신에 불리, ④쓰레기 수집공간이 부족하여 열악한 정주환경 조성, ⑤공폐가 밀집지역이 있어 인적이 드물어 범행 가능성 유발, ⑥주민들 간 소통, 교류할 수 있는 거점공간 부족으로 상호 신뢰감 저하 등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안심 학사길”이라는 컨셉으로, 기반시설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로 범죄발생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마을 미관개선 및 밝은 환경 조성을 통해 범죄유발을 사전에 차단, 주민참여 프로그램 도입 및 활성화로 주민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사업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서는 물리적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연계사업으로 2단계는 주민참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학생안심원룸 인증제 등을 추진, 3단계는 2단계를 통해 성숙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유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였다. 즉, 본 사업으로 가로등 조명교체, CCTV 및 반사경 설치, 주요 출입부 특화, 건물틈새 막음, 도로 그래픽 및 벽화, 안심벨 및 안심게시판 설치 등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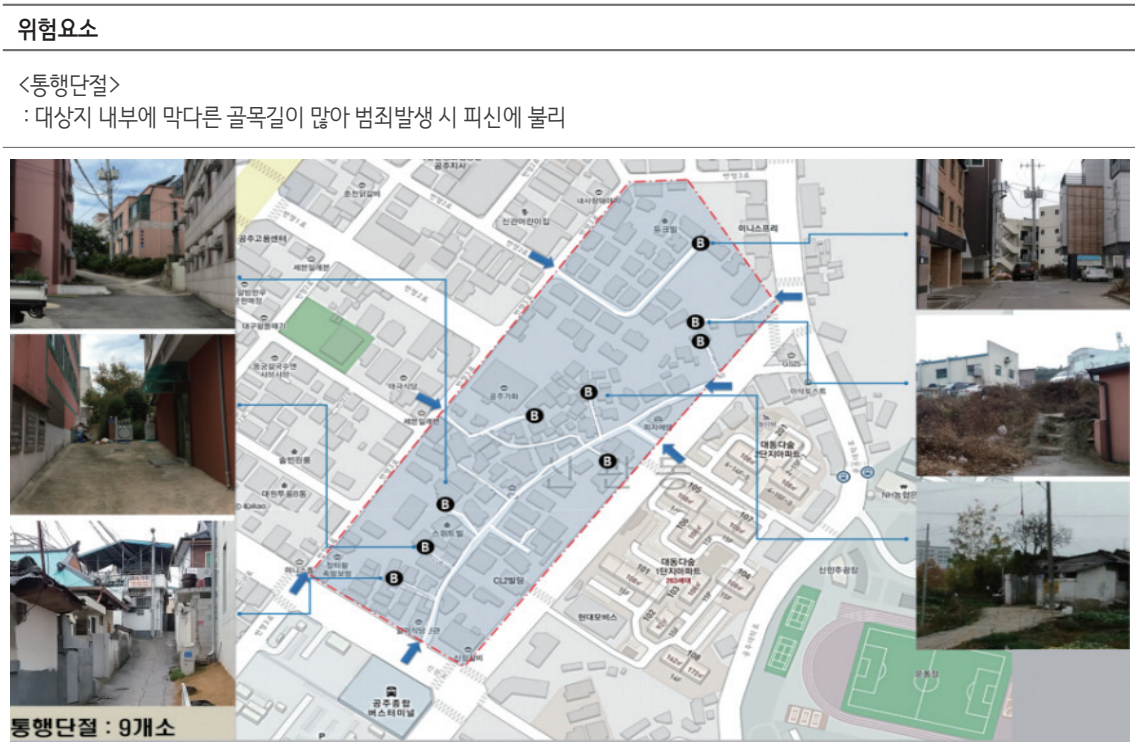
특히, 공주시의 경우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에서 공주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며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에서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경찰서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주시에서는 경찰서와 협력하여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사업에서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동의가 이루어진 사적영역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물론 방범시설 및 CCTV, 반사경 등의 설치 위치를 공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선정 후 설치하는 사업 추진방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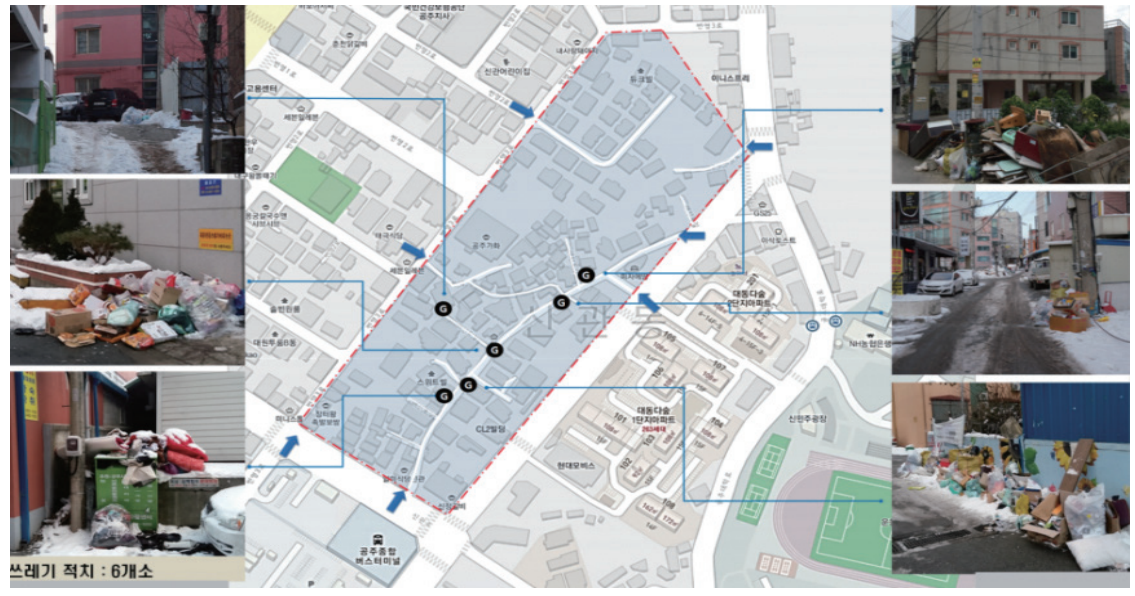
▼ [표 4-22]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위험요소

위험요소
<가로등> : 대상지 내부가로등 미설치 구역 및 저조도 가로등 다수
<CCTV> : 개수가 부족하여 대상지 내부 대부분이 범죄 사각지대

▼ [표 4-22]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위험요소



<쓰레기 적치>
: 대상지역 범위에 비해 쓰레기 수집공간이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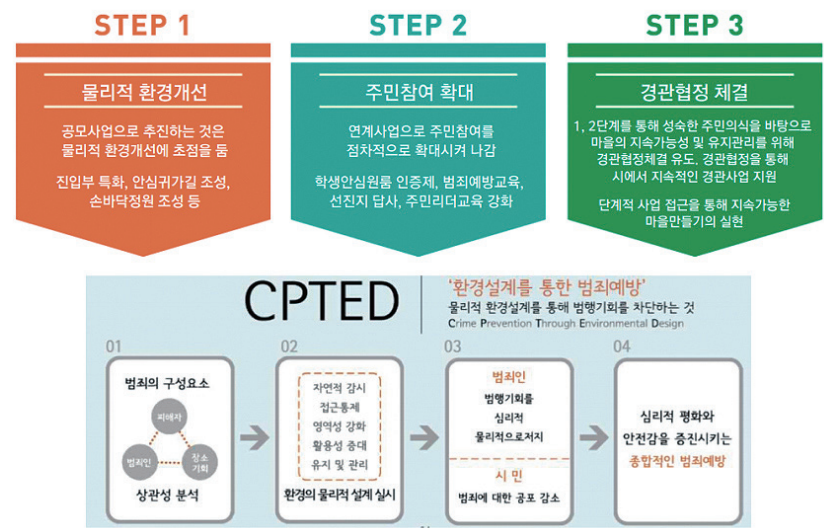
▼ [표 4-22]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위험요소



<복지시설 부족>
: 주민소통, 교류시설 부족으로 상호 신뢰감 저하



자료 :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료 :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림 4-14]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단계적 사업전략



자료 :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실시설계 용역

[그림 4-15]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마스터플랜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업 결과를 살펴보았다. 나대지에 투시형 펜스를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하면서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이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주면서 구역 내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침입범죄가 취약한 곳에 접근 통제 및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표지판과 함께 펜스를 설치하였으며, 관제센터와 연결되어 있고 버튼을 누르면 경비 구역임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고화질 CCTV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원룸이 많은 사업 대상지 특성 상 원룸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를 강화하여 주 보행로와 접해 있어 보행자들에 의한 자연감시가 가능한 곳에 접한 창에는 쉽게 찢기지 않는 방법용 망창을 설치하고, 골목에 접하여 인적이 드문 측면에는 촘촘한 창살로 구성되어 창살 안에도 철심이 있어 쉽게 끊기지 않는 방법용 창살을 설치해놓고 있다. 야간에 역시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경찰관 집중순찰 구역임을 인지하도록 하면서 주 보행공간을 밝게 하여 밤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영역과 함께 사적영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역 전체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에 의한 열악한 정주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기 위해 도로그래픽을 적용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했는데도 쓰레기 투기는 여전히,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으나 보행로에서 쓰레기 적치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디자인으로 오히려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골목길에 벽화를 통하여 구역의 밝은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한 것 역시 오히려 구역 내 경관과 맥락이 맞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여 이 역시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상 시 경고음이 울리는 안심벨은 버튼 위치를 빨리 인지하기 어려운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크기 역시 너무 작아 정작 위급한 상황 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그리고 일부 좁은 틈새에 막음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은 개인 사유지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방법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나대지에 펜스 설치하여 범행 유발 저해

구역내 범죄예방 시설 설치 표시

[그림 4-16]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결과



침입범죄 취약한 곳에 접근 통제 펜스 설치 및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표시



관제센터와 연결된 "말하는 CCTV" 설치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주 보행로와 접해있는 곳은 방범용 망창,
골목에 접해 있는 곳은 방범용 창살 설치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방범구역 인지성 강화 및 야간 보행환경 개선



[그림 4-16]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결과



쓰레기 적치 금지 표시가 있음에도 쓰레기 투기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분리수거장을
설치하였으나 오픈형으로 경관 저해



안심벨을 설치하였으나, 버튼 위치를 빨리 인지하기
어려우며, 경고음만 발생



어두운 환경을 밝게 조성하기 위해 적용한
벽화이나, 주변경관과 부조화



개인 사유지로 동의를 해주지 않아,
좁은 골목길 통제 시설물 설치 적용 불가

[그림 4-16]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결과

2) 당진시 합덕읍 감자2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사업 대상지는 충청남도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곳으로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감자2길 일원이며, 약 7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합덕 전통시장에 근접해 있지만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막다른 좁은 골목길이 많으며 이러한 골목길 안쪽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한 마을안길은 경사로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4-17] 당진시 합덕읍 감자2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대상지

전통시장에 근접해 있는 주택가로서 노후된 주택이 많은 대상지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로에 접하고 있는 주택의 벽면을 깨끗하게 도색하여 밝은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안에 주민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쉼터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 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감자마을이라는 마을명칭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벽화와 야간에 골목길을 밝게 하기 위해 조명을 설치하여 어둡고 삭막한 골목길을 밝게 해주고 있다. 하지만 골목길 안쪽에 있는 어린이집까지 스토리텔링 벽화와 조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안쪽은 여전히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마을안 경사로 끝이면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삼거리에 방범용 CCTV와 비상벨을 설치하고 로고젝터를 활용하여 방범구역임을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여전히 어둡고 골목길은 더욱 어두워 야간 보행 시 두려움을 조성하고 있다.



노후주택 경관향상을 위해 도색



골목길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 마을명칭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마을안 주민들 휴식 및 커뮤니티를 위해 쉼터 조성



마을 방범을 위해 CCTV 설치

위급 시 이용하도록 CCTV에 비상벨 설치

[그림 4-18]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감자2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결과



어두운 골목길 밝게 하기 위해
벽면에 조명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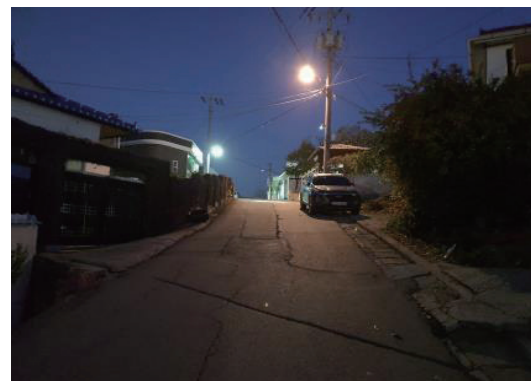
벽면 스토리텔링 및 조명이 어린이집까지
연결되지 않아 어두움 정도의 차이가 심함



화려한 색 조명이 오히려 야간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로고젝터를 설치하여 방범구역 인지성 강화



조명은 있지만 야간에는 어둡고
CCTV 설치 안내판 인지성이 떨어짐

[그림 4-18]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감자2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결과

3.4 사업 담당자 의식조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주관 부서인 충남도 건축도시과 사업 담당자, 충남에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아산시와 공주시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대상지 선정 시 범죄발생률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농산물이나 농기계 등 절도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인지하고는 있지만 범죄발생 통계량이 높지가 않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서 주로 적용하고 있는 안심벨이나 벽화 등에 대해 효율성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안심감을 부여하거나 마을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대상지 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추진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업추진 시 범죄발생률 및 위치, 이에 따른 방법시설 설치 등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필요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으로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 대상지 특성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의 어려움이 제시되었다. 한편, 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실질적인 주민참여 유도 및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한 사업추진 기간 조정, 방법시설 설치 및 디자인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비율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근거확보, 주민참여를 토대로 도시지역과 차별화되는 대상지 선정기준 및 사업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 [표 4-23] 사업추진 현황(지자체 사업 담당자)

구분	아산시	공주시
범죄발생 및 범죄두려움	- 농산물 및 농기계 절도범죄가 많은 것 인지 - 외국인 범죄는 주로 폭력범죄가 많으며 도심지에서 많이 나타나 의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했음	-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암수사건이 많아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은 어려웠음 - 절도가 많고, 폭력범죄가 증가 인지 -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범죄두려움 호소 증가
사업비	- 사업비에 맞춰 추진 - 시비를 수립하여 자체사업 추진중	- 대상지에 따라 다름
사업내용	- 사유재산에 대한 사업은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으며,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대상지 특성에 따라 내용을 차별화 하려고 하고 있음	- 안심벨 등 효과 없는 아이템이 있긴 하나, 안심감 부여의 홍보 측면에서는 긍정적 - 벽화는 마을 분위기를 밝게 해주고 쉽게 이미지 개선에 효과적 - 타겟하드닝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
대상지 선정	- 현실적으로 범죄율이 높은 터미널, 역 주변, 원룸촌,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통계자료 근거로 선정 - 현장을 가봐야 범죄발생 원인을 알 수 있음 - 막다른 골목, 학생들 및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인접지역이 범죄발생이 많아 이를 고려
경찰과의 협력	- 자료공유, 방법시설 설치 시 위치 및 종류 등 협조 -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며, 경찰측에서 먼저 방법시설이 필요한 곳에 사업요청을 함	- 협력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좋음 - 타겟하드닝 적용 시 경찰 협조 없이는 불가능 -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시설 적용과 환경개선의 상호장점을 살릴 필요

▼ [표 4-24] 사업 추진과정 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지자체 사업 담당자)

구분	아산시	공주시
문제점	-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지만 잘 안되고 있음.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 - 주민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효과가 있는 사업	- 주민참여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어려움 - 대상지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용역사 선정이 어려움
개선방향	- 주민참여를 유도하기에 1년 사업기간은 짧음. 1년 반~2년 정도가 적정	- 사업 대상지 선정이 가장 중요(현장점검 철저) - 추진기간은 항상 짧음. 원활하게 문제없이 진행되어야 1년 정도 소요 - 경험상 사업비의 80%를 디자인 및 환경개선, 20%를 방법시설 설치에 적용 - 실질적인 주민참여 필요

▼ [표 4-25] 농촌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지자체 사업 담당자)

구분	아산시	공주시
필요성	-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사업선정 기준에서 대상지로 선정 근거 부족 -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음	- 중심지는 아니지만 상가형성 또는 관광객이 많은 곳은 범죄발생률이 높으므로 할 필요 있음 - 타겟하드닝을 적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으나, 단독주택에 적용 시 비용이 많이 들 것임
방향	- 주민참여도 높일 필요 - 사업범위가 넓어지므로 사업비 상승 필요 - 도시지역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 필요(기능적인 측면보다 주민참여 중심) - 대상지 선정방식이나 평가, 사업내용도 도시지역과 차별화 - 주민참여와 방법시설 설치 함께 접근할 필요	- 도시지역과 다른 사업 제안이 필요 - 특히, 낮에 절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필요 - 암수사건이 많아 사업추진 근거, 대상지 선정기준 명확히 제시 필요 - 주민교육이 특히 중요

충남도 건축도시과 사업 담당자 역시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교육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선정 시 범죄발생률을 중요시해 왔지만 앞으로는 주민의지와 유지관리방안, 사업내용 측면에서 H/W뿐만 아니라 S/W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주시에서 적용한 개인 사유지 타겟하드닝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디자인 및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방법시설 설치 역시 필요하며, 특히 대상지 선정 및 방법시설 설치 시 경찰과의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농촌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그동안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왔지만, 범죄두려움 예방을 위해 농촌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으로 지자체 담당자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4-26] 사업추진 현황(충남도청 사업 담당자)

구분	아산시
지자체의 어려움	- 주민이 참여의지는 강하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
심사 시 고려사항	- 범죄발생률을 가장 중요시 함. 하지만 2020년도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범죄발생은 없지만 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이 많고, 주민의지가 높아 선정되었음 - 향후 주민의지, 유지관리방안을 중요시하고자 함
경찰과 협력	- 경찰측은 방범시설 설치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성을 제시, 방범시설 설치와 함께 경관 및 환경개선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함
개선방향	- 주민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공모사업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 주민교육을 우선 추진할 필요 -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하므로 유지관리 측면을 더욱 강화할 계획 - 사업비 부족에 의해 단순한 사업내용에 그치는 경향. H/W뿐만 아니라, S/W의 주민교육을 확대하고 싶음 - 지자체 담당자의 의지가 중요한데, 업무가 많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까지 할 여력이 없음 - 개인 사유지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는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 심스러움 - 방범시설 설치와 경관 및 환경개선 모두 중요, 방범시설 설치는 20%, 경관 및 환경개선은 80% 정도가 적정 - 시군에서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자체예산 수립하여 교육 및 추가 사업 추진 필요 - 사업완료 일정기간 경과 후 설문조사 할 필요(모니터링)

▼ [표 4-27] 농촌지역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필요성 및 방향(충남도청 사업 담당자)

구분	아산시
필요성	- 당연히 필요함 -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을 예방할 필요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는 범죄발생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 하고 있어 그동안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왔음
방향	-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은 더욱 중요 - 사업비가 한정적이고 부족하므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있어 농촌지역을 많이 지원할 수 는 없지만 추후 농촌지역에도 지원할 필요 있음

4. 종합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심각한 고령화, 행정 및 물리적으로 편차가 심한 농촌마을

충남 농촌마을은 천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행정리 단위에서 고령화 50% 이상인 곳이 많아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규모나 도로율, 도로와의 접근성 등 행정적·물리적 편차가 심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방어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고려한 범죄예방 방 안이 필요하다 하겠다.

2) 농촌마을 범죄특성은 노인 대상 농수산물 및 농기계 절도, 다양한 주체들 간 폭력, 외국 인 및 어두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농촌마을은 친밀성 밀도가 높은 특징을 반영하듯 이웃에게 알려지는 것을 싫어하여 암수사건이 많지만,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 유형 으로는 절도나 폭력이 압도적으로 많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 경찰과 지자체의 협 업으로 지속적으로 농산물 보관창고 등에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농산물 적재 차량 검문 검색 및 마을 차량 스티커 부착, 순찰, 예방 교육, 주민참여 치안활동 유도의 활발한 정책 추진으로 절도범죄 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폭력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서에서 폭력범죄 신고 확대나 피해발생 이후의 보호를 위 한 정책만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들 간 폭력 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들 간 다툼, 이에 따른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농촌마을의 고령자를 비롯한 유동인구, 외국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폭력범죄에 대한 예방방안이 필요하다.

최근 어느 곳에서든 외국인 비율이 높아지고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한 3개의 마을 모두 외국 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이중 1개의 마을은 인구의 반이 외국인일 정도로 외국인은 이미 우 리의 생활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농촌마을의 범죄나 두려움을 논함에 있어서 외국인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물론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외국인 비율과 범죄발생률이 비례한다고도 볼 수 없으나, 강간 및 추행, 절도, 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특성이 있다. “의사소통이 안되어 더 무섭다”, “생긴 것이 달라서 무섭다”, “무리지어 다녀서 무섭다”는 주민 인터뷰조사 시 의견과 같이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큰 것일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외국인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쓰레기 문제,

이에 따른 마을 경관저해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친밀성 밀도가 높아 외지인을 잘 신뢰하지 않는 농촌사회의 특성에서 본다면 농촌마을 주민들의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은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성, 인구의 복잡성 등의 특성을 가진 도시사회와 달리,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의 관점에서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을 접근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3개의 농촌마을 주민인터뷰 조사 시, 두려움이나 위험을 느끼는 요소로 가장 먼저 꼽았던 것은 어두운 환경이다.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나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이해될 만큼 마을 안에 좁은 골목길은 많고 가로등은 거의 없어 두려움을 느낄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마을에 있는 나대지나 폐가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 주변이 어두운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조사대상 중 2개의 마을은 치안 및 행정서비스 여건이 좋았고, 1개의 마을은 치안서비스가 좋았지만, 이들 마을 모두 어두운 환경에 대한 위험과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즉, 농촌마을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농수산물 및 농기계 절도 예방, 노인들 간/주민과 관광객 또는 외국인들 간 다툼 예방,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저감, 어두운 환경을 밝고 깨끗하게 하여 범죄발생, 특히 범죄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 중심지에서 떨어져 있지만 범죄발생률이 높은 행정리, 범죄가 발생한 곳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

농촌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은 행정리는 군청 및 읍사무소의 행정중심지에 위치한 곳 또는 이와 근접한 행정리가 많지만, 이와 떨어져 있는 행정리에서도 범죄발생률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읍소재지와 근접해 있는 행정리들의 경우 범죄발생률이 높아지는 행정리가 점차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절도와 폭행 범죄 유형 모두 많이 발생하는 행정리가 1/3 ~ 1/2 정도이며, 범죄발생 행정리가 면소재지에 입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관계는 보기 어려웠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절도보다 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범죄가 발생한 곳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농촌지역내에서도 인구 및 유동인구가 많이 밀집되는 읍소재지뿐만 아니라 그 주변 행정리, 그리고 읍소재지에서 떨어진 행정리에서도 범죄발생률이 높은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심지에서 벗어난 행정리의 경우 방법시설 설치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이에 따라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두려움이 더욱 클 수 밖에 없으며, 주거비가 절약된

다는 이유로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높아 이 또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군다나 범죄가 발생한 곳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중심지에서 벗어났지만 범죄가 발생한 곳을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다.

4)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농촌지역은 범죄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 하지만 만명당 범죄발생 건수로 보면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지역임을 반영하듯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도 범죄는 농촌지역이 더 많고, 폭력 범죄는 농촌지역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곳도 있다. 그렇지만 농촌마을의 경우 이러한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 어두운 환경, 신고를 꺼려하여 암수사건이 많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범죄발생률에만 근거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이나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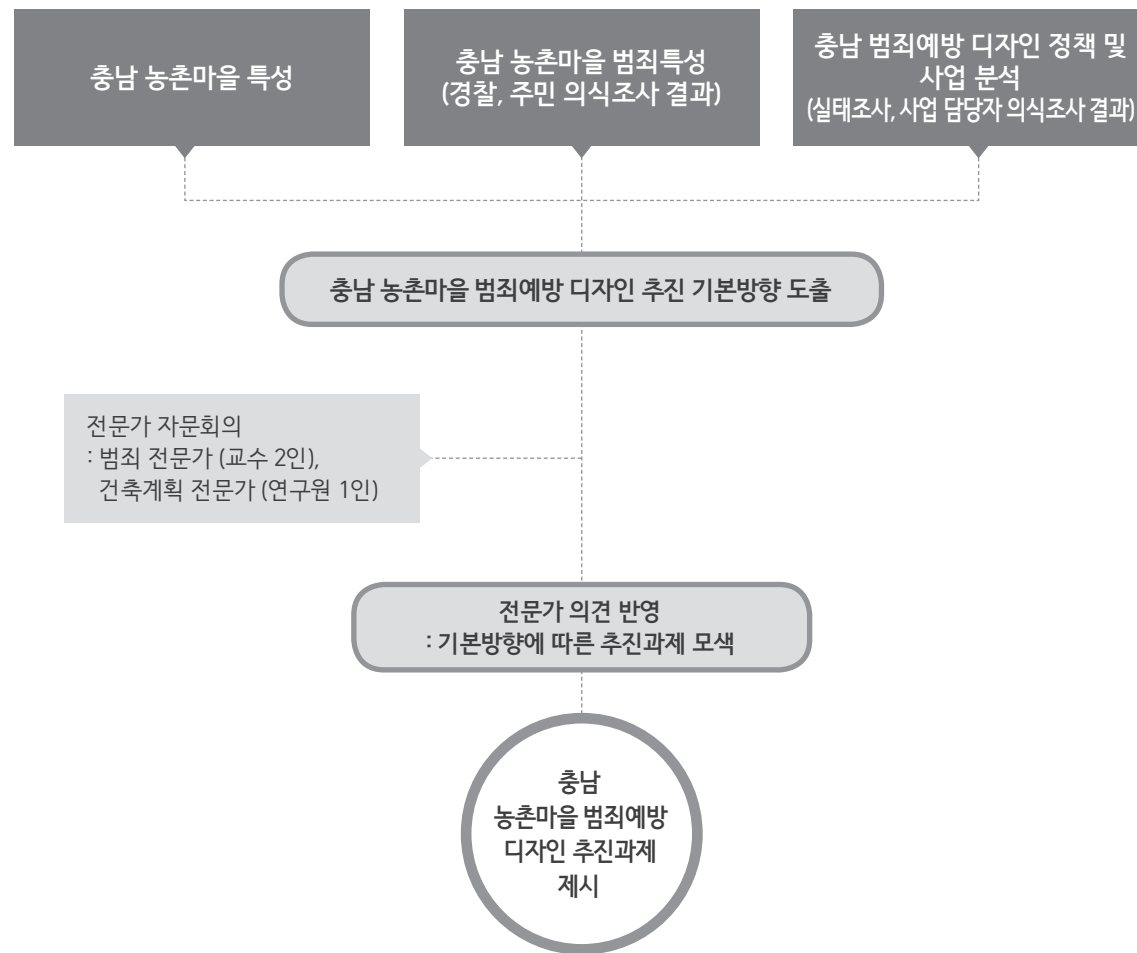
2016년부터 충남에서 추진해 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담당자들 역시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는 차별되는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지금까지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온 탓에 농촌마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근거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한다면 농촌지역은 당연히 소외될 수 밖에 없다.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과 달리 범죄발생률과 함께 범죄두려움을 더욱 중요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참여 및 주민의지를 토대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책과 사업내용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5) 주민참여 및 주민의지를 전제로 방법시설 설치, 경관 및 환경개선, 교육 추진 필요

주민들은 그동안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으로 추진해왔던 CCTV나 가로등 설치, 벽화, 경관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 특히 CCTV나 가로등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고, 벽화나 경관조성 및 마을청소 등으로 마을 분위기를 밝고 깨끗하게 함으로써 범죄유발 심리를 저감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범죄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범죄발생 시 대처를 우려하면서 범죄예방에 대한 고민을 평소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마을에서의 범죄예방 디자인은 방법시설 설치는 물론 경관 및 환경개선, 그리고 교육을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사업추진 시 주민의지 및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충남 농촌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앞에서 분석한 국내의 선진사례 시사점과 충남 농촌마을 범죄특성 분석,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 및 사업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기본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범죄 전문가 및 건축계획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그림 5-1]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프로세스

1. 기본방향

그동안 충남 농촌지역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 및 사업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사 및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지역은 고령화, 어두운 환경 및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충남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위한 범죄예방과 두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안심하여 살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서 역시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은 필요하다. 그동안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한 사업선정 및 사업내용은 도시지역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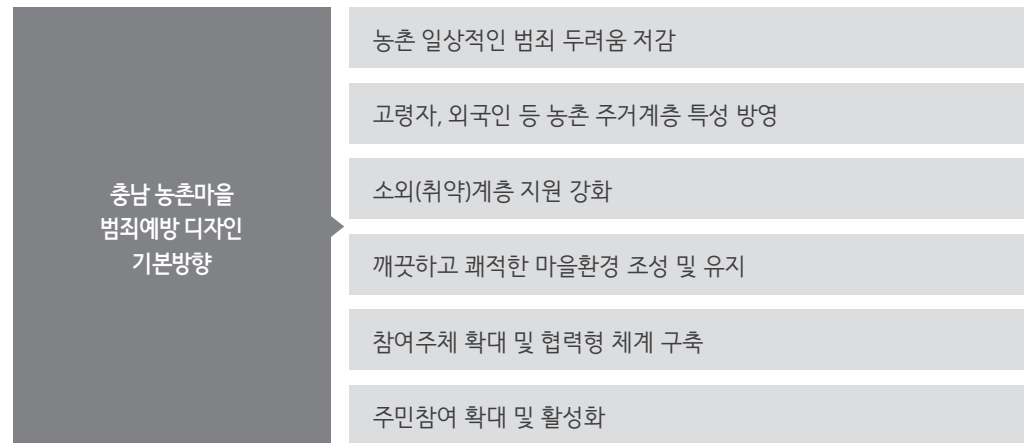
농촌마을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성 밀도 : 암수사건 많고 외지인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 마을 공동체 잔존 · 고령화, 독거노인 : 방어능력이 저하된 고령자 비율 높음, 행정리 단위 고령화 50% 이상인 곳이 많아 심각한 고령화, 독거노인 증가 · 외국인 비율 : 마을 인구의 반이 외국인인 곳도 있을 정도로 점차 증가
충남 농촌마을 범죄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대상 농수산물 및 농기계 절도 : 점차 감소, 지속적인 방법 시설 설치 및 순찰 강화, 범죄예방 교육 실시 · 폭력범죄 증가 : 노인들 간/ 주민과 관광객/ 외국인들 간 다툼, 이에 따른 두려움 증가, 커뮤니티 관점에서 접근 필요 · 외국인 비율 증가에 따른 범죄두려움 및 경관훼손: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증가, 외국인의 쓰레기 불법투기에 의한 경관저해, 커뮤니티 관점에서 접근 필요 · 범죄발생 행정리의 특징: 행정중심지 주변 또는 근접한 행정리에서 범죄발생률 높으나, 떨어져 있는 행정리에서 범죄발생률 높은 곳도 있음. 범죄가 발생한 곳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 ·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관점에서 접근 필요 : 외국인, 어두운 환경, 암수사건 등 농촌마을 범죄특성 고려할 필요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 및 주민의지 중요 · 범죄위험 발생지역 도출 및 유지관리, 효율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 특히 농촌마을에는 더욱 중요 · H/W와 S/W사업 병행 필요 : 주민들의 안심감 부여를 위해 방범시설 설치는 물론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필요 · 유지관리 및 경관조화 충분히 고려 :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적극적으로 유도,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경관에 조화로운 디자인 적용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 도출

▲ [그림 5-2]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 도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들을 토대로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기본방향으로서 6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적인 범죄두려움 저감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둘째, 농촌의 주요 주거 및 생활계층인 고령자와 외국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셋째, 특히 범죄에 취약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으로 조성 및 유지하여 범죄발생이나 범죄두려움 유발을 낮춘다. 다섯째, 주민을 비롯한 경찰, 지자체,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이해관계 주체가 협력하여 정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범죄양상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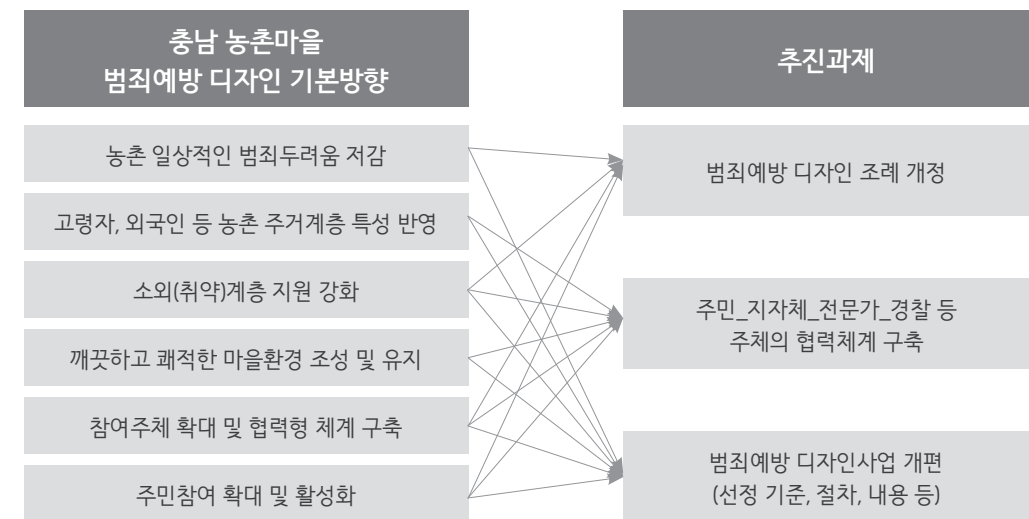


▲ [그림 5-3]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기본방향

2. 추진과제

앞에서 제시한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는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①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사적영역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선, ②농촌마을의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주민_지자체_경찰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 추진 및 정기적인 현장 모니터링 실시가 가능하도록 협력체계 구축, ③농촌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시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을 기준으로 대상지 선정하여, 고령자 및 외국인 등을 고려한 H/W와 S/W 사업 병행 추진하는 것의 3가지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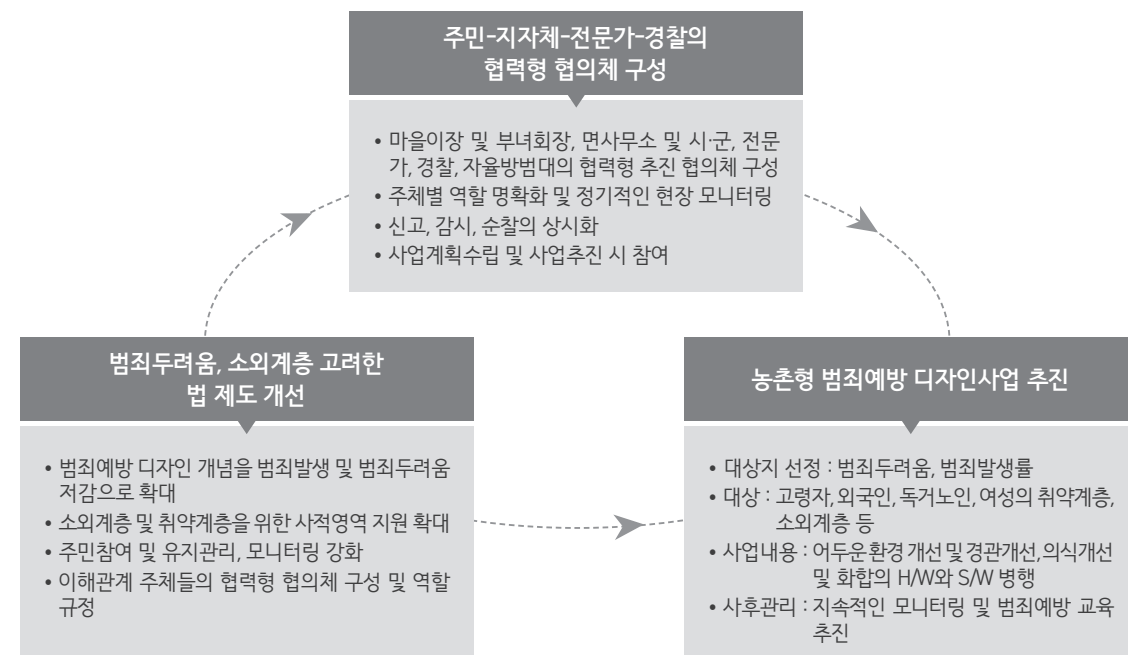
▲ [그림 5-4]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과제

우선, 법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충남에서는 충남도를 비롯하여 1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예방 디자인 개념을 범죄발생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에만 착안하여 규정하고 있는 곳이 많다. 범죄예방 디자인을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두려움까지 저감시키기 위함으로 접근하여 범죄두려움 대응이 필요한 농촌지역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적영역에 대한 지원도 규정이 필요하다.

조례에서는 시민(군민)의 권리와 시장(군수)의 책무만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지원했을 시 시민(군민)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노인들 간 및 귀농인과 폭력이나 다툼,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등 관의 지원으로만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농촌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의 지속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다면 주민참여는 중요하다. 이는 사업

담당자의 의식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커뮤니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농촌마을 범죄 예방 디자인의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도서지역이나 치안센터가 없는 보령시의 경우 마을 이장을 “도서지킴이”로 임명하여 치안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례에서와 같이 주민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주민참여는 물론이고, 이와 더불어 전문가, 경찰과의 협력형 추진체계 구성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조례에서 경찰과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듯이 방법시설 설치 시 경찰의 지원은 필요하며, 범죄 및 디자인 전문가의 참여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조례 개정 및 협력형 추진체계를 토대로 농촌마을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암수사건이 많고 범죄두려움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범죄발생률보다 외국인 비율이나 어두운 환경, 유동인구 등에 따른 범죄두려움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이에 맞는 사업내용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사업 대상지 선정 시 범죄발생률을 참고하면서 외국인 비율, 어두운 환경, 유동인구 등에 따른 범죄두려움을 중요시하고, ②대상은 고령자를 주로 하되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독거노인, 여성,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③사업내용은 어두운 환경을 개선하면서 마을을 밝고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한 방법시설 설치 및 경관개선의 H/W, 그리고 의식개선 및 화합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죄두려움 저감 교육을 비롯한 주민들 간 화합 및 친목도모(노인들 간, 주민과 외국인 간 등)와 유지관리의 S/W를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 [그림 5-5]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과제

2.1 범죄두려움 및 소외계층 고려한 제도 개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 제정하고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주민참여 유도는 물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우선 충남도민 모두가 범죄발생은 물론 범죄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하여 살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을 범죄기회와 더불어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함임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혜택을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즉, 독거노인이나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에 대한 방어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취약한 대상에 대해서 사적영역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침입범죄” 정의와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시설에 대한 정의의 규정이 필요하다. 충남 공주시와 부여군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에서도 “침입범죄”를 정의하면서 사적영역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앞에서 언급한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규정 역시 필요하다. 공주시 조례의 별표에서 다양한 평가기준에 의해 지원 여부를 정하고 있다²⁸⁾. 다만, 사적영역에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대상지라는 명확한 범위와 소외계층 또는 취약계층이라는 명확한 대상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 조례에서는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어떤 내용에 대한 협력인지, 각 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주민에 대한 규정 역시 없다. 사업계획은 물론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 구성에 주민대표, 해당 시·군 담당자 및 해당 읍·면·동장, 범죄예방 및 디자인 전문가, 해당 관할 경찰서, 해당 지역 자율방범대, 그 외 교육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협의체가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까지 범죄예방과 경관·디자인이 효율적으로 융합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주체별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 조례에서 시민(군민)의 권리와 도지사(시장/군수)의 책무만 규정해 놓고 있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범죄예방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충남에서는 2016년부터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매년 추진해왔으며, 시·군에 따라서는 자체사업 또는 타 사업 일환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는 등 충남에서는 범죄예방 디자

28) 본 보고서 부록 4에 첨부

인사업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완료된 곳의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의식부족의 원인도 있을 수 있으나,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충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직후와 사업완료 후 조사를 실시한다면 사업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추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평가 후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곳에 표창을 수여하여 주민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정책 및 사업 효과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표 5-1]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개선(안)

구분	개선 및 추가규정 내용(안)	비고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	기존
정의	<div><범죄예방 디자인 범위> - 범죄기획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의 포괄적으로 규정 * 충청남도의 경우 「“범죄예방 디자인” 이란 범죄기획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건축 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 변경,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사적영역에 대한 방법시설 설치 지원> - “침입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 * 공주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라고 규정 - “침입범죄”의 위험성 등에 대한 평가 규정 * 공주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라고 규정 -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방법시설 등”에 대한 정의 규정 * 인천광역시의 경우 「“방법시설 등”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문, 방법창, 방법용 망창, 방법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라고 규정</div>	개선, 추가
적용대상	-	기존
기본원칙	-	기존
시민(군민)의 권리	-	기존
도지사(시장, 군수)의 책무	-	기존
기본계획 수립	-	기존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	기존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	기존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div><평가 및 지원 기준 마련> - 범죄예방 디자인 조성사업 추진 대상지에서 범죄발생 및 신고 건수, 강력범죄 발생, 범죄 피해정도, 소득수준, 침입위험도, 주택노후도, 주택유형, 감시시설 유무, 야간 밝기, 핫스팟 등을 고려하되 주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 마련 *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별표에서 평가기준 제시 - 침입범죄 위험성 평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규정</div>	추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 구축 및 역할	<div><협의체 구축>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선정 이전에 주민대표 2인(마을이장 및 부녀회장), 해당 지자체 2인(시/군 및 읍/면/동), 전문가 2인(범죄예방, 디자인), 해당 관할 경찰서 2인, 해당 지자체 자율방범대, 기타(교육청 등의 이해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역할> -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까지 참여 -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을 위한 평가 - 주민 :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 유도, 사업완료 후 마을지킴이로 활동 - 지자체 : 예산 및 행정 지원 - 전문가 : 사업계획수립 시 자문, 사업추진 과정에서 컨설팅, 사업완료 후 모니터링 - 경찰 : 대상지 현황(범죄발생률 등) 정보 제공, 방법시설 등 설치 위치 선정,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 실시 등</div>	기존 “협력체계 구축” 내용 개선, 추가
“범죄예방 주민협의회” 구성 및 역할	<div><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사후관리 및 지속성>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준공까지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 구성 규정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효과 향상 및 지속성을 위해 주민의 사후 유지관리 의무사항 규정 - 지속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사업 이후에도 사업추진 시 맡은 역할 이행 규정</div>	추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존
교육 및 홍보	-	기존
수당 등	-	기존
모니터링	<div>- 대상지 선정 후 주민 위험요소 설문조사, 사업완료 후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반영하여 추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반영 - 미흡한 부분 보완방안 마련</div>	추가
표창	-	기존

2.2 주민_지자체_전문가_경찰의 협력형 협의체 구성

앞의 조례 개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주민을 비롯하여 지자체, 전문가, 경찰 등의 협력에 의해 추진되어야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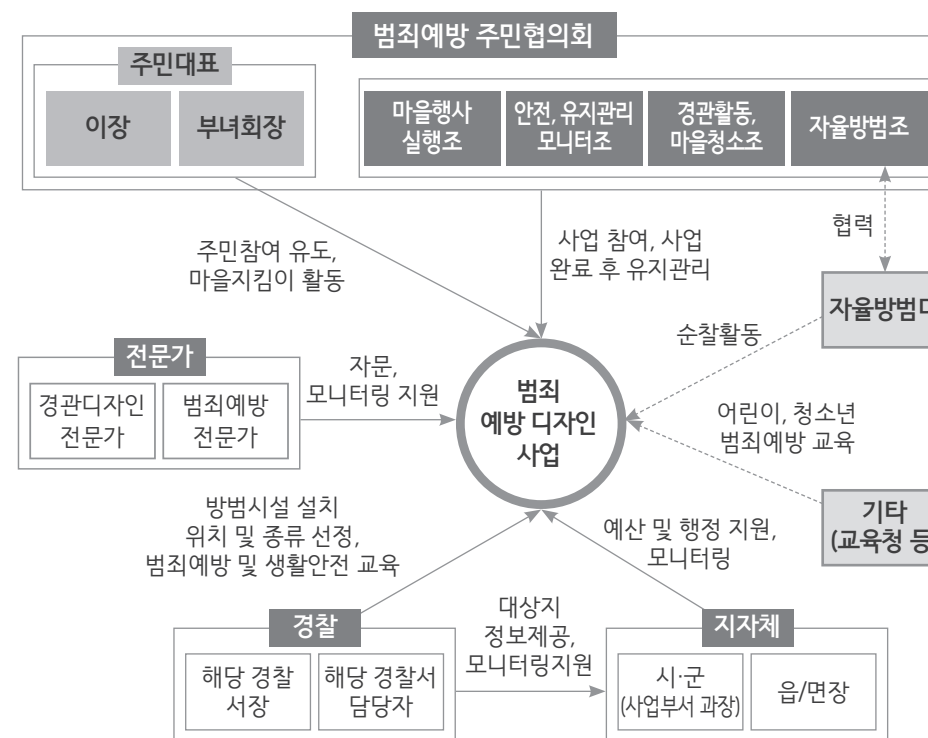
앞에서 제시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는 주민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주민협의회, 경관디자인 및 범죄예방 전문가, 해당 관할 경찰서장 및 담당자, 해당 시·군 담당 부서 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이 협력하여 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에 자율방범대나 학교가 있다면 이 또한 이해관계 주체로서 참여하도록 한다. 특히, 농촌마을의 경우 주민들 간 폭력범죄나 외국인에 의한 두려움 등 범죄양상이 관에서 H/W사업으로만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의 참여에 의한 사업 추진방식이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우선, 범죄예방 주민협의회의 주민대표인 이장과 부녀회장이 리더로서, 주민들이 사업구상단계부터 계획, 추진, 유지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마을지킴이”로서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의 안전을 돌보고 범죄신고 등 마을의 범죄예방을 위한 총괄 역할을 하도록 한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의 담당부서 과장, 그리고 해당 마을 읍장 또는 면장이 협의체 구성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 분석 및 사업 공모신청, 사업선정 후 예산과 행정 지원, 사업 모니터링 등 사업구상단계부터 사업완료 후까지 지원한다.

해당 마을 관할 경찰서장 및 담당 경찰 역시 사업 대상지의 범죄 현황 정보제공, 모니터링 시 지원 등 지자체와 협력하고, 사업추진 시 방법시설 설치 수요 분석 및 위치 선정 등의 지원을 한다. 또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범죄의식 향상에 도움을 주도록 한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후에 있어서 전문가가 지원하도록 한다. 전문가는 경관디자인 및 범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사업구상단계에서는 대상지 진단, 필요한 사업내용 제시,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한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자문,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사업내용 실행 점검, 사업완료 후에는 모니터링 및 교육을 지원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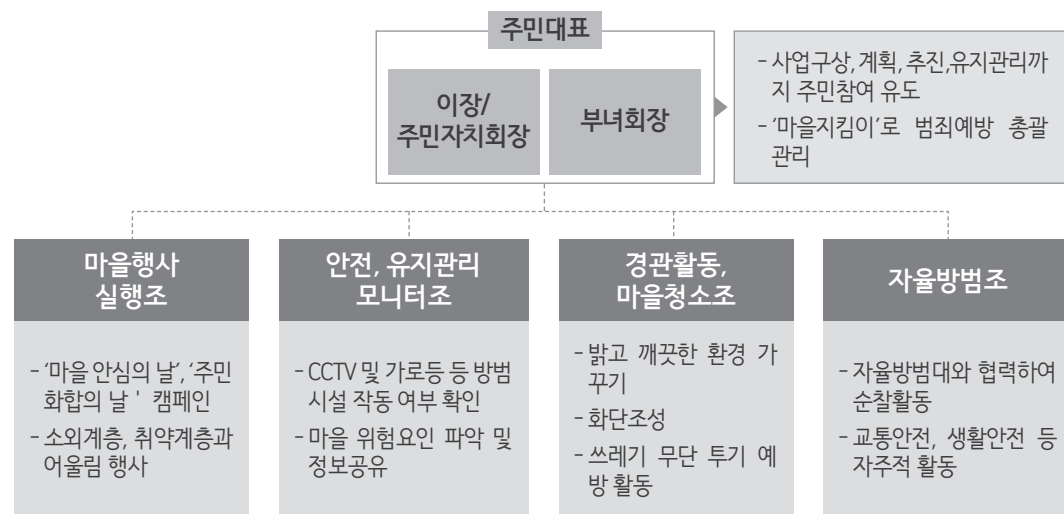
▲ [그림 5-6]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마을은 주민참여 및 주민의지를 토대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을 그동안의 조사와 분석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농촌마을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법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의 H/W사업은 물론, 주민들 간 또는 주민과 외국인 간의 친목도모와 마을 경관활동, 안전관리 등을 통해 폭력,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계획, 추진 과정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도 할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 사업 추진 및 유지관리를 통해 소속감과 애착심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에, 주민대표를 중심으로 마을의 현안 및 인구에 맞도록 조를 구성하여 각 조별 역할을 부여하도록 한다. 마을행사 실행조, 안전 및 유지관리 모니터조, 경관활동 및 마을청소조, 자율방범조의 4가지를 제안한다.

우선 마을행사 실행조는 주민, 외국인,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등 마을주민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마을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및 공동체를 강화하여 범죄두려움을 저감시키고 폭력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농촌마을의 경우 고령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어 가로등이 상시 꺼져 있어도 해결방법을 몰라 방치해놓는 경우도 있다. 이에, 안전 및 유지관리 모니터조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마을내 방법시설 관리 및 마을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공유, 해결하도록 하여 어두운 환경을 밝게 조성하도록 한다. 경관활동 및 마을청소조는 마을을 깨끗하게 조성하기 위해 화단을 조성하거나 쓰레기 분리수거 등 마을 경관활동을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의 절도범죄나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마을내 경찰 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활동 및 교통안전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조 등으로 구성하여 H/W와 S/W가 함께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5-7]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주민협의회

2.3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1) 사업방향

농촌지역은 범죄발생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지 않다. 지금까지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 및 사업 대상은 범죄발생률에 근거하여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소외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는 도시지역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인구대비 범죄발생률로 본다면 농촌지역에서 역시 범죄발생률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농촌지역에서도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범죄가 발생된 곳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정책과 사업 수혜 형평성 차원에서도 농촌지역에 역시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 및 사업 추진 기준 또는 내용과는 차별화되는, 즉 도시지역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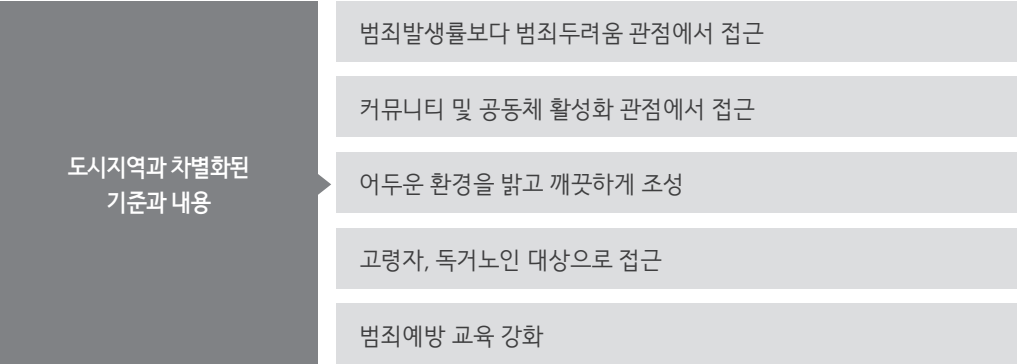
도시지역과 차별화 된 기준과 내용으로 우선 농촌지역은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은 어두운 환경, 외국인 증가에 따른 범죄두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크다. 이에, 그동안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접근이 아니라, 범죄발생률을 고려하되 범죄두려움 관점에서 접근하여 범죄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과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함으로 접근해야 한다.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 상 암수사건이 많은 가운데 폭력범죄가 많고, 도시지역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을 고려하여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법시설 설치에 의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 역시 중요하나, 주민들 간 우발적인 폭력, 외국인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두려움 등을 친밀감 강화로서 예방하는 것이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효과적이다.

농촌지역은 농작물 피해나 눈부심, 유지관리 부족 등의 원인으로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범죄발생 유발은 물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조명의 조도를 조절하여 마을을 밝게 하여 항상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깨끗하고 밝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책임의식과 애착심을 부여해야 한다. 즉, CPTED의 기본원리 중 “공동체 강화”의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를 뒷받침하면서 범죄유발 억제 및 범죄두려움을 낮추기 위한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고령자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심각하며 고령자 대상 범죄 피해는 도시지역보다 높다. 범죄 방어능력이 낮은 고령자 비율이 높은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에 따른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독거노인 역시 고려해야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주거지가 산재해 있어 독거노인의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에 대한 대응 역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지역에서는 범죄예방 교육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농촌지역 인구구성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들은 대부분 범죄에 대해 무감각하다. 이는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곳에 대한 익숙함에서 오는 것이겠지만, 귀농귀촌인 및 외국인 증가, 여가활동 및 관광 확대, 교통편의 등 지역여건은 변하고 있으며 범죄방식 역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범죄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그림 5-8]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접근방향

2) 대상지 선정 기준

그동안 조사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충남의 농촌마을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농촌지역의 경우 별도의 기준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대상지 선정 기준은 15개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필수 요소과 고려해야 할 요소로 구분하였다. 필수 요소는 농촌지역에서 범죄두려움 및 범죄발생을 유발함으로써 주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서 범죄 발생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고려해야 할 요소는 범죄발생률 및 범죄발생 추이, 해당 마을의 인구구성 및 공간특성에 해당되는 내용들로 농촌지역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대상지 선정 시 지역에 따라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

▼ [표 5-2]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선정 기준

구분	필수 요소	고려해야 할 요소
주민의 범죄두려움	●	
고령자 비율	●	
외국인 비율	●	
어두운 환경	●	
주민의지(사업참여도, 유지관리 방안)	●	
방법시설 설치 부족	●	
독거노인 비율	●	
취약계층(한부모, 미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율	●	
112 신고 건수		●
범죄발생 추이		●
인구당 범죄발생률		●
귀농(어)귀촌인 비율		●
유동인구 비율(관광객, 주변 지역 등)		●
경찰서, 지구대 등 치안서비스		●
응급시설, 병원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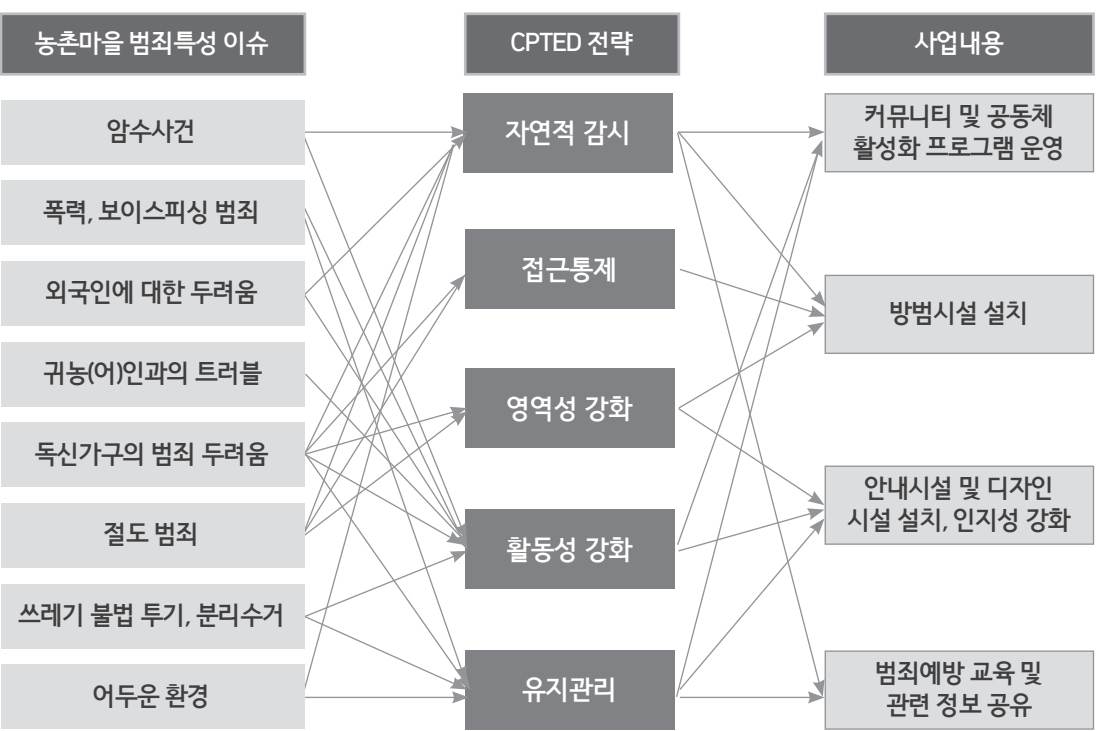
3) 사업내용 및 방식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지의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제점 및 현안 사항과 연동하여 사업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의 범죄특성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를 CPTED 전략에서 살펴봄으로써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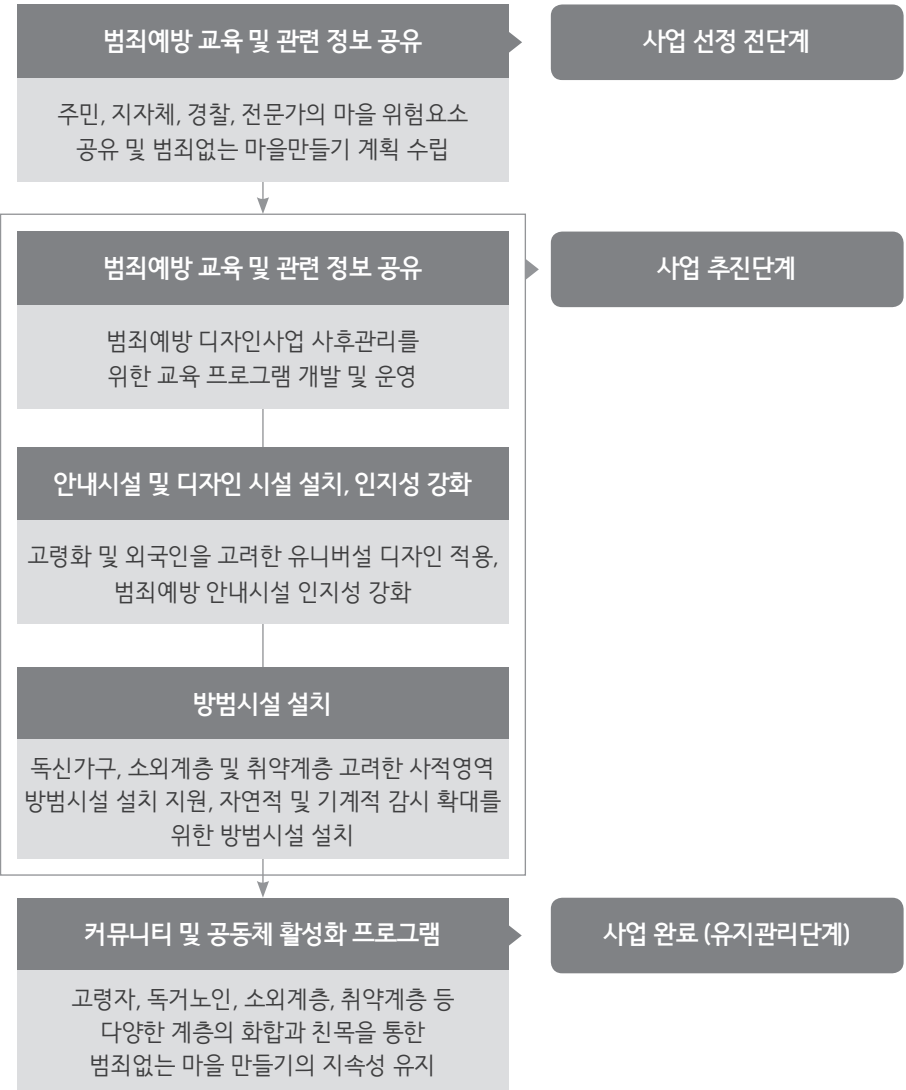
농촌마을의 범죄특성으로서 암수사건이 많다는 것, 폭력 및 보이스피싱 범죄,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귀농(어)인과의 트러블, 독신가구의 범죄 두려움, 절도 범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분리수거, 어두운 환경의 8가지를 이슈화 하였다. 이에 대한 CPTED 전략과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친밀성 밀도가 높아 암수사건이 많은 농촌마을에서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 조성
- ② 폭력 및 보이스피싱 범죄는 활동성 강화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들 간 정보 공유
- ③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적 감시의 방법시설 설치와 함께 활동성 강화의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류
- ④ 귀농(어)인과의 트러블은 활동성 강화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류
- ⑤ 독신가구의 범죄 두려움은 자연적 감시의 방법시설 설치와 함께 개인 사유지에 방범창 및 시건 장치 등 보안설비, 영역성 강화의 준 사적영역에 디자인 개념 적용, 활동성 강화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류, 유지관리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
- ⑥ 절도 범죄는 자연적 감시 및 접근 통제 방법시설 설치와 이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로 인지성 강화
- ⑦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분리수거는 활동성 강화의 쓰레기 분리시설과 안내 표지판 설치, 유지관리의 범죄예방 교육 추진으로 꾸준한 관리
- ⑧ 어두운 환경은 자연적 감시의 방법시설 설치와 함께 유지관리의 범죄예방 교육에 의한 꾸준한 관리



▲ [그림 5-9] 충남 농촌마을 범죄특성별 CPTED 전략 및 사업내용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우선 범죄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공유로서, 주민들의 범죄의식 향상과 다양한 계층(소외계층, 취약계층, 외국인 등) 간 친목도모를 내용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대상지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반영하는 계획을 구체화 및 주민들 간 공유함으로써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은 교육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습득한 내용들을 토대로 주민들이 사후관리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을 제시한 것이다. 안내시설 및 디자인 시설 설치/인지성 강화는 마을의 경관개선, 고령자 및 외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내용이다. 또한 방범시설 설치에 CCTV 및 조명, 비상벨 및 반사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공적영역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적영역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비상벨의 경우 주거지 내 설치하여 마을의 이장이나 부녀회장 등 마을지킴이로 임명된 대표들에게 연락이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그림 5-10]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사업내용 및 추진단계

▼ [표 5-3]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제안

대분류	세부내용	사업 선정 전단계	사업일환
범죄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공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 합동 현장답사 프로그램	●	
	범죄없는 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	
	신고, 순찰 등 방범활동 프로그램		●
	사기 및 절도, 강도 등 범죄예방 프로그램		●
	마을 안전지도 또는 위험요소 발굴 지도 작성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 합동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		●
	마을 안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
	방범시설 작동법 교육 프로그램		●
	예쁜 마을 가꾸기 프로그램 : 소액사업으로 진행		●
	준 사적영역(주택 진입부)에 영역성 강화(바닥패턴 교체 등 디자인 적용)		●
안내시설 및 디자인 시설 설치, 인지성 강화	마을 입구 및 주 지점에 범죄예방 안내 표지판 설치(마을지킴이 안내 등) : 고령자 고려한 표지판 글자 크기 및 색채 고려(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마을 안 경관가꾸기(화단조성, 쌈지공원 등)		●
	마을 주요시설을 범죄예방 활동 거점 활용을 위한 시설물 설치		●
	충남경찰청의 “우리마을 차량 스티커” 디자인 개선(인지성, 시인성 강화) : 경운기 등 농기계 야간 시인성 확보 및 농작물 절도 예방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 : 외국인도 인지할 수 있게 유니버설디자인 적용(환경그래픽 활용)		●
	노후된 벽면, 담장 개선 : 농촌경관과 조화로운 디자인 적용(과도한 색채 지양)		●

▼ [표 5-3]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제안

대분류	세부내용	사업일환	사후관리
방법시설 설치	개인 사유지 및 주변에 방법창(망), 가로등 및 방법등 등 방법시설 설치 : 독신가구(독거노인), 소외계층, 취약계층 대상(평가 후 선정)	●	
	로고젝터 설치 : 범죄예방 사업 추진 대상지임을 알려 안심감 부여	●	
	마을 안길에 조명 및 가로등 설치(조도 조정) : 농작물 피해, 눈부심으로 수면에 피해 가지 않도록 설치, 주 연령층 및 주 활동지 고려하여 계획	●	
	마을 주요 목지점에 CCTV 설치 : 민원발생 수, 교통사고, 사건사고 등 행정 민원 발생과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	●	
	공동창고 등에 블랙박스 설치 : 농수산물 절도가 많이 발생하는 주요지점에 설치	●	
	비상벨/안심벨 설치 : 독신가구(독거노인), 소외계층, 취약계층 주거지 내 설치, 마을지킴이에게 연락 연동	●	
	반사경 설치	●	
	위험도로 난간(가드레일) 설치	●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 안심의 날” 캠페인 : 범죄예방 추진협의회 합동 순찰(마을 위험요소 파악, 방법시설 작동 여부 파악 등)	●	●
	“주민 화합의 날” 캠페인 : 외국인, 귀농(어)인, 독거노인 등 주민 모두의 친목도모	●	●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 프로그램 : 외국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 교류	●	●
	예쁜 마을 가꾸기 : 지속적인 마을청소 및 경관활동	●	●
	마을 공동텃밭 가꾸기 : 공공자산의 나대지 등을 공동 텃밭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
	범죄없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실천 : 수립된 계획의 실천		●

4) 사업 추진절차

주민 인터뷰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민들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의지가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곳에 지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15개 시·군과 해당 시·군 읍, 면, 동에 사업공고 문서를 시달하여 주민의지가 있고 사업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 시·군 및 읍·면, 주민들은 해당 관할 경찰서, 전문가의 협조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예비협의체”를 구성한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예비협의체”는 사업계획 수립 전단계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대상지 현황에 맞는 범죄없는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 사업선정되기 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충남도 건축도시과 경관디자인팀에서 운영하는 “디자인 아카데미”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범죄없는 마을만들기 계획에는 대상지의 문제점과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안내시설 및 디자인 시설 설치, 방법시설 설치 등에 대한 내용과 유지관리 계획도 포함하여 작성한다.

충남도 경관디자인팀에서는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사업 대상지로 선정 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 발대식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가 합동 컨설팅을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디자인 심의를 진행하고, 사업 준공 후에도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화 된 “범죄예방 주민협의회”가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협의체”와 충남도 경관디자인팀에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 마을에 표창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표창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한다.



▲ [그림 5-11]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절차

VI. 결론 및 정책제언

충남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2016년부터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과 사업은 대부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농어촌지역은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충남은 도농복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의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제는 도시지역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에 대한 배려로 충남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포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충남의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기본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이론 및 문헌고찰을 통해 범죄예방의 개념 및 농촌 범죄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외 선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농촌지역에서의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범죄예방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은 물론, 경찰, 자치단체, 그 외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주체 간 협력형 문제해결 방식은 범죄예방디자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범죄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의식전환과 홍보활동, 주민들의 지역애착심 향상과 정보공유를 통한 범죄예방은 친밀성 밀도가 높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방안으로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충남지방경찰청 및 지방경찰서 담당자 6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충남 3곳의 농촌마을 주민 17명 및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담당자 3명 대상 인터뷰조사, 충남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사례지 2곳의 실태조사를 통해 충남 농촌마을의 범죄 특성과 범죄예방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충남 농촌마을은 심각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신체적 및 심리적으로 방어능력이 저하된 고령자를 고려한 범죄예방 디자인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반증하듯 농촌마을 범죄특성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수산물 및 농기계 절도와 노인들 간 폭력범죄가 많으며, 특히 폭력범죄는 주민과 관광객, 외국인들 간 다툼 등 다양한 주체들 간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농촌지역의 친밀성 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지역사회에 유입이 점차 증가함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역시 심각해지고 있으며, 어두운 환경은 농촌마을의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은 방법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범죄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충남 농촌마을에서의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충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범죄발생률을 근거로 한 사업 선정과 내용은 도시지역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할 수 있다. 고령화, 어두운 환경 및 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즉 도시지역과는 차별화 된 선정기준과 내용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범죄발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범죄두려움 저감 측면에서 접근,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농촌 주요 주거계층 고려, 범죄에 취약한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도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강화,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 주민_경찰_전문가_지자체_자율방범대 등 참여주체 확대와 협력체계 구축, 정책과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커뮤니티 활성화의 6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충남의 농촌마을 범죄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 방향으로서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방향에 따른 추진과제로서 조례 개선과 이를 통해 참여주체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현재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충남도 및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6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까지 포괄하기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충남도 조례는 물론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 역시 요구된다. 또한 주민, 지자체, 전문가, 경찰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형 협의체의 주체별 역할을 조례에서 규정함으로써 농촌마을에서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의 실행과 주민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지역의 범죄위험요소는 물론 해결방안 도출, 지속적인 사업 효과를 위해 무엇보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유지관리, 즉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충남에서 추진해왔던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방식은 관이 주도하는 top-down 방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관은 물론 경찰,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주체가 협력하여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여 실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지역과 차별화 된 기준과 내용의 충남 농촌형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충남 농촌마을에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상지 선정기준으로서 필수 요소와 고려해야 할 요소의 15항목을 제시하여, 농촌마을에서 다양하게 범죄발생 및 두려움 유발이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암수사건, 폭력 및 보이스피싱범죄,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 귀농(어)인과의 트러블, 독신가구의 범죄두려움, 절도범죄,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분리수거, 어두운 환경의 8가지 농촌마을의 범죄특성 이슈를 토대로 CPTED전략에서 살펴보고 사업내용을 제시하였다. 사업내용으로는 범죄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공유, 안내시설과 디자인 시설 설치 및 인지성 강화, 방범시설 설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의 4가지 대분류로 제시하였으며, 각 대분류에 따른 총 30개 세부사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매년 충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개편을 통해 도시지역에 집중된 것을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충남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그동안 추진하지 않았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농촌마을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범죄피해자의 특성, 특히 주민들이 느끼는 범죄두려움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연구는 최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서도 범죄는 발생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범죄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다.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범죄발생이 적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도외시 할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범죄예방 디자인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들의 개선 및 추진이 요구된다.

■ 참고 문헌

1.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6), 도농복합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14), 주민주도형 안심마을 조성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운영지침 연구

3. 공주시(2017), 공주시 신관동 매산동길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료

4.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14), 안심마을사업 주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5. 국민안전처(2016),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 모니터링 연구

6. 김현중·이성우(2011), 한국 농촌의 범죄다발지역과 범죄발생의 결정요인 분석, 농촌사회 제21집 2호

7. 농촌진흥청(2018),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

8. 대구경북연구원(2014),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기초연구

9. 박진희·황용섭·박성룡(2014), 주거환경 취약구역에서의 제3세대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전략

10. 박혜진(2018), CPTED 기본원리 영역 재구성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신성식(2013), 농작물 절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권 4호

12. 심재현(2016), 2040년 충청남도 시군 인구추계와 정책과제, 충남연구원 충남리포트 제225호

13. 오수민(2018),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CPTED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조문정(2016), 안전한 전통마을 조성을 위한 CPTED 적용방안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충남연구원(2013), 과소화·고령화에 대응한 한계마을정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16. 충남연구원 공공디자인센터(2017),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17. 충남연구원(2017), 충남 자연마을과 행정리 연구 : 마을 현재 이야기, 「충남 정책지도」

18. 충남연구원(2019), 충남 취약계층 노인의 공간적 분포, 「충남 정책지도」

19. 충남지방경찰청(2012),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내부자료

20. 충남지방경찰청(2015),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내부자료

21. 충남지방경찰청(2018), 노인 안전 종합 치안대책 내부자료

22. 충남지방경찰청(2019), 2016~2018 경찰서별 외국인 5대 범죄현황

23. 충남지방경찰청(2019), 2016~2018 00군/00군/00군 행정리단위 범죄현황

24. 충남지방경찰청(2019), 2016~2018 시·군별 외국인 5대 범죄현황

25. 충남지방경찰청(2019), 60세 이상 노인피해자 5대 범죄현황

26. 허경미(2011), 농촌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농촌범죄와 도시범죄의 비교, 한국경찰연구 제10권 제1호

27. 한국행정연구원(2014a), 생활안전제고를 위한 지역안전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28. 한국행정연구원(2014b), 안심마을 시범사업 분석평가 및 중장기 확산 방안 연구

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9), 농촌지역의 농작물, 가축, 그리고 농기계의 절도피해실태 및 대처방안에 대한 연구

30.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4), 셉테드(CPTED) 이론과 실무

31.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2016

32. 통계청, 빈집의 종류 및 건축연도별 주택-시군구

33. SPARC(2019), RURAL CRIME STRATEGY 2019-2022

부 록

1. 경찰 대상 워크숍 내용

• 2019. 10. 18, 충남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충남지방경찰청 2인 외 공주, 보령, 홍성, 부여 경찰서 각 1인 총 6인

1) 범죄양상

- 농촌은 나대지, 공폐가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거의 없음
- 농촌에서의 범죄 신고는 많지가 않음. 알려지는게 싫고, 이웃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해서 암수사건이 많음
- 안내판 설치는 마을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마을안 위치 확인 안내판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음. 농촌에는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므로 위치확인 안내판은 의미가 없음
- 주택 주변 접근 통제를 위한 담장 설치의 필요하긴 하나, 개인 사유재산에 공공재원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범죄예방 조례 개정 시 규정 필요)
-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조명 및 가로등 설치가 제일 중요함. 또한 이를 설치하는 위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함
- 비상벨은 어두운 곳에 설치하면 범죄발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쉼터 등 밝은 공간에 조성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추진 시 추진협의체 구성이 꼭 필요함. 추진협의체는 마을이장 또는 부녀회장, 면장, 면사무소 계장, 전문가(학교), 지자체 담당자, 경찰, 자율방범대로 구성하고, 여기에서 순찰활동을 포함한 사업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함. 각 주체별 역할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관광지 또는 읍, 면 소재지와 근접, 공장 밀집, 공폐가 많은 곳 등은 범죄발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음
- 농촌주민들은 범죄발생에 무감각함
- 적외선 경보기는 일회성으로 지속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4년 전에 시행하고 중지했음

- 농촌지역의 절도범죄는 타 지역 사람이 대부분임. 특용작물의 금전적 가치가 높아 이에 대한 범죄가 많이 발생함
- 현재 자율방범대가 각 지역 자율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농촌지역에서는 귀농인사고의 트러블이 많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자율순찰보다는 경찰과 주민 간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자치대를 발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임
- 사업추진 시 주민대상 교육을 운영할 때 홍보용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우산 등)
- 범죄예방 사업 유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좋을 듯함
- 농촌지역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경로당에 찾아가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음
- 범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의식 전환을 위해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운영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임
-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범죄발생률이 높지 않음. 다만 범죄두려움이 큼
- 농촌지역은 실질적으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어둡기 때문에 범죄두려움이나 범죄불안감이 큼
-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도 신고를 하지 않음.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명에 대한 범죄 신고가 아니라 동일인에 대한 신고의 경우가 많음
- 저녁 7시나 8시가 되면 불이 다 꺼지므로, 그에 대한 두려움이 큼
- 취약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복지정책 혜택(지역공동체 협약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취약계층 사각지대 복지 해소방안)
- 농촌형 범죄는 빈집털이와 특용작물 절도범죄가 많음

2) 지역별 범죄양상

범죄의 정확한 통계는 없고,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말할 수 밖에 없음

<부여군>

- 수확철에 절도(들건이) 범죄가 많이 일어남. 창고털이가 많이 일어남

<보령시>

- 대부분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농산물 절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축(개) 절도도 일어나고 있음

- 노인학대(18건 발생, 나이드신 분이 더 나이드신 분을 학대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

<홍성군>

- 농촌지역이 많은데 신고율이 높지 않음. 암수사건이 많음. 농촌지역이지만 큰 도로가 많고 가로등이 없어 무단횡단 등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남.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발생함. 어르신들이 교통법규에 대해 인식이 저조함

- 복지사각지대 노인 발굴하기(홍성소방서, 한국전력공사, 우체국, 경찰서, 군청)를 했었음. 소방서, 우체국, 군청이 가장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할 수 있음.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거나 소외계층인데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음

<공주시>

- 다문화가정이 많지만 폭력범죄가 많지는 않음. 3년전에는 700세대가 넘었고, 약 60~70%가 신관동에 살고 있고 나머지가 시골에 살고 있음. 대부분이 조부모 밑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혼자 사는 애들이 많은데 거의 방치수준임. 계룡시의 경우 정신질환자 신고가 많음

- 농촌지역에서는 사건이 일어나면 크게 남

- 농촌지역의 경우 동네사람들끼리 서로 알기 때문에 사건은 일어나지는 않지만,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찾아가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범죄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음

- 인삼, 깻잎 등 특용작물 절도는 외지인들이 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3) 지역별 추진정책

<부여군>

- 인구가 많은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부여에서는 소외지역 대상으로 마을에서 100만원, 주민이 200만원을 부담하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마을 주요시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CCTV 작동법을 익히지 못해 새벽에 이장한테 연락을 해서 새벽에라도 직접 가서 작동을 해야 하는 상황임

- CCTV가 범죄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며, 신고가 가장 많은 경우 66건 정도임. 마을 주출입구는 관제형 CCTV를, 마을안길에는 저비용의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음

<보령시>

- 치안센터가 없는 어촌 섬을 대상으로 이장이나 부녀회장을 도서지킴이로 임명하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홍성군>

- 일주일에 몇 번씩 경로당을 방문하여 사전에 범죄예방 정보를 제공하거나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 야광지팡이 등을 나눠주고 있음

<서천군>

- 농촌지역이라고 하면 노인범죄를 다룰 필요가 있음. 노인대상으로 포커스를 맞춰도 될 듯함. 60세 이상 노인 대상 5대 범죄중 50%가 절도, 30%가 폭력(노인들간 폭력, 시비, 다툼), 보이스피싱 등으로 볼 수 있음. 절도예방적 측면에서의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4) 사업내용

- 범죄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은 CCTV이며, 누구나 원하는 것은 CCTV나 가로등임. CCTV는 농촌지역의 잠재적 범죄자 예방에 효과적임. 도시지역은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지르지만, 농촌지역에서의 CCTV는 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농촌지역에 특화된 시설물을 한다면 마을 주출입구는 관제형을, 마을 안에는 저비용의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고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가 필요함. CCTV나 스마트가로등 설치를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모르면 효과 없음. 표식할 필요가 있음. 도시보다 더 큰 안내표식이 필요함. 주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은 창고가 많은데 블랙박스 등이 필요함
- 특용작물 절도범죄 예방이 필요함
- 농촌마을 사람들은 범죄에 대해 무감각하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2.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담당자 인터뷰 조사 내용

• 2019. 11. 18. 13:00 ~ 15:00, 충남도청
• 충남도청 건축도시과 김유진 주무관

1) 각 지자체에서 사업 추진 시 어려움

-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응모한 지역 주민을 만나면 참여의지는 강하지만,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어서 어느 위치에 무엇을 하면 좋은지 알려주면 사업계획 수립의 용이는 물론 사업의 효과 역시 더욱 커질 것 같은데, 막연하게 “위험하다”는 얘기만 함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은 무엇보다 주민참여가 중요하며,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이전에 각 지자체에서 사전에 주민대상 교육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심사기준의 적절성

- 대상지 선정 시 범죄발생률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음
- 하지만 2020년도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홍성군 남산마을의 경우 범죄발생은 없으나 외국인 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주민들 범죄두려움이 높고 주민의지 또한 높아 이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좋아 선정되었음. 즉, 주민의지와 유지관리방안을 높이 평가하였고 앞으로도 심사 시 이를 중요시하고자 함
-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심사 시 중요하게 평가할 계획임

3) 경찰과 협력

- 사업 대상지 선정 시 경찰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CCTV나 비상벨 등 방범시설 설치 시 반드시 경찰과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하므로)
- 경찰측은 방범시설 설치를 중심으로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곳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되 경관 및 환경개선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반적인 지역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4) 향후 사업 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 주민참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도에서 주민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사전에 지자체에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주민교육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으나 확인이 어려운 상황임. 주민교육이 가장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역시 매우 중요함. 사업완료 후 효과가 있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함(범죄율이 줄어든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측면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예를 들어 사업 일환으로 화단을 조성한 후 관리방안 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함
- 사업비가 부족하여 CCTV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단순한 사업내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H/W사업도 중요하지만 S/W사업도 매우 중요하며, 특히 농촌지역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시·군 담당자의 의지 역시 중요함. 시·군에서는 이 사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 신청률이 높지 않는 상황이며 신청을 독려하고 있음. 특히, 시·군 디자인 담당자들은 옥외광고물 업무가 많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 업무까지 담당할 여력이 안되고 있음
- 개인 사유지에 대한 방법시설(방범창, 방범망 등) 설치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지만 범죄예방 효과는 크다고 들었음. 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차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조심스러움
- 사업내용에서 방법시설 설치와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 모두 중요하며, 방법시설 설치를 20%, 디자인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80% 비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는 범죄발생률이 높은 곳을 선정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자 함(사후관리방안). 로고젝터나 CCTV 등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방안을 중요시 할 계획임
-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시군에서도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자체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이나 추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차원에서 만족도 조사는 현재 준공 시 하고 있음. 만족도 조사결과는 좋게 나오고 있지만, 사업완료 후 몇 년 후 경찰과 협력해서 설문조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함. 현재 조사는 인지도, 기여도, 참여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하고 있음

5) 농촌마을에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의 필요성

- 당연히 필요함. 범죄발생률보다 범죄두려움을 예방할 필요는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는 범죄발생률에 근거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 홍성군의 경우 범죄발생은 없었지만 선정된 이유 중 하나는 마을이 매우 깨끗하여 주민들이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성과 의지가 반영되었음
- 사업 예산이 한정적이고 부족하므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어 농촌지역을 많이 지원할 수는 없지만 추후에는 농촌지역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019. 11. 11. 10:00 ~ 12:00, 공주시청

• 공주시 도시정책과 김진섭 주무관

I. 범죄발생 현황

1) 농촌마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 농촌마을에서도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들은 적 있음. 하지만 범죄발생 통계량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농촌지역은 암수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웠음
- 농촌지역에는 절도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주거지가 산재해 있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임
- 농촌마을에서 폭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2)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

- 최근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범죄는 일어나지 않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는 증가하고 있음

II. 범죄예방사업 실태

1) 사업비의 적정성

- 2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의 적정성은 대상지에 따라 다름

2) 사업내용의 적정성

- 안심벨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안심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 홍보성 사업이라는 측면도 있음
- 사업내용들 중 안심벨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아이템이 있음
- 벽화의 경우 부정적이지만 동네의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에는 효과가 있음. 벽화는 쉽게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3)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대상지를 선정할 때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음
- 현장을 가보면 범죄발생의 원인을 알 수 있음
- 보통 막다른 골목이 형성되어 있고, 학생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거나, 상가 인접지역의 경우 범죄발생이 많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 시 이를 고려하고 있음

4) 심사기준의 적절성

- 사업추진 시 경찰과 협력은 많이 하고 있음
- 관련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 중심으로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현장에 와서 설명까지 해줘서 도움이 많이 됨

5) 경찰서와의 협력

- 경찰의 경우 범죄예방을 위한 방법시설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다름
- 경찰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편이 사업 효과는 좋음(주민 신청서를 받거나 평가 등은 경찰서에서 많이 해주고 있음)

- 타겟하드닝 기법을 적용할 때 경찰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함. 타겟하드닝은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음
- 본 사업은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에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호 장점을 살려서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음
- 디자인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지만, 타겟하드닝은 반영구적이므로 상호 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함

6)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

-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위험한 곳도 알려주지만, 막상 쓰레기 처리장 같은 시설물은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자신의 주택 주변에 설치하는 것을 꺼려함.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쉽지는 않음
- 본 사업은 특히 주민의견을 많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음. 담당자나 용역사, 경찰들이 모르는 위험요소가 있으며,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음
- 공주시의 경우 조례에서 범죄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 범위내에서 방법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주시 자체적으로 구성된 위험성 지표를 신청자가 작성 및 제출하여 이를 평가 후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사업계획서를 대상지에 맞게 작성해줄 수 있는 용역사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움. 용역비는 사업비의 10% 정도 책정하고 있음(범죄예방 사업의 경우 사유지에 대한 승인, 심의 등 해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

7) 사업의 개선방향

- 대상지를 선정할 때 현장을 충분히 점검한 후 선정할 필요가 있음. 사업 대상지 선정이 가장 중요함. 사전 점검이 충분한 상태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야 함
- 추진기간은 항상 짧음. 설계 계약 약 1달, 설계기간 3개월 정도, 공사계약 1달, 공사 3개월, 심의 및 현장점검 등 행정절차가 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1년 정도 소요됨

- 사업추진 경험상 사업비의 80%를 디자인 및 환경개선, 20% 정도를 방법시설 설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8) 농촌마을에 범죄예방 사업의 필요성

- 도시형 범죄예방과 다른 타입의 사업 제안이 필요함. 카테고리가 달라져야 함
-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낮에 절도범죄 발생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 범죄발생이 통계적으로 분명한 것이 아닌 암수사건이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무엇을 근거로 대상지로 선정할 것인지가 문제임. 수많은 행정리 마을들 중 무엇을 기준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됨.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을 하게 되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경우 단독주택에 타겟하드닝을 적용하면 쉽게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 같음. 하지만 거실창, 창문 등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임. 공주 매산동길의 경우 460세대에 지원하여 6천만원 정도 소요됐음
- 농촌마을의 경우 특히 주민교육이 중요함
- 중심지는 아니지만 상가가 형성되어 있거나, 관광객들이 빈번하게 드나드는 곳은 범죄 발생률이 높을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2019. 11. 18. 10:00 ~ 11:30, 아산시청

• 아산시 건축과 권남영 주무관

I. 범죄발생 현황

1) 농촌마을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 농산물 및 기계 등에 대한 절도범죄가 많다고 알고 있음

2)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

- 둔포 열싸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의 경우, 원룸이 많고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이 많아 사업 신청한 곳이며, 의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음
- 외국인 범죄는 주로 폭력범죄가 많으며, 이는 도심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음

II. 범죄예방사업 실태

1) 사업비의 적정성

- 사업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단체장이 범죄예방에 관심이 많아 시범사업비 외에도 시비를 수립하여 소액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사업내용의 적정성

- 대상지 특성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고자 함.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의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면서 유흥가인데 해당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거주민들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음

- 사유재산(가스배관, 원룸 창문에 방범창)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 하지 못했음. 사유재산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은 사유지에 게시판 설치하거나 반사경을 설치한 정도이며, 방범창 등에 대한 내용은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필요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 충남도 시범사업 외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범죄예방 사업 대상지 역시 방범시설 설치 중심으로 도심지 위주로 진행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을 선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터미널, 역 주변, 원룸촌,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유흥가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4) 심사기준의 적절성

- 심사 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효과 등 실시설계단계의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에 부담이 있음
- 경관위원들 중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가 있어 사업추진 시 자문을 구하고 있음

5) 경찰서와의 협력

- 경찰은 범죄예방이 본연의 업무 중 하나이므로 적극적이며, 자료공유, 방범시설 설치 시 위치 및 종류 등에 대해 협조해주고 있음
- 경찰측에서 먼저 방범시설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사업요청을 하고 있음

6) 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

-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움. 주민참여가 되어 의식 개선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 사업임

-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는데 반응은 좋았고, 주민을 찾아가서 워크숍을 진행하긴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극소수임
- 원룸촌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는 타 지역에 살고 있고 세입자만 살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주민참여가 가장 중요함
-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이 많이 소요됨

7) 사업의 개선방향

- 주민참여를 유도하기에 사업기간이 짧음. 1년에 마무리 된 경우가 거의 없음
- 1년 반~2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음

8) 농촌마을에 범죄예방 사업의 필요성

- 농촌마을 대상 사업 계획은 있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만,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실질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농촌지역의 경우 범위를 확대하거나 주민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내용도 있지만 방법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사업비 역시 많이 상승될 것이라 생각함
- 도시지역과 다른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음. 도시지역은 기능적인 것으로도 효과가 나오지만, 농촌지역은 기능적인 측면보다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대상지 선정방식이나 평가도 도시지역과 차별화되게 해야 함. 농촌지역에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음. S/W 중심으로 해야 하므로 대상지 선정 방식이나 사업내용이 도시지역과 차별화되어야 할 것임
- 농촌지역의 경우 넓은 지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

3. 농촌마을 주민 인터뷰 조사 내용

- 2019. 11. 14. 15:00 ~ 17:00, 00군 00면 00리 마을회관
- 00군 00면 00리 이장, 어촌계장, 부녀회 등 주민 5명

1. 마을 현황

1) 마을 인구, 귀농(어)인 / 고령자 / 독거노인 / 유동인구 비율

- 120세대 정도가 살고 있으며, 이 중 약 반 정도가 고령자, 약 1/5 정도가 독거노인, 약 1/3 정도가 외국인임
- 귀어인은 2019년 기준 6명 정도이며, 아직까지 귀어인들과의 트러블은 없음
- 여름철에 타 지역에서 오징어잡이 배, 낚시 관광객 등 유동인구 많음(1년에 100만명)
- 멸치공장, 가공공장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주민들도 있음

2) 행정서비스(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및 파출소 등의 접근성)

- 면사무소는 약 8km 떨어져 있으나, 해경, 육경, 119소방서가 근접해 있어 치안서비스는 매우 좋은편임

3) 안전장치 현황

- 마을내 CCTV가 6개 있으나,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 필요 시 볼 수 없어 불편함

II. 위험한 요소 현황

1) 마을내에서 위험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곳

- 도둑은 거의 없고, 방파제에 난간이 없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사고가 많이 일어남 (실족사)
- 해변가에 가로등이 4개 밖에 없어 어둡고 무서움. 가로등 설치 요구를 하면 토지 소유주가 눈부심 등을 원인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 밤에 어둡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 않음.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음. 특히 주택이 산재해 있어 더욱 어둡고 무섭다고 느낌
- 특히 여름에 타 지역에서 어업으로 많이 와서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나, 특별히 낚시객들이 많아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음
- 어업을 하는 경우 새벽 2, 3시쯤에 나가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너무 어두움

2) 나대지 및 공폐가에 의한 위험함이나 두려움

-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어두워서 무서움

3)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

- 어부들 중 약 70%가 외국인들이며, 외국인이 많아 밤에 두려움을 많이 느낌
- 실질적으로 범죄는 일어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므로 외국인들을 보면 무서움을 느낌
- 의사소통이 안되어 무서운 것도 있음

4) 절도

- 경매하기 위해 밤에 수협 창고에 갖다 놓은 것을 복면을 쓰고 절도하는 사례 발생함(수산물 절도)

5) 주민들 간 또는 관광객과의 다툼, 시비

- 주민과 관광객과의 시비, 다툼이 있음. 관광객들(캠핑)의 쓰레기 무단 투기, 양식장 해산물 절도 등에 의한 다툼이 있음

6) 보이스피싱 피해

- 지속적으로 피해는 발생하고 있음

7) 경찰서에서 위험이나 두려움 예방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

- 이장들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자주 진행하고 있으나,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하고 있지 않음.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음
- 마을방송이 각 집마다 나오고 있으므로 교육일정에 대한 알림은 충분히 가능함. OO경찰서에서도 각 집마다 홍보방송이 가능하므로, 교육일정을 알리고 마을회관 등에서 교육이 가능함

8)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이 가장 필요함
- 독거노인은 특별히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가로등 설치를 통해 마을을 밝게 해주었으면 좋겠음
- 경관조성(공원 및 꽃밭 등)은 두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음.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관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음
- 주민들이 사전에 마을의 위험한 곳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CCTV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됨. CCTV를 위험지역에 설치하였으면 좋겠음. 현재 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으나 교육을 통해 마을에서 직접 관리하면 좋겠음
- 비상 시 이장이나 어촌계장 등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대응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음

• 2019. 11. 21. 13:00 ~ 14:30, 00군 00면 000센터

• 00군 00면 00리 이장, 추진위원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주민 5명

1. 마을 현황

1) 마을 인구, 귀농(어)인 / 고령자 / 독거노인 / 유동인구 비율

- 00리는 00마을과 00마을로 되어 있으며, 00마을은 면소재지 중심 마을로 인구 420명 정도, 00마을은 367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음
- 귀농인은 00마을 3~4가구 정도, 00마을 역시 3~4가구 정도임
- 인구의 약 60% 정도가 고령자이며, 이 중 독거노인은 약 10% 정도로 여성 독거노인이 많음
- 인구의 약 15%가 외국인이며, 주로 타 지역에서 일을 하고 거주만 하는 경우가 많음
- 유동인구로는 서산, 예산, 홍성 타 지역에서 시장을 이용하러 많이 오고 있음

2) 행정서비스(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및 파출소 등의 접근성)

- 면사무소나 경찰서가 있어 치안서비스는 좋음
- 하지만 00마을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에서 떨어져 있음

3) 안전장치 현황

- 주길목에 CCTV는 설치되어 있으나, 마을 안쪽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마을 안쪽에는 가로등도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어둡고 불안함
- 가로등도 밝게 켜져 있어야 하는데 관리가 되지 않아 꺼져 있는 것도 있음

II. 위험한 요소 현황

1) 마을내에서 위험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곳

- 골목길 안에는 어두워서 피해다니게 됨
- 공동묘지 쪽에는 주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지나다니기 무서움
- 침침하고 어두운 곳이 학생들이 주로 담배를 피우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음

2) 나대지 및 공폐가에 의한 위험함이나 두려움

- 폐가 앞으로는 어두워서 잘 다니지 않게 됨
- 나대지나 공가 앞을 지나갈 때에 무서움을 느끼지는 않지만, 짐승이 있을 때에는 무서움

3)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

- 외국인 범죄발생은 없지만 외국인이 많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음
- 마을 주민들이 저녁이나 밤에 산책 시 외국인들이 많아서 무섭다고 함

4) 절도

- 옷이 없어지거나 돈이나 저금통장이 없어지는 등 경미한 절도는 있었음
- 쌀, 콩 등 농작물이나 농기계 절도에 대한 얘기도 간혹 들음
- 절도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얘기를 하지 않음

5) 주민들 간 또는 관광객과의 다툼, 시비

- 주변 관광지를 거쳐가는 곳으로 관광객이 많기는 하지만 머무르는 경우는 없어 관광객들과 부

- 닳히는 일이 없음
- 주민들 간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일이므로 노출이 안될 수도 있음
- 5일장이 활성화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아 범죄발생이 있을 수도 있음

6) 보이스피싱 피해

- 그동안 마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음
- 전화를 받고 놀란 적은 있음

7) 경찰서에서 위험이나 두려움 예방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

- 단체장들 회의에서 공지하고는 있음
- 예전에는 경찰이 순찰을 했지만 최근에는 없음

8)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 골목길 등 마을 안쪽 어두운 곳을 밝게 하기 위한 가로등이나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농작물 재배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가로등 설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나, 주민과 협의해서 산책로는 밝게 할 필요가 있음
- 나대지의 경우 개인소유의 토지가 많으므로 공공공간으로 조성하기가 쉽지는 않음
- 벽화는 마을 안쪽을 밝게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마을 주민들 정서적 차원에서도 좋다고 생각함
- 마을방송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범죄예방 교육을 이장들이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2019. 11. 21. 15:30 ~ 17:30, 00군 00읍 00리노인회관
• 00군 00읍 00리 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 등 7명

1. 마을 현황

1) 마을 인구, 귀농(어)인 / 고령자 / 독거노인 / 유동인구 비율

- 빈민촌이었던 곳에 대학교 3개를 유치하면서 학생들 민박, 하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점차 신축 오피스텔이 생기면서 원주민들이 운영하던 곳은 쪽방촌이 되었고 외국인들이 몰리게 되어 지금은 외국인들 위주로 원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임
- 거주민은 600명이며, 이중 외국인이 약 300명 정도로 외국인이 반 정도를 차지함
- 고령자는 약 100명 정도, 독거노인은 18명으로 여성이 많음
- 농업인이 10% 미만이며 주민은 임대업을 주로 하고 있음
- 유동인구로 볼 수 있는 대학생이 약 1000명 정도임

2) 행정서비스(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및 파출소 등의 접근성)

- 지구대가 2km 이내, 경찰서가 1km 이내에 있어 치안서비스는 좋은편임

3) 안전장치 현황

- 마을회관 앞에 CCTV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나, 마을이 전반적으로 어둡고 주민들과 학생들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CCTV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함
- 가로등도 별로 없어 밤에 어둡고 후미집

II. 위험한 요소 현황

1) 마을내에서 위험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곳

- 골목길이 어두워서 위험과 두려움을 느낌
-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낌

2) 나대지 및 공폐가에 의한 위험함이나 두려움

- 원주민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학생이나 외국인들은 두려워함

3)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

- 실질적으로 외국인 범죄는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인이 마을 인구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범죄두려움은 항상 느끼고 있음. 특히, 외국인들이 밤에 음주했을 때 두려움을 많이 느낌
- 하지만 불법체류자가 많아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 않지만 밤에 외국인들끼리 폭력은 가끔 있음
- 외국인에 대한 범죄두려움은 항상 갖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없어지면 생계가 곤란해지므로, 같이 공생해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어 외국인들과 인사정도는 하고 있으며, 병원에 같이 가 주는 등 돌봄도 해주고 있음
- 외국인들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고, 종량제봉투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 문제가 큼
- 외국인들끼리 야시장을 열기도 하는데 불법체류자가 많아 음침한 곳에서 하고 있어 마을 전체를 밝게 조성하여 외국인들도 밝은 곳에서 생활하게 해주고 싶음

4) 절도

- 빨래가 없어지는 등의 경미한 절도는 있음

5) 주민들 간 또는 관광객과의 다툼, 시비

- 외국인들끼리 다툼이 있는데 이를 접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고, 외국인들도 마을 주민이므로 다툼이 있을 시 중재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함

6) 보이스피싱 피해

- 그동안 마을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들어본 적은 없음

7) 경찰서에서 위험이나 두려움 예방을 위해 하고 있는 정책

- 지구대에 요청하여 마을 노인들 20~30명 대상으로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음
- 지구대에서 순찰을 해주고 있으며, 강화 요청하여 하루에 3번 정도 순찰을 해주고 있음

8)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 CCTV의 방법시설 설치가 가장 중요함. 가로등이나 벽화, 쓰레기 관리 등을 통해 어두운 곳을 밝게 하는 것이 필요함. 깨끗하고 밝으면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겠다 는 심리가 들 것이라 생각함
- CCTV를 설치하면 이를 의식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있음
-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 있는 줄 몰랐음. 여기저기 문의한 끝에 군 담당과를 소개받게 되었음.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 범죄예방 교육은 정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이나 학생들이 많아서 방범활동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음
- 마을이 밝고 깨끗해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민들끼리 정기적으로 마을청소를 실시하고 있음. 노인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마을청소를 하고 있음

4. 「공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법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에서 방법시설 설치 지원 대상 평가 지표

[별 표]

위험성 등 평가 지표						
NO.	성 명					
대분류	5점 척도					점수
범죄발생 빈도 (신고건수)	1	2	3	4	5	
	10년에 1회	5년에 1회	3년에 1회	1년에 1회	1년에 1회 이상	
강력범죄 발생 (5대범죄)	1	2	3	4	5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범죄에 따른 재해 (피해정도)	1	2	3	4	5	
	영향 없음	경미한 영향 (단순 절도, 1백만원 이하)	보통 (경미한 상해, 5백만원 미만 등)	중대재해 (상해,5백만원 이상 손해 등)	중대재해 (사망, 성폭력 등)	
소득수준	1	2	3	4	5	
	중위소득층 이상	중위소득층 ²⁹⁾	차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침입위험도	1	2	3	4	5	
	전혀 위험하지 않음	위험하지 않음	보통	위험	매우위험	
인구학적 요소	1	2	3	4	5	
	3인 가구 이상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	독거노인, 지체장애인	
주택노후도	1	2	3	4	5	
	5년 이하	5 ~ 10년	10 ~ 15년	15년 ~ 20년	20년 이상 주택	
주택 유형	1	2	3	4	5	
	침입이 매우 어려운 유형(신축 아파트, 주상복합 등)	침입이 어려운 유형(아파트, 주상 복합 등)	보통 (연립주택 등)	침입이 용이한 유형 (원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	침입이 매우 용이한 유형(단독주택, 다세 대, 원룸 등의 1,2층)	
감시시설 유무	1	2	3	4	5	
	감시시설 有 (경비원 있음)	감시시설 有 (CCTV 있음)	감시가능 여부 보통	CCTV가 있으나 사 각지역 등	감시시설 無	
범죄유발시설과의 거리 (유흥시설, 터미널, 학교, 다중이용 시설 등)	1	2	3	4	5	
	5Km 이하	4Km 이하	3Km 이하	2Km 이하	1Km 이하	
야간 밝기	1	2	3	4	5	
	매우 밝음	밝음 (가로등 인근 지역, 적동 조도 등)	보통 (가로등이 있으나 조도가 낮은 지역)	어두움 (가로등 조도가 낮 거나 거리가 먼지역)	매우 어두움 (가로등 없음)	
핫스팟(Hot Spot)	1	2	3	4	5	
	범죄다발지역과 매우 멀	범죄다발지역과 거리가 있음	보통	범죄다발지역 인접	범죄다발지역	
합 계						

29) 통계청 중위소득계층 참고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연구성과

2019년

- 고령화사회의 대응을 위한 충청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연구
-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2018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컨설팅 발전방안
- 충청남도 디자인사업 연계 추진방안
- 충청남도 관광지 안내표지판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7년

- 충청남도 문화재 표지판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농촌경관협정 추진방안
- 충청남도 해안경관 실태 및 관련계획 분석

2016년

- 충청남도 농촌주거환경 개선방안
- 충청남도 여성친화도시 공공디자인사업 발전방안
-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방안

2015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사업 사후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 충청남도 경관심의 개선 및 운영방안
- 충청남도 홍보매체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4년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통합기본계획
- 충청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 시스템 개발 연구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미래발전계획
- 충청남도 건축물 색채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공사장 가림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 충청남도 경관 ·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연구진

연구책임

박혜은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오병찬 책임연구원
김성희 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허경미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내부 심의위원

송두범 수석연구위원
이충훈 수석연구위원
박근오 책임연구원

외부 자문위원

강 욱 교수(경찰대학교)
박미랑 교수(한남대학교)
방재성 부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
조성수 경정(충남지방경찰청)
문승구 경위(충남지방경찰청)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

윤영산 과장(건축도시과)
박 신 팀장(공공건축팀)
김중현 주무관(공공건축팀)
박노성 주무관(공공건축팀)

충청남도 농촌마을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방안

인쇄·발행 2020년 2월

발행인 윤 황

발행처 충남연구원

연구기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인쇄처 삼성애드피아

· 본 보고서의 판권소유는 충청남도와 충남연구원에 있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의 서면동의가 없이는 복제나 전제를 불가함

주최 및
협력기관

